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강혜규·안수란·이정은·하태정·이주민  
김보영·김용득·김은정·양난주

**【책임연구자】**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조정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하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주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은정 부경대학교 교수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제2장 사회서비스 사업의 특성 분석 .....	13
제1절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업 현황 .....	13
제2절 사회서비스사업의 특성 분석 .....	22
제3장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	95
제1절 배경 .....	95
제2절 장애인서비스 지형 .....	99
제3절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	102
제4절 전망 .....	123
제4장 아동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	127
제1절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진단 .....	127
제2절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향 .....	148

---

제5장 노인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	153
제1절 노인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진단 .....	153
제2절 노인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향 .....	166
제3절 노인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운영 개편 과제 .....	173
 제6장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정립 방향 .....	 183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로의 개념적 정의와 범위 규정 .....	184
제2절 사회서비스 10년의 평가 .....	191
제3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	194
제4절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개혁의 한계 .....	211
제5절 소결 .....	215
 참고문헌 .....	 217

## 표 목차

<표 2-1-1>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	22
<표 2-1-2>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	24
<표 2-1-3>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	25
<표 2-1-4> 최종 수요자의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	27
<표 2-1-5>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 .....	28
<표 2-2-1>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	30
<표 2-2-2>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	31
<표 2-2-3>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준 .....	32
<표 2-2-4> 생애주기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	42
<표 2-2-5> 생애주기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 산) 기준 .....	43
<표 2-2-6> 생애주기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준 ..	44
<표 2-2-7> 생애주기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	49
<표 2-2-8> 생애주기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	50
<표 2-2-9> 생애주기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준 .....	51
<표 2-2-10> 기능별 예산지원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	59
<표 2-2-11> 기능별 예산지원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	61
<표 2-2-12> 기능별 예산지원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준 .....	63
<표 2-2-13> 기능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	71
<표 2-2-14> 기능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	73
<표 2-2-15> 기능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준 .....	75
<표 2-2-16> 최종급여형태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 준 .....	88
<표 2-2-17> 최종급여형태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	90
<표 2-2-18> 최종급여형태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 준 .....	92

<표 2-2-19> 부처별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99
<표 2-2-20> 부처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100
<표 2-2-21> 부처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101
<표 2-2-22> 부처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102
<표 3-3-1> 성인지적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의 다양한 유형 .....	113
<표 4-1-1> 전체 아동인구 대비 저소득 아동인구 비중 .....	137
<표 4-1-2> 요보호 아동 조치 연도별 추이 .....	138
<표 4-1-3> 아동연령대별 장애 특성 .....	139
<표 4-1-4>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현황(보육제외) .....	142
<표 4-1-5>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보육부문 .....	144
<표 4-1-6> 아동 연령별 사회서비스 .....	145
<표 4-1-7> 전 연령 아동대상 사회서비스 .....	146
<표 4-1-8> 취약아동대상 사회서비스 .....	147
<표 4-1-9> 장애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	147
<표 4-1-10> 저소득층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	149
<표 4-1-11> 아동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현황(중앙-지방 정부) .....	150
<표 4-1-12> 보육서비스 공급체계 현황(중앙-지방 정부) .....	151
<표 4-1-1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대상 서비스의 예(서울, 부산, 경기도) .....	153
<표 4-1-14> 0~5세 아동서비스 욕구수준과 이용률 .....	154
<표 4-1-15> 6~18세 아동서비스 욕구수준과 이용률 I .....	155
<표 4-1-16> 6~17세 아동서비스 욕구수준과 이용률 II .....	155
<표 5-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와 인정자 추이(2008-2016) .....	170
<표 5-2-1> 노인복지시설 분류의 변천 .....	175
<표 5-2-2>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비교 .....	176
<표 5-3-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추진체계 .....	184
<표 6-2-1>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 영역 .....	198
<표 6-4-1> 2000년 이후 주요 전달체계 개편 흐름 .....	203
<표 6-4-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연간 확대 현황 .....	215
<표 6-4-3>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개편모형 비교 .....	218

## 그림 목차

[그림 3-3-1]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훈련시설이 역할 .....	119
---	-----

[그림 4-1-1]	연령별 인구수(연령대별, 각 연령별) .....	136
[그림 4-1-2]	(중앙정부)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예산 (2017) .....	152
[그림 5-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자격별 신청자 추이 .....	171
[그림 5-1-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대비 인정자 비율 .....	172
[그림 5-1-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별 인정자 비율 .....	173
[그림 5-2-1]	연령통합적 생애과정모델 .....	175
[그림 6-2-1]	서로 다른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제도적 범주(남찬섭, 2012: 89) .....	194
[그림 6-5-1]	사회서비스 확대와 전달체계 개혁의 한계 .....	222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2000년대 중반, 사회투자국가의 중요 정책 기제로 부각되면서 핵심적인 복지 분야 사회서비스가 다수 제도화되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도 확산
- 2007년 도입된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혁신서비스 등은 각각 성장정착되어 사회서비스의 핵심 제도로 자리하며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기여
- 전통적 복지서비스와는 다른 이용자 지원-전자바우처 방식, 유사시장 기제를 반영한 개방적 사업운영으로, 이용자와 서비스사업자에게 각각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을 뿐더러, 제도 운영상의 다양한 쟁점이 부상
  - 서비스의 사회적 제도화,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하던 기존 정책 이슈와는 다른 차원의 쟁점 생산
  - 이용자에게는, 사회적 서비스 경험과 함께 이용계층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서비스 구매시스템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의 제한, 소비자로서의 인식에 기반한 권리성, 서비스 품질에 대한 민감도 제고
  - 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사업 아이템들의 선택과 이용자 확대가 가능해졌으나, 다양한 재정원천의 관리와 수익성을 고려한 기관 운영이 병행되면서, 기존 비영리사업 중심 운영 원리와의 혼돈 초래
- 사회서비스 제도 운영 10년을 지나는 올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의 과제 제시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공무원 및 방문건강 관리 수행 간호직 확충 등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복지전달체계 혁신
- 또한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할 다수의 과제 포함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과제19),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과제20), 사회적경제 활성화(과제26), 장애인 지원 강화(과제42), 치매국가책임제(과제43),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과제44),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과제46),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과제4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제49),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회안전망 강화-보호필요아동 지원(과제53), 한부모가족 자립-다문화가족 지원-취약가족 지원(과제65),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과제67), 생활체육환경 조성(과제72) 등
- 새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와 일자리가 명시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상-하위의 목표들은 유기적인 관계로 연계되어, 다층적인 접근과 고려, 제도 개선이 병행될 필요
- 사회서비스는 이용자, 공급자(서비스 기관), 제공자(서비스 인력)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3자의 관계는 때로 상충될 수 있으므로, 최상의 균형지점을 찾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

이용자	공급자 (서비스 기관)	제공자 (서비스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만큼 이용</li> <li>• 다양한 서비스 선택지</li> <li>• 합리적 비용 부담</li> <li>• 신뢰도 높은 서비스(투명성, 공정성)</li> <li>• 서비스-정보 접근성(편의성, 통합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수요</li> <li>• 합리적 수익 구조(영리/비영리)</li> <li>• 적절한 규제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업무범위/규정</li> <li>• 필요역량 유지</li> <li>• 안전한 근무환경</li> <li>• 적정 급여수준 보장</li> <li>• 고용의 안정성 확보</li> </ul>

- 우리의 사회서비스 제도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부문별 복지사업의 성숙과정에서,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서비스의 연속성, 제도간 정합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발전 역사를 경험
  - 또한 소관 부처 및 지자체 별로 제도를 확충하면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보장의 정책기제 미흡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난 10년의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과정에서 서비스 품질관리의 중요성,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여건 마련, 서비스 품질제고와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쟁점 존재
  - 서비스의 통합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제도 재편, 부처간 유사-편중-누락 제도 점검·조정 필요
  - 서비스 제도화가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출현
  -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제도 보완 필요
  - 서비스 및 일자리의 질을 견인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 기제와 전달체계 부재(고용안정성, 안전한 근무환경, 적절한 처우)
  - 공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부문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미흡(이용자의 신뢰 향상을 위한 정책 보강 필요)
- 사회서비스는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며, 국가별·시대별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수준에 따라 상이한 개념을 활용
  -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해보자면,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보장의 주요 기제로서, 소득보장과는 달리 시장형성이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의 생산기반(시설, 인력)의 구성과 관리운영이 정책적으로 중요
    - 시장이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생산되는 서비스는 구매력을 보전하는 정책 가능
      - 예) 아동인지-장기요양 등 초기 사회서비스정책, 학교교육, 주택, 의료

- 그러나 수익성이 적은(부가가치 창출 적은, 인건비 비중이 큰, 수요규모 작은-구매력 낮은)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공급기반 마련과 이용 지원 동시에 필요
- 개인간, 지역간 형평성과 일정수준(quality) 유지가 필요한(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정책 필요

○ 현행 사회서비스 정책을 사회보장기본법에 제시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근거로 할 때, 광의의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추진체계 구성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평생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기제로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의 두 축을 제시한 바, 이를 근간으로 사회서비스보장을 위한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
  -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즉, 사회서비스의 기획-설계-제도운영-공급을 담당하는 범부처·지자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구축을 준비할 필요

#### □ 연구 목적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사회서비스 사업의 실태 진단, 서비스 사업을 아우르는 발전 패러다임과 전략, 장단기 과제 제시
  - 생애주기 및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현황, 특성과 문제구조를 종합적으

로 분석

- 사회서비스사업의 보장성 및 제도간 정합성, 포괄성 진단
-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통합성, 형평성, 공공성 진단
- 사회서비스 관리체계 및 전달체계 개선안 제언

#### □ 기대 효과

-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하고, 그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단기-중장기적으로 실현할 과제 제안을 통해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국가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에 활용할 기초 자료 마련
- 「사회서비스 발전전략」 수립 및 「범부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 기본계획('18~'22)」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 □ 사회서비스 사업의 기초 실태 파악

- 중앙정부 사회서비스사업의 특성 분석
  - ※ 사회보장사업 DB 활용 및 서비스사업 조사 실시
    - 소득보장사업-서비스사업의 분류, 사회서비스 유형화
      - 사회서비스의 주요 기능: 아동돌봄-성인돌봄-보호안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 등, 예방-치료-재활·자립 등
    - 서비스사업 현황
      - 부처별 현황, 대상 특성(생애주기별소득계층별), 서비스(급여) 내용, 예산 지원 및 급여형태, 예산지출수준, 지원 규모, 전달체계, 제공기관, 종사인력 등
-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해외사례 검토

－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사업의 구성 등

○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문제구조 (종합) 분석

－ 이용자-사업기관-제공인력의 각 차원 및 관계성 측면

－ 중앙정부(유관부처)-지자체-민간의 각 차원 및 관계성 측면

－ 생애주기별 사업 구성 측면

※ 사회서비스보장체계 구축 과정 검토, 소득보장체계와의 특성 비교

□ 사회서비스 대상·욕구유형별 보장성 분석

※ 대상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실태조사 자료 및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  
조사 활용

○ 수요 대비 공급 규모, 인구 대비 보장 규모, 욕구 대비 보장 수준

○ 선정기준, 본인부담 실태 등

□ 사회서비스 제도간 정합성(체계성), 포괄성의 진단

○ 주요 서비스 대상별(욕구범주 고려) 서비스사업의 정합성, 대상의 포괄성 및  
통합성 검토

－ 제도간 사각-누락 및 중복성, 조정 필요성 점검

－ 대안 검토

• 기존 제도 강화

• 제도간 사각 개선(유관부처 제도의 적극 활용, 전달체계상의 보강)

• 신규 서비스 도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 지역포괄보조-활용의  
확장 등 검토)

□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통합성, 형평성 진단

○ 사회서비스 사업의 운영체계-전달체계 분석

－ 중앙단위 정책 조정 및 부처협업체계: 범부처 대응의 필요성 검토



- 지역 전달체계상의 통합적 접근 방안: 사례관리체계, 의뢰체계
- 지역간 균형 발전의 필요성 도출

○ 사회서비스 주체별 역할 범위 및 사회서비스부문의 공공성 검토

-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서비스 중간관리기관, 사업기관의 역할 및 역할 관계 검토
- 국공립 운영의 비율, 규제 수준 등 공공성 관점의 진단 시도

□ 사회서비스의 관리체계 및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현황 진단

○ 사회서비스 및 사업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별 정책(지침) 파악

- 평가제도, 사업보고-감독, 위탁-진입제도, 규제수준 등

○ 사회권 실현을 위한 현행 제도 수준 분석: 이용자 존중 및 보호, 제공자 존중 및 보호 등

□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향 제언

○ 필요성, 방향성, 가치와 원칙, 패러다임과 주요 전략 제시

-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지적 대응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이슈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의 필요성
- 주요 개념 및 쟁점의 검토
- 보장체계 구축 방안

○ 정책 방안·과제 제시

- 사회서비스 보장성 및 체계성 강화를 위한 과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주체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회서비스 공급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협력 강화 방안(예, 국공립시설 확충, 공단 설립, 민간전달체계 규제·관리 강화 등)
- 사회서비스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제
  - 중앙-지자체의 통계 및 조사관리

- 지자체 성과관리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과제
  - 이용자 및 제공자 권리 존중 및 안전-보호
  - 서비스부문 종사인력의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교육 및 자격제도관련 과제

## 2. 연구 방법

### □ (자료 검토) 선행연구-정책자료-해외정책사례 검토·분석

- 사회서비스 사업을 비롯하여 노인-장애인-아동 등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한 선행연구 검토
- 주요 국가의 사회서비스보장체계 검토
  - 사회보장체계에서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의 구성 등 파악

### □ (통계자료 수집 및 조사 실시) 사회서비스 실태 조사

-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사업 실태 파악

사업목적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목적</li> <li>• 사업의 법적근거</li> <li>• 사업의 기능: 주 기능, 부가 기능</li> </ul>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대상</li> <li>• 생애주기</li> <li>• 대상 특성</li> <li>• 소득계층</li> <li>• 대상선정 기준</li> </ul>
서비스(급여) 내용 및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급여) 내용</li> <li>• 예산지원 및 급여 형태</li> <li>• 총예산액</li> <li>• 예산구성: 국비, 기금, 지방비, 민간, 기타</li> </ul>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수</li> <li>• 이용가구 수</li> <li>• 지원 기관: (시설)수</li> <li>• 지원 기관(시설)의 서비스 이용자 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사업 수</li> <li>• 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자 수</li> </ul>
사업의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관</li> <li>• 조사기관</li> <li>• 사업 관리운영기관</li> </ul>
서비스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관명</li> <li>• 제공기관 진입규제종류</li> <li>• 평가실시 여부</li> <li>• 평가실시 주체</li> <li>• 평가업무 위탁기관</li> <li>• 평가 주기</li> <li>• 제공기관 총수</li> <li>• 제공기관 구성: 국공립+민간(비영리)+민간(영리)+민간(사회적경제) 제공기관의 개소수</li> </ul>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종사자수</li> <li>• 종사자 구성: 상용종사자_정규직*상용종사자_기간제계약직+상용종사자_무기계약직+임시및일용종사자+간접고용 종사자</li> <li>•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여부</li> <li>• 종사자 교육훈련 내용</li> <li>• 종사자 자격요건</li> <li>• 전문자격 소지 종사자수</li> </ul>

○ 주요 사회서비스 사업기관 대상 서비스 실태 및 운영 현황 조사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주요 서비스사업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기관간 협력 실태, 운영상 애로사항 등 인터뷰 실시

□ (행정자료 분석) 사회서비스 사업별 정부부처 사업지침 검토 및 분석

- 사회서비스 사업의 운영체계-전달체계
- 사회서비스 주체별 역할 범위 및 사회서비스부문의 공공성 검토
- 사회서비스 및 사업운영 관리 제도
- 사회권 실현을 위한 현행 제도 수준 등

□ (의견 수렴)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현장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 기회로서 자문회의 개최

- (목적) 연구 방향 및 방법, 분석 결과 및 정책 대안에 대한 객관성, 타당성 제고

를 위한 전문가, 관계 부처 및 현장담당자의 의견 수렴

○ (참여대상)

- 학계 전문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서비스 대상 분야, 고용, 교육, 주거, 문화 등 유관분야 전문가
- 정부부처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국·과장, 복지담당공무원 등
- 유관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

제 2 장

사회서비스 사업의 특성  
분석

---



# 2

## 사회서비스 사업의 특성 분석 <

<

### 제1절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업 현황

#### 1. 사회서비스 사업 일반 현황

##### 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 생애주기별로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사업마다 상이한 생애주기를 우선 연령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고 최종적으로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전생애로 분류함. 분석에는 중분류를 중심으로 활용함<sup>1)</sup>.

□ 생애주기 중분류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사업 수를 살펴보면, 총 247개 사업이 존재함. 전생애가 82개(3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 67개(27.1%), 아동·청소년 54개(21.9%), 노인 23개(9.3%), 영유아 21개(8.5%) 순임.

○ 생애주기 세분류 기준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만 0~5세(영유아)가 총 21개 사업 중 11개로 가장 많음. 아동·청소년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 총 54개 사업 중 16개로 가장 많음. 성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 총 67개 사업 중 37개로 가장 많았음. 노인의 경우 총 23개 사업 중 만 65세 이상이 18개로 가장 많음.

□ 중분류를 통한 사업예산액<sup>2)</sup>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예산은 75조 6695억 1천 200만 원임. 이 중 전생애가 47조 930,056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63.3%의 사업

1) 사업마다 연령조건이 상이하여, 세분류로 분류하고 연령구간이 중분류에 걸쳐 있는 경우 주된 연령이 속해있는 분류체계로 포함하였음.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상으로 정의되는 연령규정이 다름에 따라 일관된 분류가 용이하지 않았음. 또한 사업 대상이 가구단위나 사업자 지원 등의 생애주기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사업들이 존재하여 별도의 분류기준 마련 및 확인이 필요함.

2) 사업예산의 경우 부정확한 예산액 기입, 사업구분 체계의 불일치에 따른 오류(세부사업별 지방비 누락, 총예산의 반복 제시 등) 등 별도의 수정작업이 필요함.

예산 비율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영유아 15,939,662백만 원(21.1%), 아동·청소년 5,917,999백만 원(7.8%), 성인 3,906,967백만 원(5.2%), 노인 1,974,828백만 원(2.6%)순으로 나타남.

&lt;표 2-1-1&gt;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단위: 개, %)

중분류	세분류	사업 수		예산액 (단위: 백만원)
영유아	신생아	3	21 (8.5)	15,939,662 (21.1)
	만0~2세(영아)	3		
	만0~5세(영유아)	11		
	만3~5세(유아)	1		
	만3~6세(유아)	2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1		
아동·청소년	만12세 이하(어린이)	7	54 (21.9)	5,917,999 (7.8)
	초등생	1		
	7~15세(초·중등)	1		
	초등4~중등3	1		
	만7~18세(초·중고)	5		
	만18세 미만	16		
	만13세~18세(중고등)	2		
	만19세 미만(아동·청소년)	9		
	만9~18세	1		
	만9~24세 이하(청소년)	9		
성인 <sup>1)</sup>	만16~24세 이하(청소년)	2	67 (27.1)	3,906,967 (5.2)
	만15세 이상	4		
	만16세 이상	5		
	대학생	1		
	만18세 이상	37		
	만19세 이상	14		
	만45세 이상	2		
	만50세 이상	1		
노인	만55세 이상	3	23 (9.3)	1,974,828 <sup>2)</sup> (2.6)
	만60세 이상	5		
	만65세 이상	18		
전 생애	전 생애	82	82 (33.2)	47,930,056 (63.3)
계			247 (100.0)	75,669,512 (100.0)

주: 1) 경제활동인구의 나이를 감안하여 만 15세 이상을 성인으로 포함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예산액 누락됨.



## 나. 기능별 사회서비스 사업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된 사회서비스의 분야 및 수단을 바탕으로 돌봄, 건강, 재활, 교육, 문화 및 안전, 고용, 주거, 재해 및 보상, 다기능으로 기능을 총 10개로 중분류하고, 세부적으로 18개로 분류함<sup>3)</sup>.

□ 기능 중분류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 수를 살펴보면, 총 247개 사업 중 돌봄이 68개(27.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고용 48개(19.4%), 건강 43개(17.4%), 주거 25개(10.1%), 교육 17개(6.9%), 보호 및 안전 14개(5.7%), 다기능 14개(5.7%), 재활 9개(3.6%), 문화 및 여가 8개(3.2%), 재해 및 보상 1개(0.4%) 순임.

○ 기능 세분류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 수를 살펴보면, 총 247개 사업 중 신체건강 기능이 36개(14.6%)로 가장 많은 사업이 존재함. 그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인건비 지원 28개(11.3%), 보호·돌봄(아동·청소년) 22개(8.9%),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0개(8.1%), 보육·양육 19개(7.7%), 교육-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17개(6.9%), 보호·돌봄(성인) 15개(6.1%), 안전 및 권익보장-위기 지원(학대, 폭력), 자립 지원 14개(5.7%), 기타 서비스-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14개(5.7%), 일상생활 지원(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12개(4.9%), 주거환경개선 10개(7.7%), 주택 지원(분양, 임대 등) 10개(7.7%), 재활 지원(장애인) 9개(3.6%), 문화 및 여가 8개(3.2%),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7개(2.8%), 주거비 지원 4개(1.6%), 주거 알선 1개(0.4%), 재해 및 보상 1개(0.4%) 순으로 나타남.

3) 기능의 경우 조사표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주기능과 부가기능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분석에는 주기능을 기준으로 활용함. 중복기능 사업의 경우, 주된 기능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여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하였음.

&lt;표 2-1-2&gt;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단위: 개, %)

중분류	세분류	사업 수 (비율)	
돌봄	보육·양육	19 (7.7)	68 (27.5)
	보호·돌봄(아동·청소년)	22 (8.9)	
	보호·돌봄(성인)	15 (6.1)	
	일상생활 지원(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12 (4.9)	
건강	신체건강	36 (14.6)	43 (17.4)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7 (2.8)	
재활	재활 지원(장애인)	9 (3.6)	9 (3.6)
교육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17 (6.9)	17 (6.9)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	8 (3.2)	8 (3.2)
보호 및 안전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학대, 폭력), 자립 지원	14 (5.7)	14 (5.7)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인건비 지원	28 (11.3)	48 (19.4)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0 (8.1)	
주거	주거환경개선	10 (7.7)	25 (10.1)
	주택 지원(분양, 임대 등)	10 (7.7)	
	주거비지원	4 (1.6)	
	주거 알선	1 (0.4)	
재해 및 보상 <sup>1)</sup>	재해 및 보상	1 (0.4)	1 (0.4)
다기능 <sup>2)</sup>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14 (5.7)	14 (5.7)
계		247 (100.0)	247 (100.0)

주: 1)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원폭지해자 지원사업"만이 재해 및 보상에 해당함. 그 밖에 보훈 및 산재 등 대상자를 위한 사업은 각각의 주거기능에 따라 분류함.

2) 드림스타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을 비롯하여 중복 기능사업 등이 다기능에 분류됨.

#### 다.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별 사회서비스 사업

□ 사회서비스 사업을 예산의 흐름과 최종 이용자가 받게 되는 급여의 형태를 결합하여 이용자 지원, 사업자 지원, 복합 지원, 기타로 총 4개의 중분류를 하고 13개로 세분류함.

□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사업 수를 살펴보면, 사업자 지원이 전체 247개 사업 중 123개(49.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율임. 그 다음으로 이용자 지원 110개(44.5%), 복합 지원 9개(3.6%), 기타 5개(2.0%) 순임.

○ 세분류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 수를 살펴보면, 사업자 지원-사업(프로그램)단위 지원이 47개(19.0%)로 가장 많은 사업 수가 존재함. 그 다음으로 이용자 지원-비용 감면 43개(17.4%), 사업자 지원-시설운영 지원 42개(17.0%), 사업자 지원-인건비 지원 27개(10.9%), 이용자 지원-바우처 22개(8.9%), 이용자 지원-물품 20개(8.1%), 이용자 지원-기회 제공 11개(4.5%), 이용자 지원-대여(대출) 9개(3.6%), 이용자 및 사업자 복합 지원 8개(3.3%), 사업자 지원-시설설비 등 지원 7개(2.8%), 이용자 지원-이용기회 5개(2.0%), 기타 5개(2.0%), 복합 1개(0.4%) 순으로 나타남.

<표 2-1-3>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단위: 개, %)

중분류	세분류	사업 수 (비율)	
이용자 지원	이용자지원-바우처	22 (8.9)	110 (44.5)
	이용자지원-대여(대출)	9 (3.6)	
	이용자지원-비용 감면	43 (17.4)	
	이용자지원-기회 제공	11 (4.5)	
	이용자지원-물품	20 (8.1)	
	이용자지원-이용기회	5 (2.0)	
사업자 지원	사업자지원-시설운영 지원	42 (17.0)	123 (49.8)

중분류	세분류	사업 수 (비율)	
	사업자지원-사업(프로그램)단위 지원	47 (19.0)	
	사업자지원-인건비 지원	27 (10.9)	
	사업자지원-시설설비 등 지원	7 (2.8)	
복합 지원	이용자 및 사업자 복합 지원	8 (3.3)	9 (3.6)
	복합	1 (0.4)	
기타 <sup>1)</sup>	기타	5 (2.0)	5 (2.0)
계		247 (100.0)	247 (100.0)

주: 1) 기타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간호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소상공인지원(융자), 임금피크제지원금,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이 해당됨.

## 라. 수요자의 최종 급여형태별 사회서비스 사업

□ 수요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형태를 인적서비스, 현물서비스, 현금, 복합 서비스,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기타로 총 7개 중분류하고, 세부적으로 15개로 분류함<sup>4)</sup>.

□ 수요자의 최종 급여형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사업 수를 살펴보면, 인적서비스가 143개(57.9%)로 가장 많은 사업이 존재함. 그 다음으로는 현물서비스 30개(12.1%), 복합서비스 23개(9.3%), 일자리 지원 20개(8.1%), 주거 지원 15개(6.1%), 현금 11개(4.5%), 기타 5개(2.0%) 순임.

○ 세분류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 수를 살펴보면, 1:1대면(방문간호 등)이 69개(27.9%)로 가장 많은 사업이 존재함. 그 다음으로 대면서비스 53개(21.5%), 유형·정형의 현물서비스(PC, 보장구 등) 26개(10.5%), 집단대면(프로그램 참여 등) 21개(8.5%),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0개(8.1%), 대면서비스 및 현물서비스

4) 최종 급여형태인 인적서비스, 현물, 현금을 제외하고 주거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의 경우 별도로 구분하였음. 다만 주택 개보수의 경우 인적서비스로 분류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에 대한 임금지원은 해당 사회서비스가 수요자에게 도달하는 급여형태에 준하여 분류함. 일자리 지원으로 분류된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한정함.

13개(5.3%), 현금 11개(4.5%), 주택 지원(분양, 임대 등) 10개(4.0%), 대면서비스 및 현금지원 8개(3.2%), 기타 5개(2.0%), 주거비 지원 4개(1.6%), 현물서비스 3개(1.2%), 대면서비스 및 현물서비스 및 현금 2개(0.8%), 무형·비정형의 현물서비스(홈페이지 등) 1개(0.4%), 주거 알선 1개(0.4%) 순으로 나타남.

<표 2-1-4> 최종 수요자의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단위: 개, %)

중분류	세분류	사업 수 (비율)	
인적서비스	대면 서비스	53 (21.5)	143 (57.9)
	1:1대면(방문간호 등)	69 (27.9)	
	집단대면(프로그램 참여 등)	21 (8.5)	
현물서비스	현물서비스	3 (1.2)	30 (12.1)
	유형·정형 현물서비스(PC, 보장구 등)	26 (10.5)	
	무형·비정형 현물서비스(홈페이지 등)	1 (0.4)	
현금	현금	11 (4.5)	11 (4.5)
복합서비스	대면서비스 및 현물서비스	13 (5.3)	23 (9.3)
	대면서비스 및 현물서비스 및 현금	2 (0.8)	
	대면서비스 및 현금	8 (3.2)	
주거 지원	주택 지원(분양, 임대 등)	10 (4.0)	15 (6.1)
	주거비 지원	4 (1.6)	
	주거 알선	1 (0.4)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0 (8.1)	20 (8.1)
기타	기타	5 (2.0)	5 (2.0)
계		247 (100.0)	247 (100.0)

### 마.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

□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총 20개로 부 15개, 청 2개, 위원회 2개, 보훈처 1개로 분류함.

□ 부처의 중분류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 수를 살펴보면, 부의 경우 총 223개(90.3%)로 가장 많은 사업 수자 존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 11개(4.5%), 보훈처 10개(4.0%), 위원회(1.2%) 순임.

○ 부처의 세분류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 94개(3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36개(14.6%), 고용노동부 25개(10.1%), 교육부 13개(5.3%), 국토교통부 13개(5.3%), 국가보훈처 10(4.0%), 산림청 10개(4.0%), 통일부 9개(3.6%), 중소벤처기업부 8개(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개(2.8%), 산업통상자원부 6개(2.4%), 문화체육관광부 4개(1.4%), 농림축산식품부 3개(1.2%), 금융위원회 2개(0.8%), 환경부 2개(0.8%), 그리고 경찰청,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는 각 1개(0.4%)로 나타남.

<표 2-1-5>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

(단위: 개, %)

중분류	세분류	사업 수 (비율)	
부	고용노동부	25 (10.1)	223 (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2.8)	
	교육부	13 (5.3)	
	국토교통부	13 (5.3)	
	기획재정부	1 (0.4)	
	농림축산식품부	3 (1.2)	
	문화체육관광부	4 (1.6)	
	보건복지부	94 (38.1)	

중분류	세분류	사업 수 (비율)	
	산업통상자원부	6 (2.4)	
	여성가족부	36 (14.6)	
	중소벤처기업부	8 (3.2)	
	통일부	9 (3.6)	
	해양수산부	1 (0.4)	
	행정안전부	1 (0.4)	
	환경부	2 (0.8)	
청	산림청	10 (4.0)	11 (4.5)
	경찰청	1 (0.4)	
위원회	금융위원회	2 (0.8)	3 (1.2)
	방송통신위원회	1 (0.4)	
보훈처	국가보훈처	10 (4.0)	10 (4.0)
계		247 (100.0)	247 (100.0)

## 제2절 사회서비스 사업의 특성 분석

## 1. 사회서비스 사업 항목별 현황

## 가.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lt;표 2-2-1&gt;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단위: 개, %)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전생애	전체
보육·양육	14 (66.7)	2 (3.7)	1 (1.5)	— (0.0)	2 (2.4)	19 (7.7)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 (0.0)	21 (38.9)	— (0.0)	— (0.0)	1 (1.2)	22 (8.9)
보호·돌봄 (성인)	— (0.0)	— (0.0)	— (0.0)	14 (60.9)	1 (1.2)	15 (6.1)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	1 (4.8)	2 (3.7)	2 (3.0)	— (0.0)	7 (8.5)	12 (4.9)
신체건강	6 (28.6)	5 (9.3)	11 (16.4)	3 (13.0)	11 (13.4)	36 (14.6)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 (0.0)	2 (3.7)	2 (3.0)	— (0.0)	3 (3.7)	7 (2.8)
재활 지원 (장애인)	— (0.0)	2 (3.7)	1 (1.5)	— (0.0)	6 (7.3)	9 (3.6)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 (0.0)	9 (16.7)	4 (6.0)	— (0.0)	4 (4.9)	17 (6.9)
문화 및 여가	— (0.0)	4 (7.4)	1 (1.5)	— (0.0)	3 (3.7)	8 (3.2)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 (0.0)	2 (3.7)	— (0.0)	3 (13.0)	9 (11.0)	14 (5.7)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 지원, 창업지원, 자활	— (0.0)	3 (5.6)	43 (64.2)	2 (8.7)	— (0.0)	48 (19.4)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 (0.0)	— (0.0)	2 (3.0)	— (0.0)	23 (28.0)	25 (10.1)
재해 및 보상	— (0.0)	— (0.0)	— (0.0)	— (0.0)	1 (1.2)	1 (0.4)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 관리, 복합지원 등	— (0.0)	2 (3.7)	— (0.0)	1 (4.3)	11 (13.4)	14 (5.7)
계	21 (100.0)	54 (100.0)	67 (100.0)	23 (100.0)	82 (100.0)	247 (100.0)



&lt;표 2-2-2&gt;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전 생애	전체
보육·양육	15,554,345 (97.6)	3,950,626 (66.8)	50,544 (1.3)	- (0.0)	1,103 (0.0)	19,556,618 (28.5)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 (0.0)	1,133,224 (19.1)	37,685 (1.0)	135,145 (6.8)	3,060 (0.0)	1,309,114 (1.7)
보호·돌봄 (성인)	5,974 (0.0)	- (0.0)	33,934 (0.9)	244,583 (12.4)	918,996 (1.9)	1,203,487 (1.6)
일상생활(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	52,341 (0.3)	71,454 (1.2)	8,610 (0.2)	- (0.0)	128,388 (0.3)	260,793 (0.3)
신체건강	422 (0.0)	40,512 (0.7)	1,106,219 (28.3)	391,029 (19.8)	32,129,678 (67.0)	33,667,860 (44.5)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 (0.0)	5,326 (0.1)	71,464 (1.8)	7,214 (0.4)	1,335 (0.0)	85,339 (0.1)
재활 지원 (장애인)	182 (0.0)	98,379 (1.7)	9,293 (0.2)	- (0.0)	2,332 (0.0)	110,186 (0.1)
교육: 학교교육, 사회 교육, 특수교육	326,398 (2.0)	340,695 (5.8)	35,141 (0.9)	- (0.0)	12,049 (0.0)	714,283 (0.9)
문화 및 여가	- (0.0)	42,139 (0.7)	4,209 (0.1)	- (0.0)	110,121 (0.2)	156,469 (0.2)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학대, 폭력), 자립 지원	- (0.0)	11,491 (0.2)	8,704 (0.2)	35,551 (1.8)	59,920 (0.1)	115,666 (0.2)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 (0.0)	60,404 (1.0)	2,488,054 (63.7)	928,183 (47.0)	965,005 (2.0)	4,441,646 (5.9)
주거: 주택지원, 주거 환경개선	- (0.0)	- (0.0)	47,054 (1.2)	1,480 (0.1)	13,470,319 (28.1)	13,518,853 (17.9)
재해 및 보상	- (0.0)	- (0.0)	5,021 (0.1)	- (0.0)	- (0.0)	5,021 (0.0)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 (0.0)	163,749 (2.8)	1,035 (0.0)	231,643 (11.7)	127,750 (0.3)	524,177 (0.7)
계	15,939,662 (100.0)	5,917,999 (100.0)	3,906,967 (100.0)	1,974,828 (100.0)	47,930,056 (100.0)	75,669,512 (100.0)

2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2-2-3>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준

	보육·양육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보호·돌봄 (성인)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재활 지원 (장애인)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해 및 보상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영유아	•공공직장 어린이집 등 운영 지원 •다문화 보육료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0-2세 보육료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어린이건강보호총합 대책 지원사업 •육아종합 지원서비스제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 관리 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만 6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 배부									

	보육·양육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보호·돌봄 (성인)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재활 지원 (장애인)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해 및 보상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장애아보육료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아동 청소년	•방과후보육료지원 •양육비이행원스톱종합서비스	•WEE 클래스 상담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매체활용능력증진 및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예방·해소사업)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학교우유 급식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장애입양 아동 의료비지원 •차상위분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립중앙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임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급식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 청소년활동 정책 진흥 사업(구 17개 시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활동지원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학대피해 아동 센터 설치 및 운영	•일반형 일자리 지원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일반형일자리와 셋트임) •취업사관학교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2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보육·양육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보호·돌봄 (성인)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재활 지원 (장애인)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해 및 보상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안전 지킴이</li> <li>•아이돌봄 서비스</li> <li>•이주배경 청소년 지원</li> <li>•장애이가족 양육지원</li> <li>•중앙가정 위탁지원 센터 운영 지원</li> <li>•중앙아동 보호전문 기관 운영</li> <li>•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운영</li> <li>•지역아동 센터 지원</li> <li>•청소년동반자프로젝트 운영</li> <li>•청소년모바일문자 상담 운영</li> <li>•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li> <li>•청소년사이버상담 센터 운영</li> <li>•청소년쉼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북학생 교육지원</li> </ul>							

	보육·양육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보호·돌봄 (성인)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재활 지원 (장애인)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해 및 보상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지원 •청소년특 별지원 •초등돌봄 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인	•미혼모·부초기 지원(권역별미혼 모부자거점기관 운영)			•민영교통 시설이용 지원(버스, 내 항여객선, 고 속철도) •취약노동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 복나눔이(가사 도우미)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료 비지원 •국가유공 자등간호수당 •국가유공 자보철구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지 원 •보조공학 기기지원 •산재근로 자합병증 등예방관 리 •생애전환 기건강진단 (만40세, 만66 세) •암검진사 업 •요양급여 (보조기)-산재 보험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산재근로자)사 회심리재 활지원 •노숙자 등알코 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발달장애 인공공 후견지원 사업	•(북한이 탈주민) 교육비 지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장애대학 생도우미 지원 •장애인운 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어르신 문화프로 그램운영		•(북한이 탈주민) 자립자 활지원 •(북한이 탈주민) 취업지원 •고용복지 플러스센 터 •공공산림 가꾸기 •국가보훈 대상자 취업능력 개발지원 •근로장려 금 •도시녹지 관리원 •명상숲코 디네이터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 휴직급여, 육아 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버팀목대 출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28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보육·양육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보호·돌봄 (성인)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재활 지원 (장애인)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해 및 보상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일반건강 검진 비 지원 •전립선 등 노인성질 환 예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 업일자리 창출사업</li> <li>•산림보호 지원단</li> <li>•산림서비 스(숲길 체험지도 사)</li> <li>•산림서비 스도우미</li> <li>•산재근로 자직업훈 련</li> <li>•산재근로 자직장복 귀지원</li> <li>•소상공인 지원(융자)</li> <li>•수목원코 디네이터</li> <li>•숲생태관 리인</li> <li>•숲해설가 운영</li> <li>•시니어 기술창업 지원</li> <li>•여성경제 활동촉 진지원 (구,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li> <li>•여성기업 종합지원 센터운영</li> <li>•여성기업 판로지원</li> <li>•여성창업</li> </ul>			

	보육·양육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보호·돌봄 (성인)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재활 지원 (장애인)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해 및 보상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피크제지원금</li> <li>•자활근로(기초, 차상위)</li> <li>•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li> <li>•장애인고용시설장비용자지원</li> <li>•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li> <li>•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운영</li> <li>•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li> <li>•장애인창업지원</li> <li>•저소득장애인및중증장애인에게영업장소제공</li> <li>•자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li> <li>•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li> </ul>			

30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보육·양육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보호·돌봄 (성인)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재활 지원 (장애인)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해 및 보상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증장애 인직업재 활 지 원 (훈련수당)</li> <li>•지역공 동 체일자리 사업</li> <li>•지역 자 활 센터 운영</li> <li>•직업능력 개발운영 (훈련수당)</li> <li>•출산육 아 기고용안 정장려금 및 대체인 력지원금</li> <li>•취약계층 전담취업 지원사업</li> <li>•취업성공 패 키 지 ( 취 업 성 공수당,참 여수당,생 계지원수 당)</li> <li>•표준 사업 장설립 지 원</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재근로 자) 케 어 센터지원</li> <li>•국가유공 자재가복 지지원</li> <li>•기타재가 급 여 ( 장 기요양보 험 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 혈 압 · 당 뇨 병 등록관리 사업</li> <li>•노인안경 진및개안 수술</li> <li>•치매치료 관리비지 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 인 보 호전문기 관)</li> <li>•노인보호 전문기관 ( 학 대 피 해노인전 용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세이 상 고령자 고용지원</li> <li>•노인일자 리 및 사 회 활 동 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li> </ul>



	보육·양육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보호·돌봄 (성인)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재활 지원 (장애인)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해 및 보상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구)</li> <li>•노인돌봄 기본서비스</li> <li>•노인돌봄 종합서비스</li> <li>•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li> <li>•독거노인 종합지원 센터운영</li> <li>•보훈요양원 이용 지원</li> <li>•시설급여</li> <li>•장기요양급여이용 지원</li> <li>•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li> <li>•재가급여</li> <li>•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경감</li> <li>•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li> </ul>				
전생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비용 지원</li> <li>•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종아동 보호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활동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li> <li>•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의료지원</li> <li>•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li> <li>•정신보건센터운영(아동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재활 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li> <li>•시각장애인음악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료면제)</li> <li>•신소외계층정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li> <li>•장애인문화·예술 지원</li> <li>•통합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li> <li>•가정폭력상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li> <li>•공공(임대)주택신재생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폭피해자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li> <li>•(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li> </ul>

3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보육·양육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보호·돌봄 (성인)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재활 지원 (장애인)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해 및 보상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사랑의그린 PC 보급 •시청각장애 인 용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 •양곡할인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구) •보통병원 진료 •암환자의료비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장애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재가암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소년정신보건사업 포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센터지원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중증장애 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척수장애 인재활훈련지원	교육 •온 라 인 정보화교육 •장 애 인 정보화교육	이용권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 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 복지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취약위기가족돌봄 지원 ( 가족역량강화 지원 ) 사업 •폭력피해 여성주거 지원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기능보강, 상담치료)		너지지원 (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공공주택공급 ( 공공분야) •공공주택공급 (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공급 •기존주택전세임대 •남북피해자 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회취약계층 실내 환경 개선사업 •서민충가시설		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노숙인등복지지원 •노후준비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웹정보접근성제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보육·양육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보호·돌봄 (성인)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재활 지원 (장애인)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해 및 보상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바우처</li> <li>•영구임대주택공급</li> <li>•장기전세주택공급</li> <li>•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고효율보일러교체지원)</li> <li>•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에너지복지)</li> <li>•주거안정월세대출</li> <li>•주거환경개선자금</li> <li>•준주택지원(융자)</li> <li>•행복주택공급</li> </ul> </li> </ul>		

## 나. 생애주기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표 2-2-4> 생애주기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단위: 개, %)

	이용자 지원 바우처	이용자 지원 대여 (대출)	이용자 지원 비용 감면	이용자 지원 기회 제공	이용자 지원 물품	이용자 지원 이용 기회	사업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젝트) 단위 지원	사업자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 지원 시설 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계
영유아	7 (33.3)	0 (0.0)	4 (19.0)	0 (0.0)	1 (4.8)	0 (0.0)	3 (14.3)	0 (0.0)	3 (14.3)	2 (9.5)	1 (4.8)	0 (0.0)	0 (0.0)	21 (100.0)
아동 청소년	7 (13.0)	0 (0.0)	6 (11.1)	0 (0.0)	3 (5.6)	1 (1.9)	13 (24.1)	17 (31.5)	5 (9.3)	0 (0.0)	2 (3.7)	0 (0.0)	0 (0.0)	54 (100.0)
성인	1 (1.5)	3 (4.5)	12 (17.9)	4 (6.0)	1 (1.5)	1 (1.5)	9 (13.4)	10 (14.9)	15 (22.4)	2 (3.0)	3 (4.5)	1 (1.5)	5 (7.5)	67 (100.0)
노인	1 (4.3)	0 (0.0)	9 (39.1)	2 (8.7)	1 (4.3)	0 (0.0)	4 (17.4)	3 (13.0)	3 (13.0)	0 (0.0)	0 (0.0)	0 (0.0)	0 (0.0)	23 (100.0)
전생애	6 (7.3)	6 (7.3)	12 (14.6)	5 (6.1)	14 (17.1)	3 (3.7)	13 (15.9)	17 (20.7)	1 (1.2)	3 (3.7)	2 (2.4)	0 (0.0)	0 (0.0)	82 (100.0)
계	22	9	43	11	20	5	42	47	27	7	8	1	5	247

&lt;표 2-2-5&gt; 생애주기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

	이용자 지원 바우처	이용자 지원 대여 (대출)	이용자 지원 비용 감면	이용자 지원 기회 제공	이용자 지원 물품	이용자 지원 이용 기회	사업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젝트) 단위 지원	사업자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 지원 시설 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계
영유아	13,947,559	-	335,401	-	422	-	30,020	-	1,621,760	4,500	-	-	-	15,939,662
	(87.5)	(0.0)	(2.1)	(0.0)	(0.0)	(0.0)	(0.2)	(0.0)	(10.2)	(0.0)	(0.0)	(0.0)	(0.0)	(100.0)
아동 청소년	4,220,136	-	32,932	-	115,692	268,181	403,406	724,686	103,286	-	-	-	49,680	5,917,999
	(71.3)	(0.0)	(0.6)	(0.0)	(2.0)	(4.5)	(6.8)	(12.2)	(1.7)	(0.0)	(0.0)	(0.0)	(0.8)	(100.0)
성인	-	-	164,318	123,846	13,789	868,928	271,495	405,493	142,726	87,938	165,574	-	1,662,860	3,906,967
	(0.0)	(0.0)	(4.2)	(3.2)	(0.4)	(22.2)	(6.9)	(10.4)	(3.7)	(2.3)	(4.2)	(0.0)	(42.6)	(100.0)
노인	357,592	-	385,373	1,480	6,066	-	20,373	161,127	1,024,108	-	18,709	-	-	1,974,828
	(18.1)	(0.0)	(19.5)	(0.1)	(0.3)	(0.0)	(1.0)	(8.2)	(51.9)	(0.0)	(0.9)	(0.0)	(0.0)	(100.0)
전생애	1,017,253	9,775,495	32,224,570	5,326	3,694,996	88,630	154,465	649,454	267,286	8,664	41,707	2,210	-	47,930,056
	(2.1)	(20.4)	(67.2)	(0.0)	(7.7)	(0.2)	(0.3)	(1.4)	(0.6)	(0.0)	(0.1)	(0.0)	(0.0)	(100.0)
계	19,542,540	9,775,495	33,142,594	130,652	3,830,965	1,225,739	879,759	1,940,760	3,159,166	101,102	225,990	2,210	1,712,540	75,669,512

<표 2-2-6> 생애주기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준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복합	복합	기타
영유아	•다문화보육 료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만0~2세 보 육료지원 사업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시간제보육 •장애아보육 료지원 •저소득층 가정거제 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 상아 등 영 유아 의료 비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 리 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 원 •의료급여수 급권자 만 6세미만 영 유아 건강 검진		•표준모자보 건수첩 제 작 배부		•공공직장어 린이집 등 운영지원 •육아종합지 원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직장어린 이집 운영 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교사근무 환경개선 비, 교사겸 직원장지 원비) •보육돌봄서 비스(어린 이집 운영 지원)보육 교직원 인 건비 •직장어린이 집 보육교 사 등 인건 비 지원	•어린이건강 보호종합 대책 지원 사업 •직장어린이 집 설치 지 원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아동 청소년	•발달재활서 비스 •방과후보육 료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아이돌봄 서비스 •언어발달지 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권 •어린이 국 가예방접 종 지원사 업 •입양가정위 탁아동 심 리치료 지 원 •장애입양아 동 의료비 지원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지 원 •청소년특별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초·중·고 학 생 교육정 보화 지원 •학교우유급 식	•급식비	•(북한이탈 주민)교육 지원 •공동육아나 눔터 운영 •국립중앙청 소년치료 재활센터 운영 •이주배경청 소년 지원 •중앙가정위 탁지원센 터 운영지 원 •중앙아동보 호전문기 관 운영 •지역 청소년 활동지원	•(특수교육 대상자)치 료지원서 비스 •WEE 클래스 상담지원 •교육복지우 선지원사업 •매체활용능 력증진 및 역기능해 소(청소년 인터넷·스 마트폰중 독예방·해 소사업) •성매매피 해청소년 치료·재활 •양육비이	•국립특수학 교 및 특수 학교 지원 •다문화·탈 북학생멘 토링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복지교 사 파견지 원사업(지 역아동센 터 지원사 업의 내역 사업) •아동안전지 킴이	•일반형 일 자리 지원 •장애인 특 화형 일자 리 제공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복합	복합	기타
							책 진흥사업(구 17개 시도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구축·운영 •청소년국제 교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모바일 문자상담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청소년활동지원 •초등돌봄교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탈북학생 교육지원					
성인	•장기복무제 대군인 취업지원	•버팀목대출 보증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제공 •주거안정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	•근로장려금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장애인창업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형급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숙자 등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미혼모·부초기지원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 •공공산림가꾸기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코디	•장애인고용시설장비용자지원 •표준사업장설립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훈련)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국가유공자 등간호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38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복합	복합	기타
		월 세 대 출 보증	능 력 개 발 지원 •난임부부시 술비지원 •민영교통시 설 이 용 지 원(버스,내 항 여객선, 고속철도) •발달장애인 공 공 후 권 지원 사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생애전환기 건강 진 단 (만 40 세, 만66세) •암검진사업 •의료급여수 급권자 일 반 건강 검 진비 지원 •중증장애인 지 원 고 용 (훈련수당) •직업능력개 발 운영(훈 련수당)	업			(권역별 미 혼 모 부 자 거 점 기 관 운영) •술 해 설 가 운영 •시니어 기 술 창 업 지 원 •여성경제활 동 촉진지 원(구, 경 력 단 절 여 성 취업지 원) •여성기업중 합 지 원 센 터운영 •장애인기업 중 합 지 원 센터운영 •지역자활센 터 운영	지원 •어르신 문 화 프 로 그 램운영 •여성기업판 로지원 •여성창업지 원 •자 활 근 로 (기초, 차 상위) •장애인운전 교육장 임 차 및 순회 교육 •전 립 선 등 노 인 성 질 환 예방관 리 •취업성공패 키지(취업 성공수당, 참여수당, 생 계 지 원 수당)	네이더 •사회적기업 일 자 리 창 출사업 •산림보호지 원단 •산림서비스 (숲길 체험 지도사) •산림서비스 도우미 •수목원코디 네이터 •숲생태관리 인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장애인고용 장려금지급 •출산육아기 고 용 안 정 장려금 및 대 체 인 력 지원금 •취약계층전 담 취 업 지 원사업 •취약농가인 력 지원(영 농도우미, 행복나눔이 (가사도우 미) 지원)		수당)		급여, 육아 기 근로사 간 단축 금 여) •소상공인지 원(용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저임금근로 자 사회보 험 료 지 원 사업(두루 누리)
노인	•노인돌봄중 합서비스		•고혈압·당 뇨병 등록 관리사업 •노인안검진 및개안수술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시설급여 •장기요양금 여이용지원	•국가유공자 재 가 복 지 지원 •재가급여	•기타재가금 여(장기요 양보험 복 지용구)		•(산재근로 자)케어센 터지원 •노인보호전 문기관(노 인 보 호 전 문기관) •노인보호전 문기관(학 대 피 해 노	•노인복지민 간 단 체 지 원 •독 거 노 인 사 회 관 계 활성화 지 원 •독거노인· 중 중 장 애 인 응급안	•60세이상고 령 자 고 용 지원 •노인돌봄기 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 동 지원사 업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복합	복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거주 시설 설치 비용 지원</li> <li>•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li> <li>•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li> <li>•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전용침터)</li> <li>•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알림서비스</li> </ul>					
전생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li> <li>•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li> <li>•에너지바우처</li> <li>•장애인활동 지원</li> <li>•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li> <li>•통합문화이용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 집 마련 다짐돌대출</li> <li>•농촌주택개량 자금 지원</li> <li>•버팀목전세자금대출</li> <li>•주거안정월세대출</li> <li>•주거환경개선자금</li> <li>•준주택지원(융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의료 지원</li> <li>•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li> <li>•도서관여객선 운임 지원</li> <li>•보훈병원진료</li> <li>•양한자의료비지원</li> <li>•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li> <li>•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li> <li>•원폭피해자 지원</li> <li>•입양속려기간 모자지원사업</li> <li>•장애 등 특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li> <li>•장애인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준비서비스</li> <li>•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li> <li>•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li> <li>•온라인 정보화교육</li> <li>•재가암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li> <li>•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li> <li>•공공주택공급(공공임대)</li> <li>•국민임대주택공급</li> <li>•기존주택전세임대</li> <li>•남북피해자 지원</li> <li>•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li> <li>•사랑의그린PC보급</li> <li>•서민층 가스시설 개선</li> <li>•시청각장애인용 방송 수신기 보급사업</li> <li>•영구임대주택공급</li> <li>•장기전세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 인보장구)</li> <li>•양곡할인</li> <li>•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지역응답센터 운영</li> <li>•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li> <li>•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li> <li>•노숙인 등 복지지원</li> <li>•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li> <li>•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li> <li>•시각장애인을 악재활동센터지원</li> <li>•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li> <li>•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지원</li> <li>•입양비용지원</li> <li>•정신보건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li> <li>•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li> <li>•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li> <li>•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li> <li>•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li> <li>•법원연계이혼위탁회복 지원</li> <li>•여성장애인 교육지원</li> <li>•웹정보접근성제고</li> <li>•장애인 정보화교육</li> <li>•장애인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 지원(구 보조금 자리 주택신재생 보급)</li> <li>•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li> <li>•저소득층에너지 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 시공 및 고효율보일러 교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 에너지복지)</li> <li>•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li> </ul>		

40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복합	복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지원</li> <li>•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공급</li> <li>•장애인보조 기구교부</li> <li>•행복주택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운영(아 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포함)</li> <li>•중독관리통 합지원센 터 운영</li> <li>•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지원</li> <li>•장애인보조 견전문훈련 기관지원</li> <li>•중도시각장 애인재활 훈련지원</li> <li>•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li> <li>•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li> <li>•취약위기가 족돌봄지 원(가족역 량강화지 원)사업</li> <li>•학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기능 모강, 상담 치료)</li> <li>•희망복지지 원단 통합 사례관리 사업</li> </ul>					

## 다. 생애주기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lt;표 2-2-7&gt; 생애주기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단위: 개, %)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 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 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 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 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 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 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계
영유아	7 (33.3)	6 (28.6)	4 (19.0)	1 (4.8)	2 (9.5)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1 (100.0)
아동 청소년	25 (46.3)	15 (27.8)	2 (3.7)	2 (3.7)	4 (7.4)	0 (0.0)	0 (0.0)	2 (3.7)	0 (0.0)	1 (1.9)	0 (0.0)	0 (0.0)	0 (0.0)	2 (3.7)	1 (1.9)	54 (100.0)
성인	4 (6.0)	13 (19.4)	9 (13.4)	0 (0.0)	5 (7.5)	1 (1.5)	7 (10.4)	4 (6.0)	1 (1.5)	6 (9.0)	0 (0.0)	0 (0.0)	0 (0.0)	16 (23.9)	1 (1.5)	67 (100.0)
노인	2 (8.7)	12 (52.2)	0 (0.0)	0 (0.0)	1 (4.3)	0 (0.0)	0 (0.0)	3 (13.0)	1 (4.3)	1 (4.3)	0 (0.0)	1 (4.3)	0 (0.0)	2 (8.7)	0 (0.0)	23 (100.0)
전생애	15 (18.3)	23 (28.0)	6 (7.3)	0 (0.0)	14 (17.1)	0 (0.0)	4 (4.9)	3 (3.7)	0 (0.0)	0 (0.0)	10 (12.2)	3 (3.7)	1 (1.2)	0 (0.0)	3 (3.7)	82 (100.0)
계	53	69	21	3	26	1	11	13	2	8	10	4	1	20	5	247

4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2-2-8> 생애주기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 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 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 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 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 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 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계
영유아	14,242,467 (89.4)	1,567,246 (9.8)	72,504 (0.5)	4,500 (0.0)	42,871 (0.3)	- (0.0)	182 (0.0)	- (0.0)	- (0.0)	- (0.0)	- (0.0)	- (0.0)	- (0.0)	9,892 (0.1)	15,939,662 (100.0)
아동 청소년	5,073,191 (85.7)	337,312 (5.7)	28,156 (0.5)	48,177 (0.8)	339,123 (5.7)	- (0.0)	2,759 (0.0)	25,097 (0.4)	- (0.0)	2,598 (0.0)	- (0.0)	- (0.0)	57,806 (1.0)	3,780 (0.1)	5,917,999 (100.0)
성인	80,157 (2.1)	265,543 (6.8)	110,365 (2.8)	- (0.0)	914,656 (23.4)	- (0.0)	1,147,771 (29.4)	85,274 (2.2)	1,035 (0.0)	44,471 (1.1)	14,915 (0.4)	- (0.0)	1,242,780 (31.8)	- (0.0)	3,906,967 (100.0)
노인	246,723 (12.5)	658,095 (33.3)	- (0.0)	- (0.0)	6,066 (0.3)	- (0.0)	- (0.0)	136,625 (6.9)	- (0.0)	- (0.0)	- (0.0)	- (0.0)	927,319 (47.0)	- (0.0)	1,974,828 (100.0)
전생애	114,590 (0.2)	33,070,927 (69.0)	165,877 (0.3)	- (0.0)	625,805 (1.3)	- (0.0)	- (0.0)	- (0.0)	- (0.0)	693,414 (1.4)	3,674,580 (7.7)	9,271,704 (19.3)	285,331 (0.6)	27,828 (0.1)	47,930,056 (100.0)
계	19,757,128	35,899,123	376,902	52,677	1,928,521	-	1,150,712	246,996	1,035	740,483	3,689,485	9,271,704	2,513,236	41,500	75,669,512

&lt;표 2-2-9&gt; 생애주기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준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보육료 지원</li> <li>만3~5세 누리과정 지원</li> <li>만0~2세 보육료 지원 사업</li> <li>시간연장 형 보육 료지원</li> <li>시간제 보육</li> <li>육아 종합 서비스 제공</li> <li>장애아 보육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숙아 및 선천 성이상아 등 영유 아 의료 비지원</li> <li>보육교직 원 인건 비 및 운 영 지원 (교사근 무 환경 개선비, 교사겸 직원장 지원비)</li> <li>보육돌 봄 서비 스(어린이 집 운영 지원) 보 육교 직원 인 건비</li> <li>신생아의 난청진 단 의료 비 지원</li> <li>의료급여 수급권 자만6 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li> <li>취학전 아동 실영예 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 장어린 집 등 운영지 원</li> <li>중소 기업 직장 어린이 집 운영 비 지원</li> <li>직장 어린이 집 교 사 등 인 건비 지 원</li> <li>직장 어린이 집 설 치 지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 건강 보호 대책 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 층 가 가 구조 제 분유 지 원</li> <li>표준 모 자 보 건 수 첩 제 작 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천 성 대 사 이 상 검 사 및 환 아 관 리 지 원</li> </ul>							
아동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 탈주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교 육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 강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학 생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육 아나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복 지우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사 관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형 일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활동지</li> </ul>

4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지원</li> <li>•WEE 클래스 담당지원</li> <li>•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li> <li>•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li> <li>•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li> <li>•매체활용 능력증진 및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해소사업)</li> <li>•방과후보육료지원</li> <li>•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li> <li>•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li> <li>•아동안전지킴이</li> <li>•이주배경 청소년 지원</li> <li>•임양가정 위탁아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 치료 지원 서비스</li> <li>•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li> <li>•발달장애 서비스</li> <li>•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내역사업)</li> <li>•아이돌봄 서비스</li> <li>•양육비 이행원조 종합 서비스</li> <li>•어린이 국가예방법 집중 지원 사업</li> <li>•언어발달 지원 사업</li> <li>•장애아 가족 양육지원</li> <li>•장애입동양아동의료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옹권</li> <li>•청소년국제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격차 해소 지원</li> <li>•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 운영</li> <li>•급식비</li> <li>•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li> <li>•학교우유급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 사업</li> <li>•청소년후아카데미 운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li> <li>•장애인특화형일자리제공</li> </ul>	원



4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탈북학생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대피해 아동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성인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고령층 정보화 교육 •장기복무재대군인취업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산재근로자합병증 등예방관리 •생애전환기간진단(만40세, 만66세) •암검진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구, 경력			•국가유공자보훈급여 •보조공학기기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저소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영소 제공	•버팀목증	•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 •근로장려금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발달장애인공공후견사업 •소상공인지원(융자) •여성창업지원	•미혼모·부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시니어기술창업지원 •여성기업판로지원 •장애인지원	•장애인종합센터 운영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북한이탈주민)교육비지원 •국가보훈대상자취업능력개발지원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코디네이터 •산림서비스(숲길체험지도사)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숲생태관리인	•민영교통시설이용지원(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청기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직원	대면 서비스 +현금직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절여성 취업 지원</li> <li>의료급여수급권자 일일 건강진단 지원</li> <li>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li> <li>장애인 운전교량 임차 및 순회교육</li> <li>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li> <li>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사업</li> <li>취약노동자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술해설가 운영</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원센터)</li> <li>독거노인 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돌봄 서비스</li> <li>노인돌봄종합 서비스</li> <li>노인보호전문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복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유공자복지 지원</li> <li>독거노인종합센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복지 민간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혈압·당뇨병 등 특관리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li> <li>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li> </ul>	

48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직원	대면 서비스 +현금직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관계 성화 지원	관 (노인 보호 전 문기관) • 노인안경 진및개안 수술 • 독거 노 인·중증 장애 인 응급 안 전 알림 서비스 • 보호요 양원 이 용지원 • 시설급여 • 장기요양 급여이용 지원 • 장애인거 주 시설 설비 임 소 이용 료지원 • 재가급여 •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경감 • 특별현 금급여 (가족요 양비)						• 치매치 료관리 비지원 사업						사업	
전생애	• (북한이 탈주민) 지역적 응센터 운영 • 가정폭 력상담 소 운영	• (북한이탈 주민)상 당지원 • (북한이탈 주민) 의료지원 • 가정폭 력·성폭	•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수 업료면 제) • 노숙인들 복지지 원		• 공공(임 대)주택 신재생 에너지 지원(구 보금자 리주택 신재생		• 에너지바 우처 • 여성장애 인출산 비용지 원 • 원폭피해 자지원	• 사회취약 계층실 내환경 개선단 개 • 취약위기 가족돌 봄지원			• 공공주택 공급(공 공분양) • 공공주택 공급(공 공임대) • 국민임대 주택공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버팀목전 세자금 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	• (북한이탈 주민) 주택알 선지원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 원 • 온라인 정보화 교육 • 웹정보접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직원	대면 서비스 +현금직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li> <li>•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li> <li>•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li> <li>•노후준비서비스</li> <li>•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li> <li>•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li> <li>•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li> <li>•실종아동보호및지원</li> <li>•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li> <li>•장애인정보화교육</li> <li>•정신보건센터 운영(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li> <li>•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li> <li>•권역재활병원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li> <li>•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li> <li>•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li> <li>•보호병원진료</li> <li>•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li> <li>•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li> <li>•양한자의료비지원</li> <li>•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li> <li>•임양비용지원</li> <li>•임양숙려기간모자지원</li> <li>•장애인보조견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li> <li>•여성장애인교육지원</li> <li>•장애인문화·예술지원</li> <li>•통합문화이용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급)</li> <li>•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li> <li>•“보험급여(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li> <li>•사랑의그린PC보급</li> <li>•사회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li> <li>•서민충가스시설개선</li> <li>•시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사업</li> <li>•양곡활인</li> <li>•장애인보조기구교부</li> <li>•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효율보일러교체지원)</li> <li>•전력효율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단비 및 검사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li> <li>•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기능성상담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li> <li>•기존주택전세임대</li> <li>•남북피해자지원</li> <li>•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li> <li>•영구임대주택공급</li> <li>•장기전세주택공급</li> <li>•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li> <li>•행복주택공급</li> </ul>	출				근성제고

## 50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illegible]

## 라. 기능별 예산지원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lt;표 2-2-10&gt; 기능별 예산지원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단위: 개, %)

	이용자 지원 바우처	이용자 지원 대여 (대출)	이용자 지원 비용 감면	이용자 지원 기회 제공	이용자 지원 물품	이용자 지원 이용 기회	사업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그램)단위 지원	사업자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 지원 시설 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계
보육·양육	7 (36.8)	0 (0.0)	1 (5.3)	0 (0.0)	0 (0.0)	0 (0.0)	5 (26.3)	1 (5.3)	3 (15.8)	2 (10.5)	0 (0.0)	0 (0.0)	0 (0.0)	19 (100.0)
보호·돌봄(아동·청소년)	2 (9.1)	0 (0.0)	1 (4.5)	0 (0.0)	0 (0.0)	0 (0.0)	8 (36.4)	9 (40.9)	2 (9.1)	0 (0.0)	0 (0.0)	0 (0.0)	0 (0.0)	22 (100.0)
보호·돌봄(성인)	2 (13.3)	0 (0.0)	6 (40.0)	2 (13.3)	1 (6.7)	0 (0.0)	2 (13.3)	1 (6.7)	1 (6.7)	0 (0.0)	0 (0.0)	0 (0.0)	0 (0.0)	15 (100.0)
일상생활(식품, 위생, 생 활용품, 이동 지원)	1 (8.3)	0 (0.0)	2 (16.7)	0 (0.0)	5 (41.7)	2 (16.7)	0 (0.0)	1 (8.3)	1 (8.3)	0 (0.0)	0 (0.0)	0 (0.0)	0 (0.0)	12 (100.0)
신체건강	1 (2.8)	0 (0.0)	23 (63.9)	2 (5.6)	2 (5.6)	2 (5.6)	0 (0.0)	3 (8.3)	0 (0.0)	0 (0.0)	2 (5.6)	0 (0.0)	1 (2.8)	36 (100.0)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1 (14.3)	0 (0.0)	1 (14.3)	0 (0.0)	0 (0.0)	0 (0.0)	4 (57.1)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7 (100.0)
재활 지원(장애인)	2 (22.2)	0 (0.0)	1 (11.1)	0 (0.0)	0 (0.0)	0 (0.0)	2 (22.2)	4 (44.4)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0.0)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0 (0.0)	0 (0.0)	3 (17.6)	2 (11.8)	1 (5.9)	1 (5.9)	2 (11.8)	5 (29.4)	3 (17.6)	0 (0.0)	0 (0.0)	0 (0.0)	0 (0.0)	17 (100.0)
문화 및 여가	3 (37.5)	0 (0.0)	0 (0.0)	0 (0.0)	0 (0.0)	0 (0.0)	1 (12.5)	4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8 (100.0)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 원(학대, 폭력), 자립 지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 (42.9)	7 (50.0)	0 (0.0)	0 (0.0)	1 (7.1)	0 (0.0)	0 (0.0)	14 (100.0)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	1	1	4	3	0	0	8	5	15	2	4	1	4	48

5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자 지원 바우처	이용자 지원 대여 (대출)	이용자 지원 비용 감면	이용자 지원 기회 제공	이용자 지원 물품	이용자 지원 이용 기회	사업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그램)단위 지원	사업자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 지원 시설 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계
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2.1)	(2.1)	(8.3)	(6.3)	(0.0)	(0.0)	(16.7)	(10.4)	(31.3)	(4.2)	(8.3)	(2.1)	(8.3)	(100.0)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개선	1 (4.0)	8 (32.0)	0 (0.0)	1 (4.0)	11 (44.0)	0 (0.0)	0 (0.0)	0 (0.0)	0 (0.0)	3 (12.0)	1 (4.0)	0 (0.0)	0 (0.0)	25 (100.0)
재해 및 보상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기타 서비스: 상담, 사 례관리, 복합지원 등	1 (7.1)	0 (0.0)	0 (0.0)	1 (7.1)	0 (0.0)	0 (0.0)	4 (28.6)	6 (42.9)	2 (14.3)	0 (0.0)	0 (0.0)	0 (0.0)	0 (0.0)	14 (100.0)
계	22	9	43	11	20	5	42	47	27	7	8	1	5	247

&lt;표 2-2-11&gt; 기능별 예산지원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

	이용자 지원 바우처	이용자 지원 대여 (대출)	이용자 지원 비용 감면	이용자 지원 기회 제공	이용자 지원 물품	이용자 지원 이용 기회	사업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 지원 시설 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계
보육·양육	17,851,761 (91.3)	- (0.0)	433 (0.0)	- (0.0)	- (0.0)	- (0.0)	31,969 (0.2)	3,975 (0.0)	1,614,715 (8.3)	53,765 (0.3)	- (0.0)	- (0.0)	- (0.0)	19,556,618 (100.0)
보호·돌봄(아동·청소년)	149,109 (11.4)	- (0.0)	2,176 (0.2)	- (0.0)	- (0.0)	- (0.0)	361,060 (27.6)	720,545 (55.0)	76,224 (5.8)	- (0.0)	- (0.0)	- (0.0)	- (0.0)	1,309,114 (100.0)
보호·돌봄(성인)	1,039,777 (86.4)	- (0.0)	7,847 (0.7)	32,061 (2.7)	- (0.0)	- (0.0)	4,304 (0.4)	4,000 (0.3)	115,498 (9.6)	- (0.0)	- (0.0)	- (0.0)	- (0.0)	1,203,487 (100.0)
일상생활(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	42,449 (16.3)	- (0.0)	35,390 (13.6)	- (0.0)	77,138 (29.6)	91,782 (35.2)	- (0.0)	5,424 (2.1)	8,610 (3.3)	- (0.0)	- (0.0)	- (0.0)	- (0.0)	260,793 (100.0)
신체건강	1,200 (0.0)	- (0.0)	32,438,850 (96.5)	51,865 (0.2)	6,488 (0.0)	868,928 (2.6)	- (0.0)	173,244 (0.5)	- (0.0)	- (0.0)	9,210 (0.0)	- (0.0)	58,075 (0.2)	33,667,860 (100.0)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1,335 (1.6)	- (0.0)	410 (0.5)	- (0.0)	- (0.0)	- (0.0)	81,122 (95.1)	2,472 (2.9)	- (0.0)	- (0.0)	- (0.0)	- (0.0)	- (0.0)	85,339 (100.0)
재활 지원(장애인)	98,379 (89.3)	- (0.0)	182 (0.2)	- (0.0)	- (0.0)	- (0.0)	9,673 (8.8)	1,952 (1.8)	- (0.0)	- (0.0)	- (0.0)	- (0.0)	- (0.0)	110,186 (100.0)
교육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 (0.0)	- (0.0)	353,923 (49.5)	1,089 (0.2)	47,390 (6.6)	265,029 (37.1)	17,281 (2.4)	12,318 (1.7)	17,253 (2.4)	- (0.0)	- (0.0)	- (0.0)	- (0.0)	714,283 (100.0)
문화 및 여가	126,023 (80.5)	- (0.0)	- (0.0)	- (0.0)	- (0.0)	- (0.0)	10,203 (6.5)	20,243 (12.9)	- (0.0)	- (0.0)	- (0.0)	- (0.0)	- (0.0)	156,469 (100.0)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학대, 폭력), 자립 지원	- (0.0)	- (0.0)	- (0.0)	- (0.0)	- (0.0)	- (0.0)	80,097 (69.2)	34,443 (29.8)	- (0.0)	- (0.0)	1,126 (1.0)	- (0.0)	- (0.0)	115,666 (100.0)
일자리: 일자리창출, 고	864	-	238,362	42,430	-	-	192,364	795,413	1,294,476	38,673	182,389	2,210	1,654,465	4,441,646

5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자 지원 바우처	이용자 지원 대여 (대출)	이용자 지원 비용 감면	이용자 지원 기회 제공	이용자 지원 물품	이용자 지원 이용 기회	사업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그램)단위 지원	사업자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 지원 시설 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계
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0.0)	(0.0)	(5.4)	(1.0)	(0.0)	(0.0)	(4.3)	(17.9)	(29.1)	(0.9)	(4.1)	(0.0)	(37.2)	(100.0)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개선	-	9,775,495	-	1,480	3,699,949	-	-	-	-	8,664	33,265	-	-	13,518,853
	(0.0)	(72.3)	(0.0)	(0.0)	(27.4)	(0.0)	(0.0)	(0.0)	(0.0)	(0.1)	(0.2)	(0.0)	(0.0)	(100.0)
재해 및 보상	-	-	5,021	-	-	-	-	-	-	-	-	-	-	5,02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231,643	-	-	1,727	-	-	91,686	166,731	32,390	-	-	-	-	524,177
	(44.2)	(0.0)	(0.0)	(0.3)	(0.0)	(0.0)	(17.5)	(31.8)	(6.2)	(0.0)	(0.0)	(0.0)	(0.0)	(100.0)
계	19,542,540	9,775,495	33,142,594	130,652	3,830,965	1,225,739	879,759	1,940,760	3,159,166	101,102	225,990	2,210	1,712,540	75,669,512



&lt;표 2-2-12&gt; 기능별 예산지원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준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보육·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다문화보육료지원</li><li>•만 3~5세 누리과정지원</li><li>•만 0~2세 보육료지원사업</li><li>•방과후보육료지원</li><li>•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li><li>•시간제보육</li><li>•장애아보육료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입양속려기간모자지원사업</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공직장어린이집등운영지원</li><li>•미혼모·부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li><li>•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li><li>•입양비용지원</li><li>•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양육비이행원스톱종합서비스</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li><li>•"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운영지원)"</li><li>•보육교직원인건비</li><li>•직장어린이집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어린이건강보호종합대책지원사업</li><li>•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li></ul>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이돌봄서비스</li><li>•장애아가족양육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청소년특별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동육아나눔터운영</li><li>•실종아동보호및지원</li><li>•이주배경청소년지원</li><li>•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li><li>•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li><li>•지역아동센터지원</li><li>•청소년쉼터운영지원</li><li>•학교밖청소년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WEE클래스상담지원</li><li>•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li><li>•매체활동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예방·해소사업)</li><li>•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운영</li><li>•청소년동</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사업(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의내역사업)"</li><li>•아동안전지킴이</li></ul>				

5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소년 지원	반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모바일 문자 상담 운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운영 • 초등돌봄 교실					
보호·돌봄 (성인)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 보호요양 원 이용지 원 • 시설급여 • 장기요양 급여 이용 지원 • 장애인거 주시설설 비입소이 용료지원 •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경 감 • 특별현금 급여(가족 요양비)	• 국가유공 자재가복 지지원 • 재가급여	• 기타재가 급여(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 (산재근로 자)케어센 터지원 • 독거노인 종합지원 센터운영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 원	• 노인돌봄 기본서비 스				
일상생활 (식품, 위 생, 생활용 품, 이동지 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 제분유 지 원		• 도서민 여 객선 운임 지원 • 민영교통 시설이용 지원(버스, 내항여객 선, 고속철 도)		• 사랑의그 린PC보급 • 시청각장 애인용 방 송수신기 보급사업 • 장애인보 조기구교 부 • 저소득층	• 양곡할인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결혼이민 자 통번역 서비스	•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 미, 행복나 눔이(가사 도우미) 지 원)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여 성 청 소 년 생리대 지원 사업 •학 교 우 유 급식								
신체건강	•청 소 년 산 모 임신· 출산 의료 비 지원		•(북한이탈 주민)의료 지원 •고위험 임 산부 의료 비 지원 •고혈압·당 뇨병 등록 관리사업 •난임부부시 술비지원 •노 인 안 검 진 및 개 안 수술 •미숙아 및 선 천 성 이 상 아 등 영 유 아 의 료 비 지원 •모 호 병 원 진 료 •생 애 전 환 기 건 강 진 단 (만40세, 만66세) •선 천 성 대 사 이 상 검 사 및 환 아 관 리 지 원 •신 생 아 의 난 청 진 단 의 료 비 지 원 •암 검 진 사 업 •암 환 자 의 료 비 지 원 •어린이 국가 예 방 접 종 지 원 사 업	•산 재 근 로 자 합 병 증 등 예 방 관 리 •재 가 암 관 리	•국 가 유 공 자 보 철 구 지 급 •표 준 모 자 보 건 수 첩 제 작 배 부	•"보험급여 (건강보 험 장애인 보장구)" •요양급여 (보조기)- 산재보험 급여		•(특수교육 대 상 자 ) 치 료 지 원 서 비 스 •전립선 등 노 인 성 질 환 예 방 관 리 •지 역 사 회 통 합 건 강 증진사업		•보 조 공 학 기 기 지 원 •취 학 전 아 동 실 명 예 방		•국 가 유 공 자 등 간 호 수 당	

58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장 애 인 출 산 비 용 지원</li> <li>• 외 국 인 근 로 자 등 의 료 지원</li> <li>• 의 료 급 여 수 급 권 자 만 6세미 만 영유아 건강검진</li> <li>• 의 료 급 여 수 급 권 자 일 반 건강검진 비 지원</li> <li>• 장애 등록 진 단 비 및 검 사 비 지원</li> <li>• 장 애 인 의 료 비 지원</li> <li>• 장 애 입 양 아 동 의 료 비 지원</li> <li>• 차 상 위 본 인 부 담 경 감 대 상 자 지원</li> <li>• 치 애 치 료 관 리 비 지 원 사업</li> <li>• 회 귀 질 환 자 의 료 비 등 지원</li> </ul>										
정 신 건 강 및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 장 애 인 부모 상 담 자 원 사 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 양 가 정 위 탁 아 동 심 리 치 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립 중 앙 청 소 년 치 료 재 활 센 터 운영</li> <li>• 노숙자 등 일 고 올 중 독 자 사 례 관 리 사 업</li> <li>• 정신보건센 터 운영(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근로자)사회심리 재활 지원</li> </ul>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포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재활 지원 (장애인)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사업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시각 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터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중도 시각 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척수 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 특수 교육			•(북한이탈 주민)교육비 지원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신소외 계층 정보화 교육 •온라인 정보화교육	•초, 중, 고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급식비	•(북한이탈 주민)교육 지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고령층 정보화교육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인 운전 교육 장 임차 및 순회교육 •장애 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탈북 학생 교육지원	•국립 특수 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지원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				
문화 및 여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지역 청소년 활동 정책 진흥사업(구 17개 시도 지방 청소년 활동 진흥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청소년 국					

60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센터 운영 지원)	제교류 •청 소년 활 동지원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 력),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폭력 상담소 운 영지원</li> <li>•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li> <li>•노인 보호 전문 기관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li> <li>•성 폭력 피 해자 지원 사업</li> <li>•여성 긴급 전화 1366 센터 운영 지원</li> <li>•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및 운 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폭력· 성 폭력 피 해자 무료 법률지원</li> <li>•가정폭력피 해자 치료 회복 프로 그램 및 의 료비지원</li> <li>•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 림서비스</li> <li>•법원 연 계 이혼 위기 가족 회복 지원</li> <li>•성매매 피 해 청소년 치료·재활</li> <li>•취약 위기 가족 돌봄 지원(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li> <li>•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지원(기능 보강, 상담 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사업</li> </ul>		
일자리: 일 자리 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 장 애인 및 중 증 장애인 에게 영입 장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보훈 대상자 취 업능력개 발지원</li> <li>•산재근로 자 직업훈 련</li> <li>•중증장애 인지원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장려 금</li> <li>•장애인 창 업지원</li> <li>•지역공동 체 일자리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복지 플러스센 터</li> <li>•순해설가 운영</li> <li>•시니어 기 술창업지 원</li> <li>•여성경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재근로 자직장복 귀지원</li> <li>•여성기업 판로지원</li> <li>•여성창업 지원</li> <li>•자활근로 (기초, 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 주민)취업 지원</li> <li>•60세이상 고령자고 용지원</li> <li>•공공산림 가꾸기</li> <li>•노인일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고 용시설장 비용자지 원</li> <li>•표준사업 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형 일 자리 지원</li> <li>•"장애인 특 화형 일자 리 제공</li> <li>•장애인복 지일자리 지원</li> <li>•중증 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 탈주민)자 립자활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 기 근로시 간 단축 급 여)</li> </ul>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용(훈련수 당) •직업능력 개발 운영 ( 훈련 수 당)				활동 촉진 지 원 ( 구 ,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여 성 기 업 종합 지 원 센터 운영 •장 애 인 기 업 종합 지 원 센 터 운 영 •지 역 자 활 센 터 운 영 •취 업 사 관 학 교 운 영 지원	상위) •취 업 성 공 패 키 지 ( 취 업 성 공 수 당 , 참 여 수 당 , 생 계 지 원 수 당 )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도 시 녹 지 관 리 원 •명 상 숲 코 디 네 이 터 •사 회 적 기 업 일 자 리 창 출 사 업 •산 림 보 호 지 원 단 •산 림 서 비 스 ( 숲 길 체 험 지 도 사 ) •산 림 서 비 스 도 우 미 •수 목 원 코 디 네 이 터 •숲 생 태 관 리 인 •장 애 인 고 용 장 려 금 지 급 •출 산 육 아 기 고 용 안 정 장 려 금 및 대 체 인 력 지 원 금 •취 약 계 층 전 담 취 업 지 원 사 업		인 직업 재 활 지원 ( 훈 련 수 당 )		•소 상 공 인 지 원 ( 용 자 ) •임 금 피 크 제 지원 금 •저 임 금 근 로 자 사 회 보 험 료 지 원 사 업 ( 두 루 누 리 )
추가: 주택 지원, 주거 환경개선	•에 너 지 바 우 처	•내 집 마 련 디 딩 돌 대 출 •농 촌 주 택 개 량 자 금 지 원 •버 팀 목 대 출 보 증 •버 팀 목 전 세 자 금 대 출 •주 거 안 정		•사 회 취 약 계 층 실 내 환 경 진 단 개 선 사 업	•(북한이탈 주민)주택 알선 지원 •공공주택 공급(공공 분양) •공공주택 공급(공공 임대) •국민임대 주택공급 •기존주택					•공공(임대) 주택신재 생에너지 지원(구 보증자리 주택신재 생보증) •사회복지 시설 신재 생에너지 보증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 (취약계 층 에너지 복지)		

6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월세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주거환경 개선자금 • 준주택지 원(등자)			전세임대 • 납 복 피 해 자 지원 • 다 가 구 등 기 존 주 택 매입임대 •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 영 구 임 대 주택공급 • 장 기 전 세 주택공급 • 행 복 주 택 공급					에너지효 율개선(단 열 / 창 호 / 바닥 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 체지원)			
재해 및 보상			• 원 폭 피 해 자 지원										
기타 서비 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 지원 등	• 지역 사회 서비스 투 자사업			• 노후 준비 서비스			•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적응 센터 운영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 다문화가 족 지원 센 터 운영	• (북한 이탈 주민) 상담 지원 • 노인 복 지 민 간 단 체 지원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 웹 정보 접 근성 제고 • 취약 계 층 아 동 통 합 서비스 지 원 (드림 스 타트) 사업 • 희망 복 지 지원 단 통 합 사 례 관 리 사업	• 다 문화 가 족 방문 교 육 서비스 • 다 문화 가 족 자 녀 연 어 발 달 지 원 서비스				



### 마. 기능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표 2-2-13> 기능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단위: 개, %)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 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 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계
보육·양육	8 (42.1)	5 (26.3)	4 (21.1)	1 (5.3)	0 (0.0)	0 (0.0)	0 (0.0)	1 (5.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9 (100.0)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13 (59.1)	6 (27.3)	0 (0.0)	0 (0.0)	1 (4.5)	0 (0.0)	0 (0.0)	2 (9.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 (100.0)
보호·돌봄 (성인)	1 (6.7)	10 (66.7)	0 (0.0)	0 (0.0)	1 (6.7)	0 (0.0)	0 (0.0)	2 (13.3)	0 (0.0)	0 (0.0)	0 (0.0)	1 (6.7)	0 (0.0)	0 (0.0)	0 (0.0)	15 (100.0)
일상생활(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 지원)	0 (0.0)	2 (16.7)	0 (0.0)	0 (0.0)	8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6.7)	12 (100.0)
신체건강	0 (0.0)	25 (69.4)	0 (0.0)	0 (0.0)	5 (13.9)	0 (0.0)	3 (8.3)	2 (5.6)	0 (0.0)	1 (2.8)	0 (0.0)	0 (0.0)	0 (0.0)	0 (0.0)	0 (0.0)	36 (100.0)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5 (71.4)	2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 (100.0)
재활 지원(장애인)	1 (11.1)	7 (77.8)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0.0)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7 (41.2)	4 (23.5)	2 (11.8)	2 (11.8)	1 (5.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9)	17 (100.0)

6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 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 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계
특수교육																
문화 및 여가	1 (12.5)	0 (0.0)	5 (62.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2.5)	1 (12.5)	8 (100.0)
안전 및 권익보장: 위기 지원(학대, 폭력), 자립 지원	8 (57.1)	3 (21.4)	0 (0.0)	0 (0.0)	0 (0.0)	0 (0.0)	0 (0.0)	2 (14.3)	0 (0.0)	0 (0.0)	1 (7.1)	0 (0.0)	0 (0.0)	0 (0.0)	0 (0.0)	14 (100.0)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 창업지원, 자활	2 (4.2)	2 (4.2)	8 (16.7)	0 (0.0)	2 (4.2)	0 (0.0)	4 (8.3)	3 (6.3)	1 (2.1)	7 (14.6)	0 (0.0)	0 (0.0)	0 (0.0)	19 (39.6)	0 (0.0)	48 (100.0)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개선	0 (0.0)	0 (0.0)	0 (0.0)	0 (0.0)	8 (32.0)	1 (4.0)	2 (8.0)	1 (4.0)	0 (0.0)	0 (0.0)	9 (36.0)	3 (12.0)	1 (4.0)	0 (0.0)	0 (0.0)	25 (100.0)
재해 및 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7 (50.0)	3 (21.4)	2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14 (100.0)
계	53	69	21	3	26	1	11	13	2	8	10	4	1	20	5	247

<표 2-2-14> 기능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

[illegible]

6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 현물 서비스 + 현금 지원	대면 서비스 + 현금 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계
교육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349,894 (49.0)	15,883 (2.2)	34,570 (4.8)	48,177 (6.7)	265,029 (37.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730 (0.1)	714,283 (100.0)
문화 및 여가	10,203 (6.5)	- (0.0)	138,277 (88.4)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4,209 (2.7)	3,780 (2.4)	156,469 (100.0)
안전 및 권익 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72,819 (63.0)	34,143 (29.5)	- (0.0)	- (0.0)	- (0.0)	- (0.0)	- (0.0)	7,578 (6.6)	- (0.0)	- (0.0)	1,126 (1.0)	- (0.0)	- (0.0)	- (0.0)	115,666 (100.0)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 지원, 창업 지원, 자활	3,074 (0.1)	82,240 (1.9)	26,530 (0.6)	- (0.0)	4,463 (0.1)	- (0.0)	1,084,675 (24.4)	7,104 (0.2)	- (0.0)	724,533 (16.3)	- (0.0)	- (0.0)	2,509,027 (56.5)	- (0.0)	4,441,646 (100.0)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 (0.0)	- (0.0)	- (0.0)	- (0.0)	561,604 (4.2)	- (0.0)	- (0.0)	1,480 (0.0)	- (0.0)	- (0.0)	3,688,369 (27.3)	9,267,400 (68.6)	- (0.0)	- (0.0)	13,518,853 (100.0)
재해 및 보상	- (0.0)	- (0.0)	- (0.0)	- (0.0)	- (0.0)	- (0.0)	5,021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5,021 (100.0)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435,426 (83.1)	30,360 (5.8)	55,756 (10.6)	- (0.0)	- (0.0)	- (0.0)	- (0.0)	- (0.0)	1,035 (0.2)	- (0.0)	- (0.0)	- (0.0)	- (0.0)	1,600 (0.3)	524,177 (100.0)
계	19,757,128	35,899,123	376,902	52,677	1,928,521	-	1,150,712	246,996	1,035	740,483	3,689,495	9,271,704	2,513,236	41,500	75,669,512

&lt;표 2-2-15&gt; 기능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준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보육·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보육료 지원</li> <li>만 3~5세 누리과정 지원</li> <li>만 0~2세 보육료 지원</li> <li>방과후 보육료 지원</li> <li>시간연보육료 지원</li> <li>시간제 보육</li> <li>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li> <li>장애포육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li> <li>"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운영지원)"</li> <li>보육교직원 인건비</li> <li>양육비 이행원스톱 종합서비스</li> <li>임양비용지원</li> <li>임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어린이집운영지원</li> <li>중소기업어린이집운영지원</li> <li>직이집교인지원</li> <li>직이집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보호종합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모·부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거점운영)</li> </ul>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E클래스상담지원</li> <li>매체활동능력증진및역기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사업</li> <li>아이돌봄서비스</li> <li>장애아가족양육지원</li> <li>청소년동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육아나눔터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li> <li>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li> </ul>								

## 68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illegible]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보호·돌봄 (성인)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보호요양원이용지원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 장애인거주시설비임료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재가급여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복지용구)			• 국가유공자복지지원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일상생활 (식품, 위생, 생활용품, 이동지원)		•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가사도			• 사랑의그린PC보급 • 시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사업 • 양곡할인 • 장애인보조기										•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 민영교통시설이용지원 (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

70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 현물 서비스 +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우 미 ) 지원)			구교부 •자소특충 기 저 귀 조 제 분 유 지원 •자소특충 여 성 청 소년 생 리대 지 원 사업 •정보통신 보 조 기 기보급 •학 교 우 유급식										
신체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li> <li>•(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서비스</li> <li>•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li> <li>•난임부부시술비지원</li> <li>•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li> <li>•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li> <li>•보훈병원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유공자보충구지급</li> <li>•보조공학기기지원</li> <li>•"보험급여(건강보험장애편보장구)"</li> <li>•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li> <li>•표준모수협제작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li> <li>•여성장출용애인보지원</li> <li>•장애등진단검사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환아관리지원</li> <li>•치매치료관•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li> </ul>						





## 7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illegible]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 현물 서비스 +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심리 치료 지원</li> <li>정신보건센터 운영(아동청소년 정신사포함)</li> <li>중독관리통합센터 운영</li> </ul>														
재활 지원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증장애인 재활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 재활 공공 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li> <li>발달재활 서비스</li> <li>시각장애인 음악 재활센터지원</li> <li>언어발달 지원 사업</li> <li>장애인 보조견 훈련기관 지원</li> <li>충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li> <li>적수장애인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달장애인 공공건사업</li> </ul>								

7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활 훈 련 지원													
교육: 학 교교육, 사 회교육, 특 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이 탈 주민) 교육지원</li> <li>•고 령 총 정 보 화 교육</li> <li>•국 립 특 수 학 교 및 특수 학급 지원</li> <li>•방과후학 교 자 유 수강권</li> <li>•장 애 인 정 보 화 교육</li> <li>•청 소 년 성 문 화 센 터 설 치운영</li> <li>•탈 북 학 생 교육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 문 화· 탈 북 학 생 멘 토 링지원</li> <li>•신 소 외 계 총 정 보 화 교 육</li> <li>•장 애 대 우 미 지 원</li> <li>•장 애 인 고 임 차 및 순 회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이 탈 주민) 교 육 비 지원</li> <li>•국 가 보 훈 대 상 자 지원 (수업료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 애 학 격 차 해 소 지원</li> <li>•초, 중, 고 교 보 육 정 보 화 지원</li> </ul>	•급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 립 인 화 보 호</li> </ul>
문화 및 여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청 소 년 활 동 정 책 진 흥 사 업 ( 구 시 도 청 소 년 진 흥 센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복지 서 비 스 이용권</li> <li>•스 포 츠 강 좌 이 용권</li> <li>•장 애 인 문 화·예 술 지원</li> <li>•청 소 년 국 제교류</li> <li>•통합문화 이용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 린 스 민 그 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 소 년 활 동 지 원</li> </ul>
안전 및	•가 정 폭	•가 정 폭						•취 약 위			•폭 력 피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권익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력 상 당 소 운영 지원 •가 정 폭 력 피 해 자 치 료 프 램 그 의 료 및 의 료 비 지원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학 대 피 해 노 인 전 용 센터) •법 원 연 계 이 혼 위 기 가 족 회 복 지 원 •성 매 폐 피 해 청 소 년 치 료 재 활 •성폭력피 해자 지 원사업 •여 성 긴 급 전 화 1366센 터 운 영 지원 •학대피해 아 동 쉼 터 설 치 및 운영	력·성 폭 력 피 해 자 무 료 지 원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독 거 노 중 응 급 안 림 서 비 스					기 가 족 돌 보 지 원 (가 족 역 량 강 화 지원) 사업 •"한 부 모 가 족 복 지 시 설 지 원 (기 능 보 강, 상 담 치 료)"			해 여 성 주 거 지 원사업					
일 자 리 : 일 자리 창출, 고용지원, 창업지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구,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근로장려금 •모성보호육아	•시니어기술창업지원 •여성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산재근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60세이	

7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원, 자활	• 장기 복대 군인 취업지원	경력 단절 취업 지원 • 취업 계단 지원 사업	발지원 • 도시 녹지 관리원 • 명상 숲 코디네이터 • "산림 서비스 (숲길도 체험지도사)" • 산림 서비스도 우미 • 수목원 코디네이터 • 숲생태 관리인 • 숲해설가 운영		• 저소득 장애인 영수증 제공		지원(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육아 기간 근로 단축 급여) • 소상공인 지원 (융자) • 여성 창업 지원	업 판로 지원 • 장애인 지원		로 자 직업 훈련 •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 중증 장애인 고용 (훈련수당) • 직업 능력 개발 운영(훈련수당) • 취업 사관 교육 운영 지원 • 취업 성공 패키지(취업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상고형 자기 고용 지원 • 공공산림 가꾸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 산림보호 자원단 • 일반형 일자리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 • 자활근로 (기초, 차상위) •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 장애인고용 시설 용자 지원 •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 저임금근로자 사회 보험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훈련수당)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역 자활센터 운영 • 출산 육아기 고령장려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 표준 사업장 설립지원	
주거: 주택지원, 주거환경 개선					• 공공 (임대) 주택 신 재생 에너지 지원 (구보금, 자택 신 재생 보급) • 농촌주택 개량 자금지원 • 사회복지 시설 신 재생 에너지 보급	• 버팀목 보증	• 에너지 바우처 • 주거 월세 대출 보증	• 사회 취약 계층 환경 개선 사업		• 공공 주택 공급 (공공분양) •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 국민 임대 주택 공급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납 북 피 해자 지원 • 다 가 구	• 내 집 마련 대출 •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 (북한 이 탈 주민) 주택 알 선 지원		

78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지원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li><li>•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보일러교체지원)</li><li>• 전력효율 향상(취약계층 에너지복지)</li><li>• 주거환경 개선자금</li><li>• 준주택지원(융자)</li></ul>						<div>등 기존 주택 임대입원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구임대 주택 공급</li><li>• 장기전세 주택 공급</li><li>• 행복주택 공급</li></ul>				
재해 및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목피해자 지원</li></ul>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복합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li><li>•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li><li>• 노후준비서비스</li><li>•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북한이탈주민) 상담지원</li><li>• 다문화가족 교육 서비스</li><li>•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노숙인 등 복지 지원</li><li>•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li></ul>						<div>노인간담체 지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웹정보 접근성 제고</li></ul>





바. 최종급여형태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표 2-2-16> 최종급여형태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단위: 개, %)

	이용자 지원 바우처	이용자 지원 대여 (대출)	이용자 지원 비용 감면	이용자 지원 기회 제공	이용자 지원 물품	이용자 지원 이용 기회	사업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 지원 시설 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계
대면 서비스	9	0	3	1	0	0	23	13	3	0	0	1	0	53
	(17.0)	(0.0)	(5.7)	(1.9)	(0.0)	(0.0)	(43.4)	(24.5)	(5.7)	(0.0)	(0.0)	(1.9)	(0.0)	(100.0)
1:1대면 (방문간호 등)	8	0	25	4	0	0	5	17	9	0	1	0	0	69
	(11.6)	(0.0)	(36.2)	(5.8)	(0.0)	(0.0)	(7.2)	(24.6)	(13.0)	(0.0)	(1.4)	(0.0)	(0.0)	(100.0)
집단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3	0	3	0	0	0	4	3	7	1	0	0	0	21
	(14.3)	(0.0)	(14.3)	(0.0)	(0.0)	(0.0)	(19.0)	(14.3)	(33.3)	(4.8)	(0.0)	(0.0)	(0.0)	(100.0)
현물 서비스	0	0	0	0	1	0	0	1	0	1	0	0	0	3
	(0.0)	(0.0)	(0.0)	(0.0)	(33.3)	(0.0)	(0.0)	(33.3)	(0.0)	(33.3)	(0.0)	(0.0)	(0.0)	(100.0)
유형/정형 현물서비스 (PC, 보정구 등)	1	4	0	0	9	5	2	0	0	3	2	0	0	26
	(3.8)	(15.4)	(0.0)	(0.0)	(34.6)	(19.2)	(7.7)	(0.0)	(0.0)	(11.5)	(7.7)	(0.0)	(0.0)	(100.0)
무형/비정형 현물서비스 (홈페이지 등)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현금	1	1	4	1	0	0	0	1	0	0	0	0	3	11
	(9.1)	(9.1)	(36.4)	(9.1)	(0.0)	(0.0)	(0.0)	(9.1)	(0.0)	(0.0)	(0.0)	(0.0)	(27.3)	(100.0)
대면서비스 현물서비스	0	0	2	3	0	0	3	5	0	0	0	0	0	13
	(0.0)	(0.0)	(15.4)	(23.1)	(0.0)	(0.0)	(23.1)	(38.5)	(0.0)	(0.0)	(0.0)	(0.0)	(0.0)	(100.0)

	이용자 지원 바우처	이용자 지원 대여 (대출)	이용자 지원 비용 감면	이용자 지원 기회 제공	이용자 지원 물품	이용자 지원 이용 기회	사업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 지원 시설 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계
대면서비스	0	0	0	0	0	0	1	1	0	0	0	0	0	2
현물서비스	(0.0)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100.0)
현금 지원	0	0	4	0	0	0	2	2	0	0	0	0	0	8
대면서비스	(0.0)	(0.0)	(50.0)	(0.0)	(0.0)	(0.0)	(25.0)	(25.0)	(0.0)	(0.0)	(0.0)	(0.0)	(0.0)	(100.0)
현금 지원	0	0	0	0	9	0	0	0	0	0	1	0	0	10
주택 지원	(0.0)	(0.0)	(0.0)	(0.0)	(90.0)	(0.0)	(0.0)	(0.0)	(0.0)	(0.0)	(10.0)	(0.0)	(0.0)	(100.0)
주거비 지원	0	3	0	0	0	0	1	0	0	0	0	0	0	4
주거비 지원	(0.0)	(75.0)	(0.0)	(0.0)	(0.0)	(0.0)	(25.0)	(0.0)	(0.0)	(0.0)	(0.0)	(0.0)	(0.0)	(100.0)
주거 알선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주거 알선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0	0	0	1	0	0	1	2	8	2	4	0	2	20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0.0)	(0.0)	(0.0)	(5.0)	(0.0)	(0.0)	(5.0)	(10.0)	(40.0)	(10.0)	(20.0)	(0.0)	(10.0)	(100.0)
기타	0	0	2	1	0	0	0	2	0	0	0	0	0	5
기타	(0.0)	(0.0)	(40.0)	(20.0)	(0.0)	(0.0)	(0.0)	(40.0)	(0.0)	(0.0)	(0.0)	(0.0)	(0.0)	(100.0)
계	22	9	43	11	20	5	42	47	27	7	8	1	5	247

8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2-2-17> 최종급여형태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

	이용자 지원 바우처	이용자 지원 대여 (대출)	이용자 지원 비용 감면	이용자 지원 기회 제공	이용자 지원 물품	이용자 지원 이용 기회	사업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 지원 시설 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계
대면 서비스	18,084,268 (91.5)	- (0.0)	321,939 (1.6)	1,727 (0.0)	- (0.0)	- (0.0)	601,560 (3.0)	705,212 (3.6)	40,212 (0.2)	- (0.0)	- (0.0)	2,210 (0.0)	- (0.0)	19,757,128 (100.0)
1:1대면 (방문간호 등)	1,289,800 (3.6)	- (0.0)	32,463,324 (90.4)	52,224 (0.1)	- (0.0)	- (0.0)	83,227 (0.2)	233,685 (0.7)	1,775,653 (4.9)	- (0.0)	1,210 (0.0)	- (0.0)	- (0.0)	35,899,123 (100.0)
집단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126,023 (33.4)	- (0.0)	35,384 (9.4)	- (0.0)	- (0.0)	- (0.0)	71,275 (18.9)	14,631 (3.9)	80,324 (21.3)	49,265 (13.1)	- (0.0)	- (0.0)	- (0.0)	376,902 (100.0)
현물 서비스	- (0.0)	- (0.0)	- (0.0)	- (0.0)	47,390 (90.0)	- (0.0)	- (0.0)	787 (1.5)	- (0.0)	4,500 (8.5)	- (0.0)	- (0.0)	- (0.0)	52,677 (100.0)
유형/정형 현물서비스 (PC,보장구 등)	42,449 (2.2)	508,095 (26.3)	- (0.0)	- (0.0)	95,206 (4.9)	1,225,739 (63.6)	7,103 (0.4)	- (0.0)	- (0.0)	8,664 (0.4)	41,265 (2.1)	- (0.0)	- (0.0)	1,928,521 (100.0)
무형/비정형 현물서비스 (홈페이지 등)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현금	- (0.0)	- (0.0)	7,962 (0.7)	- (0.0)	- (0.0)	- (0.0)	- (0.0)	90 (0.0)	- (0.0)	- (0.0)	- (0.0)	- (0.0)	1,142,660 (99.3)	1,150,712 (100.0)
대면서비스 현물서비스	- (0.0)	- (0.0)	25,097 (10.2)	33,541 (13.6)	- (0.0)	- (0.0)	5,586 (2.3)	182,772 (74.0)	- (0.0)	- (0.0)	- (0.0)	- (0.0)	- (0.0)	246,996 (100.0)
대면서비스 현물서비스 현금 지원	- (0.0)	- (0.0)	- (0.0)	- (0.0)	- (0.0)	- (0.0)	- (0.0)	1,035 (100.0)	- (0.0)	- (0.0)	- (0.0)	- (0.0)	- (0.0)	1,035 (100.0)
대면서비스 현금 지원	- (0.0)	- (0.0)	253,498 (34.2)	- (0.0)	- (0.0)	- (0.0)	43,315 (5.8)	443,670 (59.9)	- (0.0)	- (0.0)	- (0.0)	- (0.0)	- (0.0)	740,483 (100.0)
주택지원	-	-	-	-	3,688,369	-	-	-	-	-	1,126	-	-	3,689,495

	이용자 지원 바우처	이용자 지원 대여 (대출)	이용자 지원 비용 감면	이용자 지원 기회 제공	이용자 지원 물품	이용자 지원 이용 기회	사업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 지원 시설 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계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주거비 지원	-	9,267,400	-	-	-	-	4,304	-	-	-	-	-	-	9,271,704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	-	42,430	-	-	63,389	353,498	1,262,977	38,673	182,389	-	569,880	2,513,236
	(0.0)	(0.0)	(0.0)	(1.7)	(0.0)	(0.0)	(2.5)	(14.1)	(50.3)	(1.5)	(7.3)	(0.0)	(22.7)	(100.0)
기타	-	-	35,390	730	-	-	-	5,380	-	-	-	-	-	41,500
	(0.0)	(0.0)	(85.3)	(1.8)	(0.0)	(0.0)	(0.0)	(13.0)	(0.0)	(0.0)	(0.0)	(0.0)	(0.0)	(100.0)
계	19,542,540	9,775,495	33,142,594	130,652	3,830,965	1,225,739	879,759	1,940,760	3,159,166	101,102	225,990	2,210	1,712,540	75,669,512

&lt;표 2-2-18&gt; 최종급여형태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명 기준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대 면 서 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다문화보육 료지원</li><li>•만 3~5세 누 리과정 지원</li><li>•만 0 - 2 세 보 육 료 지 원사업</li><li>•방과후보육 료지원</li><li>•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li><li>•시간제보육</li><li>•장기복무제 대군인 취 업지원</li><li>•장애아보육 료지원</li><li>•지역사회서 비 스 투 자 사업</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li><li>•입양가정 위 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li><li>•청소년특별 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노후준비서 비스</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북한 이탈 주민) 주택 알선 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북한 이탈 주민) 교육 지원</li><li>•(북한 이탈 주 민 지 역 적 응 센 터 운영</li><li>•가정폭력상 담소 운영 지원</li><li>•건강가정지 원센터운영</li><li>•국립중앙청 소 년 치 료 재 활 센 터 운영</li><li>•노인보호전 문기관(학 대피해노인 전용상담)</li><li>•다문화가족 지 원 센 터 운영</li><li>•성폭력피해 자 지원사업</li><li>•실종아동 보 호 및 지원</li><li>•여성긴급전 화 1366센 터운영 지원</li><li>•육아종합지 원 서 비 스 제공</li><li>•이주배경청 소년 지원</li><li>•정신보건센 터운영(아 동 청 소 년 정 신 보 건 사업 포함)</li><li>•중독관리통</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산 재 근로 자) 사회심 리재활지원</li><li>•WEE 클래스 상담지원</li><li>•가정폭력피 해자 치료 회복 프로 그램 및 의 료비지원</li><li>•고령층 정 보화교육</li><li>•독거노인 사 회관계 활성 화 지원</li><li>•매체활용능 력 증진 및 역기능 해 소(청소년 인터넷·스 마 트 폰 중 독 예방·해 소사업)</li><li>•법원연계 이혼 위기 가족 회복 지원</li><li>•성매매 피 해 청 소 년 치료·재활</li><li>•장애인 정 보화교육</li><li>•지역사회청 소년통합지 원 제 계 (CYS-Net) 구축·운영</li><li>•초등돌봄교 실</li><li>•취 약 계 층 아 동 통 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립특수학 교 및 특수 학교 지원</li><li>•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 달 지 원 서비스</li><li>•아동안전지 킴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북한 이탈 주민) 자립 지원</li></ul>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합 지 원 센 터 운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중앙아동보호 전문 기관 운영 •중증장애인 자 립 생 활 지원센터 •지역 청소년활동정책진 흥 사 업 (구 17개 시 도 지방청 소년 활 동 진 흥 센 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성문화 센터 설 치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 치 및 운영	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탈북 학생 교육지원					
1:1대면 (방문간호 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발달장애인 부 모 상 담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아 이 돌 봄 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		•(북한 이탈 주민)의료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 안 술 •미숙아 및	•산재근로자 합 병 중 등 예방관리 •신소외계층 정보 화 교 육 •재가급여 •재가암관리			•노숙자 등 알 코 올 중 독자 사례 관리 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 (노 인 보 호 전 문기관) •시각장애인을 악 재 활 센터지원 •여성경제활	•(북한 이탈 주민)상담 지원 •(특수 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서비스 •가정폭력·성 폭 력 피 해 자 무 료 법률지원 •결혼이민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다 문화·탈북 학생 멘토링지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교사 근무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8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양육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 원		선 천 성 이 상 아 등 영 유 아 의 료 비 지원 •보훈병원진 료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 만66세) •시설급여 •신생아의 난 정진단 의료 비 지원 •알zheimer •알zheimer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 원사업 •외국인근로 자 등 의료 지원 •의료급여수 급권자 만 6 세 미 만 영 유 아 건 강검진 •의료급여수 급권자 일 반 건강검 진비 지원 •입양축려기 간 모자지 원사업 •장기요양금 여이용지원 •장애인거주 시 설 설 비 임 소 이 용 료지원				동 축진지 원(구, 경 력 단 절 여 성 취업지 원) •입양비용지 원	통번역 서 비스 •권역재활병 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 영지원 •독거노인· 중증장애 인 응급안 전 알림 서 비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 서비스 •장애인보조 견전문훈련 기관지원 •장애인문자 교육장 임 차 및 순회 교육 •전립선등 노 인성질환 예 방관리 •중도시각장 애인재활 훈련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청소년동반 자 프로그 램 운영 •청소년모바 일 문자 상 담 운영 •청소년사이 버 상담 센 터 운영 •희망복지지	환경개선 비,교사겸 직원장지 원비) •"보육돌봄 서비스(어 린이집운 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사업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 원 •취약계층전 담취업지 원사업 •취약농가인 력지원(영 농도우미, 행복나눔 이(가사도 우미) 지원)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의료비 지원</li> <li>•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li> <li>•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li> <li>•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지원</li> <li>•특별한금여(가족요양비)</li> <li>•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li> </ul>					원단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li> <li>•스포츠강좌이용권</li> <li>•통합문화이용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li> <li>•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li> <li>•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지원</li> <li>•노숙인 등 복지지원</li> <li>•술해설가 운영</li> <li>•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장애인 교육지원</li> <li>•장애인 문화·예술 지원</li> <li>•청소년국제 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녹지관리원</li> <li>•명상숲코디네이터</li> <li>•산림서비스(술길체험지도사)</li> <li>•산림서비스도우미</li> <li>•수목원코디네이터</li> <li>•숲생태관리인</li> <li>•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li> </ul>			
현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건강 보호 종합 대책 지원 사업</li> </ul>			
유형/ 경형 현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 주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주택개량 자금 지원</li> <li>•저소득 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유공자 보훈구지금</li> <li>•기타재가금여(장기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식비</li> <li>•보험금여(건강보험 형 장애인보장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육아나눔터 운영</li> <li>•여성기업종합 지원 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 주택 신재생 에너지 지원(구 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공학기기 지원</li> <li>•전력효율향상</li> </ul>		

88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PC, 보 장구 등)		애인 및 중 증 장애인 에게 영업 장소 제공 •주거환경개 선자금 •준주택지원 (용자)			양모험 복 지용구) •사랑의그린 PC보급 •서민총 가스 시설 개선 •시청각장애 인용 방송 수신기 보 급사업 •장애인보조 기구교부 •저 소득 총 여성 청 소 년 생리대 지원 사업 •표준모자보 건수첩 제 작 배부 •학교우유급식	•양곡활인 •요양급여 (보조기)- 산재보험 급여 •정보통신보 조기기보 급	타운영			금자리주 택신재생 보급) •사회복지시 설 신재생 에너지보 급 •저소득층에 너지효율 개선(단열/ 창호/바닥 시공및고 효율보일러 교체지원)	(취약계 층에너지복 지)		
무형 /비정형 현물 서비스 (홈케어지 등)		•버팀목대출 보증											
현금	•에너지바우 처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원폭피해자 지원 •장애등록진 단비및검 사비지원	•근로장려금				•여성창업지 원					•국가유공자 등간호수당 •모성보호육 아지원(출 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 직급여, 육 아기근로시 간단축급여) •소상공인지 원(용자)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환아관 리지원 •치매치료관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사회취약계 층실내환			•독거노인종 합지원센 타운영 •미혼모·부 초기지원	•교육복지우 선지원사업 •여성기업판 로지원 •청소년방과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리 비 지 원 사업	경 진단개 선 사업 •장애인창업 지원			(권역별 미 혼 모 부 자 거 점 기 관 운영) •시니어 기 술 창 업 지 원	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취약위기가 족돌봄지원 (가족역량 강화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 원(기능보강, 상담치료)						
대면 현물 현금 서비스							•장애인기업 종합 지원 센터운영	•노인복지민 간단체지원						
대면 서비스 현금 서비스			•고혈압·당 뇨병 등록 관리사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훈련수당) •직업능력개 발 운영(훈 련수당)				•고용복지플 러스센터 •취업사관학 교 운영 지 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취업성공패 키지(취업 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 수당)						
주택 지원					•공공주택공 급(공공분양) •공공주택공 급(공공임대) •국민임대주 택공급 •기존주택전 세임대 •남북피해자 지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주 택공급 •장기전세주						•폭력피해여 성 주거 지 원사업			

90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용자지원 바우처	이용자지원 대여(대출)	이용자지원 비용감면	이용자지원 기회제공	이용자지원 물품	이용자지원 이용기회	사업자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택공급 •행복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산재근로 자)케어센 터지원						
주거 알선					•(북한이탈 주민)주택 알선 지원								
취약 계층 일 자리 제공				•지역공동체 일 자리 사 업			•지역자활센 터 운영	•어르신 문 화 프 로 그 램운영 •자활근로 (기초, 차 상위)	•(북한이탈주 민)취업 지원 •60세이상고 령자고용지 원 •공공산림가 꾸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산림보호지 원단 •장애인고용 장려금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지원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일반형 일 자리 지원 •"장애인 특 화형 일자 리 제공 •장애인복지 일 자리 지 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 수당)		•"임금피크 제지원금 •저임금근로 자 사회보 험료 지원 사업(두루 누리)
기타			•도서관 여객 선 운임지원 •민영교통시 설이용지 원(버스,내 항여객선, 고속철도)	•온라인 정 보화교육				•웹정보접근 성제고 •청소년활동 지원					

## 사. 부처별 항목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lt;표 2-2-19&gt; 부처별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단위: 개, %)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전생애	계
경찰청	- (0.0)	1 (100.0)	- (0.0)	- (0.0)	- (0.0)	1 (100.0)
고용노동부	4 (16.0)	- (0.0)	19 (76.0)	2 (8.0)	- (0.0)	25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0)	- (0.0)	1 (14.3)	- (0.0)	6 (85.7)	7 (100.0)
교육부	1 (7.7)	11 (84.6)	1 (7.7)	- (0.0)	- (0.0)	13 (100.0)
국가보훈처	- (0.0)	- (0.0)	5 (50.0)	3 (30.0)	2 (20.0)	10 (100.0)
국토교통부	- (0.0)	- (0.0)	- (0.0)	- (0.0)	13 (100.0)	13 (100.0)
금융위원회	- (0.0)	- (0.0)	2 (100.0)	- (0.0)	- (0.0)	2 (100.0)
기획재정부	- (0.0)	- (0.0)	1 (100.0)	- (0.0)	- (0.0)	1 (100.0)
농림축산식품부	- (0.0)	1 (33.3)	1 (33.3)	- (0.0)	1 (33.3)	3 (100.0)
문화체육관광부	- (0.0)	1 (25.0)	1 (25.0)	- (0.0)	2 (50.0)	4 (100.0)
방송통신위원회	- (0.0)	- (0.0)	- (0.0)	- (0.0)	1 (100.0)	1 (100.0)
보건복지부	15 (16.0)	18 (19.1)	13 (13.8)	18 (19.1)	30 (31.9)	94 (100.0)
산림청	- (0.0)	- (0.0)	9 (90.0)	- (0.0)	1 (10.0)	10 (100.0)
산업통상자원부	- (0.0)	- (0.0)	- (0.0)	- (0.0)	6 (100.0)	6 (100.0)
여성가족부	- (0.0)	21 (58.3)	2 (5.6)	- (0.0)	13 (36.1)	36 (100.0)
중소벤처기업부	- (0.0)	- (0.0)	8 (100.0)	- (0.0)	- (0.0)	8 (100.0)
통일부	- (0.0)	1 (11.1)	3 (33.3)	- (0.0)	5 (55.6)	9 (100.0)
해양수산부	- (0.0)	- (0.0)	- (0.0)	- (0.0)	1 (100.0)	1 (100.0)
행정안전부	- (0.0)	- (0.0)	1 (100.0)	- (0.0)	- (0.0)	1 (100.0)
환경부	1 (50.0)	- (0.0)	- (0.0)	- (0.0)	1 (50.0)	2 (100.0)
계	21	54	67	23	82	247

9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2-2-20> 부처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단위: 개)

	보육 ·양육	보호 ·돌봄 (성인)	보호 ·돌봄 (아동· 청소년)	일상 생활 (식품, 위생, 생활 용품, 이동 지원)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	재활 지원 (장애인)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 특수 교육	안전 및 권익 보장: 위기 지원 (학대, 폭력), 자립 지원	문화 및 여가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 지원, 창업 지원, 자활	주거: 주택 지원, 주거 환경 개선	기타 서비스: 상담, 사례 관리, 복합 지원 등	계
경찰청			1											1
고용노동부	4	1			3	1					16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4					1	7
교육부	1		3		1			8						13
국가보훈처		3		1	3			1			2			10
국토교통부												13		13
금융위원회												2		2
기획재정부											1			1
농림축산식품부				2								1		3
문화체육관광부										4				4
방송통신위원회				1										1
보건복지부	11	11	6	4	28	5	9	1	4		7		7	94
산림청										1	9			10
산업통상자원부												6		6
여성가족부	2		12	1		1		1	10	3	2		4	36
중소벤처기업부											8			8
통일부					1			2			2	2	2	9
해양수산부				1										1
행정안전부											1			1
환경부	1											1		2
계	19	15	22	12	36	7	9	17	14	8	48	25	14	247

&lt;표 2-2-21&gt; 부처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단위: 개)

	이용자 지원 바우처	이용자 지원 대여(대출)	이용자 지원 비용감면	이용자 지원 기회제공	이용자 지원 물품	이용자 지원 이용기회	사업자 지원 시설운영 지원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위 지원	사업자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자 지원 시설설비 등 지원	이용자 +사업자 복합	복합	기타	계
경찰청									1					1
고용노동부			3	1		1	4	3	6	3	1		3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1		3						7
교육부	1		1		1	1		6	3					13
국가보훈처	1		6	1	1								1	10
국토교통부		5			8									13
금융위원회		2												2
기획재정부				1										1
농림축산식품부		1			1				1					3
문화체육관광부	2							2						4
방송통신위원회					1									1
보건복지부	15		29	3	4	2	17	14	5		5			94
산림청	1						1		8					10
산업통상자원부	1				1					3	1			6
여성가족부	1		1				15	16	2		1			36
중소벤처기업부		1		1			3	2					1	8
통일부			2		2		2	1	1			1		9
해양수산부			1											1
행정안전부				1										1
환경부				1						1				2
계	22	9	43	11	20	5	42	47	27	7	8	1	5	247

9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2-2-22> 부처별 최종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단위: 개)

	대면 서비스	1:1 대면 (방문간 호 등)	집단 대면 (프로그램 참여 등)	현물 서비스	유형 /정형 현물 서비스 (PC, 보장구 등)	무형 /비정 형 현물 서비스 (홈페이 지 등)	현금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대면 서비스 현물 서비스 현금	대면 서비스 현금	주택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알선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기타	
경찰청	1															1
고용노동부	1	2	4		2		1			6		1		8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2										2	7
교육부	6	3		2	1			1								13
국가보훈처	1	3	2		1		1	1							1	10
국토교통부					2						8	3				13
금융위원회						1	1									2
기획재정부							1									1
농림축산식품부		1			2											3
문화체육관광부			3											1		4
방송통신위원회					1											1
보건복지부	21	48	2		7		4	3	1	1				7		94
산림청			8											2		10
산업통상자원부					5		1									6
여성가족부	18	9	1		1			4		1	1				1	36
중소벤처기업부					2		2	3	1							8
통일부	3	2	1								1		1	1		9
해양수산부															1	1
행정안전부														1		1
환경부				1				1								2
계	53	69	21	3	26	1	11	13	2	8	10	4	1	20	5	247



제 3 장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



# 3

##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

&lt;

### 제1절 배경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지역사회를 고려한다 함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김은정, 2014). 첫째는 지역특성을 기존 제도에 반영하는 정책사고의 지역화(localization)이다.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맞게 다양하게 실행하는 정책의 분권화(de-centralization)이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활성화나 지역구성원의 주체화와 같은 비제도적 형식의 지역화이다. 지역 내 민간복지기관들은 기존의 표준적(탈지역적) 서비스 제공방식을 벗어나 지역주민, 공공부문, 유관기관 등과의 지역공동체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다른 맥락도 있다.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지역사회와 집합적 연대 또는 공동체적 접근이 약화되어 개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이탈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가 가져온 새로운 합리성의 형식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로부터 탈맥락화 하였고, 공급자와 이용자를 구분하여 각기 이윤최적화를 추구하는 행위자로 전락시켰다. 이런 시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생활세계와 집합적 연대를 복원하는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김형용, 2013).

이런 배경을 토대로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생활의 장소로서 지역사회를 천명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회에서 장애인은 지역사회로부터 강력한 분리를 경험하였다.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는 공간적 분리임과 동시에 인간성으로부터의 분리였다. 대형시설에서 개성이 없는 사람으로 연명하도록 강요되었다. 이와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정책의 공통적인 목표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설정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핵심은 ‘탈시설’과 ‘지역사회서비스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는 지방정부 주도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실현이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구체적인 정책결과 실행은 지역화 되는 것이 타당하다. 대인서비스(human service)는 욕구 기반과 이용자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거리 단위의 정책결정이 적절하다. 이런 면에서 적어도 이론적 또는 세계적 추세를 보면 지방이양(de-centralization)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지방이양은 ‘덤핑(dumping)’이다. 졸속으로 지방에다 던진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정책의 과제는 합리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분담하고, 기획은 중앙정부가 실행은 지방정부가 하는 합리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

셋째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서비스 정책이다. 지역사회의 친구가, 이웃이 적극적인 지원자 또는 옹호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CBSS(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s)와 같은 접근방법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이런 지역사회차원의 우호적인 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ervices of the community(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의 의미이다. 이런 방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서비스에서 지역사회를 강조한다는 점은 획일성과 전형성에서 다양성과 비전형성을 추구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정부주도에서 지역사회라는 공간속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하는(public support에서 natural support로) 차원도 있다.

장애인서비스 정책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접근은 전 세계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추구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세 가지 정책은 동시에 추구될 수도 있으며 정책 환경에 따라 다른 맥락이 강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첫 번째 접근방법에서는 탈시설과 함께 자립적인 생활을 강조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에서 바우처와 같은 이용자 선택제도가 정책적으로 선호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주도성을 강조하는 두 번째 접근방법이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첫 번째 접근방법과 결합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운영되는 이용자 선택 중심의 제도만으로는 개인 맞춤형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지방정부 단위의 ‘지역밀착형’ 서비스들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가 일본에서 전국표준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장애인종합법상의

지원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지역밀착형 서비스이다.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세 번째 접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역할 일변도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강조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은 일정수준까지는 법과 행정의 강제장치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서구사회의 발달장애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지원(natural support)’은 이런 성격을 표현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지금까지 장애인정책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은 지역사회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제2절 장애인서비스 지형

장애인서비스 제도는 원가정에서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주시설서비스(residential services)와 원가정에 사는 것을 돕는 재택지원서비스(in-home support services)로 구분될 수 있다. 장애인서비스의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움직임을 보면 거주시설서비스에서 재택지원서비스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거주시설서비스 내에서도 과거의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대형시설 중심에서 사회의 소규모 가정형시설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은 장애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에 두고 문제해결방법도 사회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모델, 자립생활모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두 방향의 중심이동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한국장애인복지서비스 역사라는 틀에서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수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중심의 확대이다. 1970년대에는 한국전쟁시기인 1950년대에 만들어진 전쟁고아 시설의 아동들이 20년 후 성인이 되면서 많은 시설들이 장애인시설로 전환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1988년 세계올림픽행사를 위하여 도심 외곽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키고 확장하였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특히, 대형거주시설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만들어졌

으며, 현재까지도 이 모델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 이 시기의 서비스 제공목적은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밥 굶기지 않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공간에서의 보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이용시설 또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확대이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각성되기 시작한 시기고, 이런 흐름에 합류하기 위하여 수용시설이 아닌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그 운영은 비영리 민간주체를 활용하였다. 1980년대는 주로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대규모 이용시설 중심으로 신규 설치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양적 확대가 집중된 시기였고,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등과 같은 소규모 지역사회재활시설들이 도입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은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재활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2000년대 이후의 자립생활과 이용자 선택 방식의 서비스 확대이다. 이 시기는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운동이 국내에 소개되고, 장애당사자들의 서비스 요구운동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가 설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제도가 도입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 자립생활센터의 설치와 바우처 방식의 활동보조제도 도입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 후반에는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가 바우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활동보조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 분야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큰 중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세 단계로 설명되는 지난 40년에 걸친 한국 장애인서비스의 발전이 보여주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서비스를 주도하는 패러다임도 급속히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과정에서 각 단계의 서비스 모델들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70년대의 대형시설이 현재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장애인당사자 운동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인권침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델인 전문가 중심의 장애인복지관은 전체 규모면에서 대표적인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최근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센터의 약진이 뚜렷하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런 세 단계의 발전의 역사는 서비스 전달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시설보호와 구호의 시기에 만들어진 대형 거주시설들은 이용자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등의 가장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만들어진 장애인복지관은 정부가 민간공급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공급자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의 욕구해결을 책임지는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이용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고, 결정된 급여를 복수의 민간공급자들 가운데서 이용자가 골라서 이용하는 이용자 선택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세 가지 전달체계가 공존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이용 장애인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혁신하는 전달체계의 개편이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한국의 특징적인 제도 중에 하나는 장애인등록 및 등급제이다. 이 제도는 1989년에 장애인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서 누구에게 더 많은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하느냐를 판정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장애종류와 장애정도를 정하고, 소득보장이나 복지서비스의 필요를 판단할 때 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더 정확한 장애심사와 등급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장애인당사자 단체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비판으로 맞서왔다. 그러다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등급제 폐지가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현재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각 서비스 단위로 욕구를 심사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의 역사를 보면 서구사회가 경험한 과정을 압축적으로 밟아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이전 단계의 서비스 모델을 새로운 서비스 모델에 통합하지 못하고, 각 단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을 잠금(lock-in)현상으로 칭할 수 있는데(김영종, 2012), 잠금현상은 제도적 틀을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로 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단계 서비스 공급자의 기득의 이해를 최대한 존중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장애

인서비스와 전달체계의 핵심과제는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를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의 정신에 부합하게 새로이 통합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제도와는 달리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재정을 부담하는 정부, 서비스를 대행을 책임지는 민간기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제공인력,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관계가 조직화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영역이다. 따라서 한번 제도가 탄생하면 그 관계와 모습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제3절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하는 방향에서 통합되는 방향으로, 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방식에서 주체가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중앙정부 주도성과 지방정부 자율성, 정부 주도성과 지역사회의 참여, 이용자 선택권과 제공기관의 안정성 등의 적절한 균형이 추구되어야 한다.

#### 1. 이용자 선택제도: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2011년 1월에 제정된 활동지원법의 논의의 기원은 노인요양보험법의 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인요양보험법은 재가서비스와 거주시설서비스를 망라하여 노인에게 제공되는 전체의 서비스를 하나의 구조(진입점)로 통합하며, 전체 노인에게 공평한 접근성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책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이전의 노인서비스와 달라진 점이다. 이런 점을 장애인서비스에도 실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국회의 부대결의가 있었고, 이 부대결의를 이행한 결과가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점 때문에 2011년 법률제정 이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하여 과편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이용자의 공평한 접근성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서비스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거주시설서비스는 장기적으로는 활동지원제도에 편입되어야 하나,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거주서비스로의 개편이 진행되



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까지 편입을 유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잠정 정리되었다. 그리고 낮 동안의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초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주간보호서비스를 1단계로 활동지원제도에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제정법에 포함되었으나 2011년 3월 개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sup>5)</sup> 또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장애인보조기구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는 그야말로 파편적이다. 서비스의 공평한 접근성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과는 거리가 멀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법적으로 명시된 서비스 진입기준이 없고, 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결정도 해당 시설에서 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의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거주시설은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이용자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연고자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sup>6)</sup>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아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제도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를 찾는 책임은 장애인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서비스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파편적인 서비스들이 존재할 뿐이지, 욕구와 서비스가 조응하는 시스템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공평한 접근성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인요양보험법의 부대결의에서 출발한 활동지원법의 중대한 사명이자 정체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향후 검토가 필요한 요지는 향후 활동지원법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외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단기휴식서비스, 보조기구 서비스, 거주시설서비스 등을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에 맞게 재편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모두 활동지원법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방향의 개편을 통해서 일본의 장애인종합법(이전 자립지원법)체계,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체계와 같이 장애인서비스 전반을 지역사회 단위로 하나의 진입점으로 통합

5) 장애인활동지원법은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급여 종류에서 주간보호를 삭제한 것은 시행 이전이었으므로 주간보호가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로 시행된 바는 없다.

6) 무료이용자의 경우는 수급권자와 무연고자로 제한되며, 실비입소의 경우는 수급자나 무연고자가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실비입소의 비율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하는 것이 장기 방향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 다양화’, ‘급여 범위 확대’, ‘타제도 흡수’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정부에서 2016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활동지원제도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은 활동지원제도 이용자의 50%를 구성하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고려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라는 큰 틀을 통하여 기존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틀에서 급여통합 대상으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활동지원의 급여 범위에 발달재활을 포함시키는 것이다.<sup>7)</sup> 이렇게 되면 18세 이후에도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욕구(성명진, 2015)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도 발달재활예산을 활동지원 예산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급여의 종류에 발달재활이 추가됨으로써 이용자가 어떤 급여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는 선택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기존의 발달재활 받던 아동들 중 탈락하는 아동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정조사표를 통한 장애구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급여량이 적은 경증등급을 추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경증의 인정조사 등급은 현재의 발달재활 급여량에 준하게 설정하는 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가장 간단하게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의 각 이용자격 제도는 현재대로 그대로 두고, 정해진 급여액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 칸막이를 제거하여 개인 선택에 의해서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를 통합하는 경우 통합대상 제도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점진적 제도 통합은 점진적 예산확대와 병행되도록 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7) 발달재활서비스를 활동지원제도에 포함시키는데 근본적인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필요욕구, 지원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 판단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영역(최복천, 2015)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맡기는 방식의 활동지원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고려한다면 근본적으로 활동지원제도는 성인서비스만을 다루고, 아동서비스는 별도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과 같이 아동과 성인을 동일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 영국과 같이 아동과 성인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다른 여러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큰 쟁점이다.

록 해야 한다. 또한 이 방향으로 활동지원제도가 개편되면 신청자격을 장애 1-3급으로 하고 있는 제한도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록유무와 관계없이 희귀난치와 같은 특수한 욕구를 포괄하여야 한다(이채식, 2015). 장기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장애등록에 관계없이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에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독립적인 심사기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 2. 장애인 거주시설과 탈 시설

탈-시설의 영어 표현은 ‘de-institution’이다. 이는 ‘institution’과 결별한다는 의미이다. ‘institution’은 집단수용, 고립, 억압, 개성 박탈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개념이다. 공간적으로 집단수용 된 상태이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일방적으로 통제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institution’과의 결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가? 첫째 방법은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여 시설이 아닌 장소로 이주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탈-시설 운동은 이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제도에서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공간을 ‘de-institution’시키는 방법이다. ‘institution’의 의미가 집단수용, 고립, 억압, 개성의 박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거주 시설에서 개별적 삶의 공간, 지역사회와의 통합, 자기결정의 원칙, 개성의 존중 등이 확보 된다면 이는 ‘de - institution’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여기에 더하여 일반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입양과 위탁가정보호, 장애인주택임대 등과 같은 서비스도 장기적으로는 거주시설 정책 범주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 3-3-1> 성인지적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의 다양한 유형

유형	분류	세부분류	시설의 특성	시설의 모형(사례)
공동체형 거주시설	복합 서비스 제공형	분리공동체	계획된 공동체형성(다양한 자원 동원하여 서비스제공, 분리된 공동체)	. 보호마을 혹은 공동체마을(Intentional communities <sup>8)</sup> )
시설형 거주시설 <sup>9)</sup>	시설형태 많은 서비스 제공형	요양시설	지속적인 거주 장소+관리+식사+집중된 개별지원(지원인력상주)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생활시설	지속적인 거주 장소+관리+식사+개별지원(지원인력상 주)	. 생활시설(거주시설)

유형	분류	세부분류	시설의 특성	시설의 모형(사례)
		단기보호	일시적인 거주 장소+관리+식사+집중된 개별지원(지원인력상주)	· 단기보호
	시설형태 약한 서비스 제공형	그룹홈	지속적인 거주 장소+관리+식사+느슨한 개별지원(지원인력상주)	· 그룹홈
가정형 거주시설	가정형태 많은 서비스 제공형	요양지원 (중증장애인)	일시 혹은 지속적인 거주 장소+관리+식사+집중적 개별지원(3명 이하)	· 미국의 Family Home Agency 혹은 영국의 Shared Lives 제도
	가정형태 약한 서비스 제공형	생활지원 (경증장애인)	일시 혹은 지속적인 거주 장소+관리+식사+느슨한 개별지원(3명 이하)	· 영국 Supported Accommodation <sup>10)</sup> · 함께 거주하며 돌봄
		최소지원	거주 장소+주택관리 서비스+최소지원서비스	· 순회지원 자립홈 등
독립형 주거서비스	부분 독립형	단독	주택임대, 주택관리서비스	· 미국의 아파트군 혹은 단일 공동거주가정 혹은 아파트 <sup>11)</sup>
		그룹	주택임대, 주택관리 서비스	
	완전 독립형	단독	주택구입 지원 혹은 임대	· 자가
		그룹	주택구입 지원 혹은 임대	· 공동소유 등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인가? 아니다. 시설설치 기준이 되는 시행규칙 별표 5를 보면 대규모 분리형 시설을 표준(정상)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는 현재 거주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역사회로의 탈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개별적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 전환서비스<sup>12)</sup>’와 같은 탈시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

8) 대표적으로 라르슈, 캠프힐과 같은 분리된 공동체 마을 등이 있다.

9)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는 거주시설 서비스의 형태이다.

10) 영국의 Supported Accommodation은 지원만 제공하고 돌봄은 제공하지 않는다.

11) 미국의 아파트군(apartment cluster)은 가까이 있는 몇 개의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단위를 말하며, 그 아파트 단위 중 한 곳에 살고 있는 지원인력의 지원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단일 공동거주가정 혹은 아파트(single co-residence home or apartment)는 주택이나 아파트 한 채로 구성되며, 지원 인력 중 한사람이 지적장애를 지닌 한명 이상의 룸메이트와 집을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12)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는 서울시 소재 거주시설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자립생활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되면 7년간 지역생활 체험, 활동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7년경과 후에는 전세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자립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다(유연이, 2015).

되어야 한다.<sup>13)</sup> 이를 통해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정기적인 상담, 자립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립 정보제공, 주거공간 연계 등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조한진, 2015). 둘째는 거주시설을 가정과 최대한 유사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주 시설 개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거주시설의 규모는 30인 이하로만 운영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이 규모를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소규모화하는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대체 등의 적극적인 유도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장애인거주시설<sup>14)</sup>과 탈시설 문제는 장애인주거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장애인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입소의 이유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으로서의 주택 제공만으로 자립적인 삶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 필요하다(은종균, 2015). 지원주택은 지원서비스(support), 비장애인과의 공유(share), 지역사회와의 교류(community)를 요소로 한다. 향후의 거주시설도 가장 비시설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가 영국의 shared lives, 미국의 supported living arrangements 이다. 그래서 향후 비시설 주거와 시설주거는 공간으로서의 주택은 동일해야 한다. 차이점은 비시설 주거는 ownership이 장애인 본인에게 있고, 시설 주거는 ownership이 시설운영주체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 외는 삶의 공간과 삶의 방식은 최대한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시설과 지역사회라는 경계는 미세한 수준으로 존재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주택과 거주시설 서비스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와 평생을 살고 싶은 부모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원주택은 자폐성 장애인이 속한 10여 가족이 동네를 이루어 살고, 그 동네에는 자폐성 장애인이 하루를 신나게 보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자폐성 장애

13) 김미옥(2015)은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성 차원에서 퇴소이전의 거주시설이 탈 시설을 지원하는 모델로 '통합지원센터(가칭)'를 제안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시설이 탈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다.

14)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이라는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과거의 시설 개념이었던 'institution'이라는 표현 대신에 'home'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소규모 가정형태의 주거공간으로 변화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소규모로 개편된 상태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시설'이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장애인거주홈', '장애인거주터' 등과 같은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통용어인 '시설'이라는 단어의 폐기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서도 공히 검토가 필요하다.

인 가족 공동주거단지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거주시설의 경우도 이처럼 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시설도 개발되어야 한다.

### 3.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sup>15)</sup>을 대표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의료, 교육, 직업,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망라하여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기관이며, 1980년을 전후하여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에 200여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직원 수는 적게는 20여 명에서 많게는 50여 명에 이르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제공기관이다. 이런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서비스는 수요자(개인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기관 운영비 지원 방식과 수요자 지원방식이 병존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수요자 지원방식에 의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을 위한 지원서비스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재가복지봉사센터도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기관 운영비지원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등의 장애아동발달재활 영역의 경우에도 이전부터 기관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던 서비스가 있고, 바우처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들 사업을 통하여 확보되는 정부재정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활동지원이나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같이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전체 재정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의 절반에 가까운 서비스가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장애인복지관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수요자지원과 공급자지원 방식의 조합

15)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에서 '장애인이용시설'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지역사회 기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활'이라는 용어가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재활이라는 단어가 이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의 면에서 부적절하다. '지역사회지원시설' 또는 '지역사회지원서비스'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방정부와의 두 가지 측면의 서로 다른 관계를 통해서 수행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지방정부가 이용자격을 승인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미리 정해져 있는 서비스별 단가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같은 경우이다. 둘째는 지방정부와 협의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프로그램 기반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개별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몇 개의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포괄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기관 운영비지원 방식은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포괄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운영비 지원 부분의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은 지역사회중심적이면서 장애인감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동안 강조되었던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관점을 계승하고, 최근의 모델로 제안되는 CBSS(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s)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김용득 외, 2013).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실천의 지역사회 중심기관으로서 장애당사사정을 존중하는 장애인감성(disability awareness)을 실천의 바탕에 두는 옹호(advocacy) 지향성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의 인력을 구성하는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상담사, 치료사 등에 대하여 직원의 공통적 실무기반을 제공하는 의무적 권리옹호 교육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의 다른 지역사회서비스들의 경우에도 어떤 재정지원방식이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주간보호시설처럼 중증장애인 중심의 이용이 중요한 서비스의 경우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운영비용을 가산하는 중증장애인 비용가산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런 면에서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공급자지원 방식보다는 수요자지원방식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제도 변화가 단기간에 어려운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장애인 활동센터’로 개칭하고, 그 내에서의 종류도 ‘중증 장애인 활동센터<sup>16)</sup>’, ‘장애인 활동센터’로 구분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센터’에 대해서는 인력 및 공간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6) 중증장애인활동센터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4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동발달장애센터’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대안적인 전달체계로 시도되고 있는 맞춤형전달체계의 기능과도 부합한다. 맞춤형전달체계를 통해서 서비스 심사와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이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역할을 다양한 지역사회재활시설들이 담당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4. 고용 및 직업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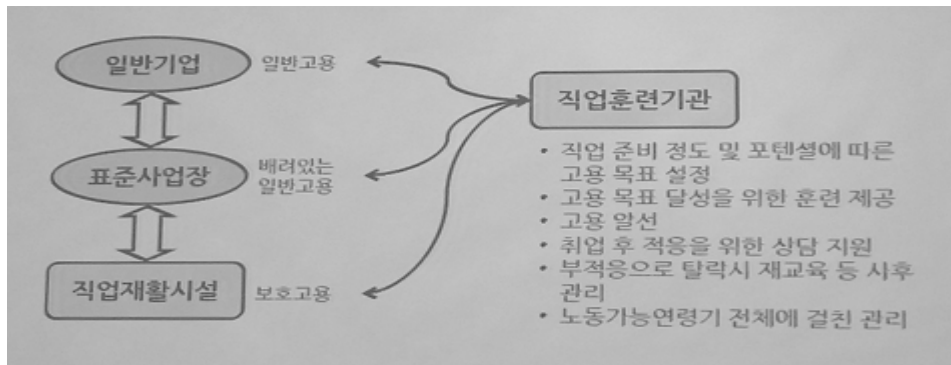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분야에서 차별금지제도와 할당고용제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지난 20년간 할당고용제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할당고용제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경증장애인의 직업에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제로, 할당고용제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에 접근하도록 하는 지원의 기제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의무 할당제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무고용율의 일정 비율을 중증장애인에게 할당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의무고용율 3% 중 1% 이상은 중증장애인에게 할당하는 것이다(박경수, 2015).

고용 및 직업재활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 영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법상의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새로이 설치하는 방안이다(박경수, 2015). 이 시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은 기존 직업재활시설과 차별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인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특화된 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에 진입하는 접근의 통로로 설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재활시설은 발달장애인의 직업평가와 탐색, 일정기간의 직업준비훈련, 일정기간의 현업경험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규모 있는 시설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시설은 발달장애



인이 특수학교(특수학급)나 특수학교 전공과를 졸업하고 직업의 세계로 처음 진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기관을 통하여 지역사회 일반 고용으로 직접 연계되거나, 특화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정한 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특화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정한 직업 경험을 거치거나, 지역사회의 다른 직업재활시설로 연계되는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이 시설 모델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교육부(서울특별시 교육청)가 파트너십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와 유사하다. 이 시설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모델 개발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시설의 역할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진희, 2015).

<그림 3-3-1>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훈련시설이 역할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으로 직접고용이나 대기업 고용을 강조하는 현재의 고용정책을 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에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진희, 2015).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제도적 기제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 5. 보조기구서비스

보조기구 분야는 여러개의 부처와 법률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범 국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는 수요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노인,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기구를 적절한 전달장치를 통해서 제공해야 하는 측면이다. 둘째는 공급 측면에서 접근이다. 보조기구는 수요가 계속 증가할 산업영역이다. 이 영역에 대해서 산업관리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다.

보조기구 수요측면에서는 다음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첫째, 보조기구의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재활공학기기, 보장구, 보조장구, 복지용구 등으로 무질서하다.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고, 수요영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에 보조기구 관련 조항들이 있다(남세현, 2015). 이들 조항들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표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부 품목 등에서 달라야 하는 점은 명확히 달리해서 각 법률의 역할분담체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수준에서 정비아젠다를 설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달리해야 하는 것은 명확히 달리하고,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보조기구기본법과 같은 법이 필요하다면 제정해야 한다. 관련법령의 정비는 장애인정책국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사회보장위원회에 이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조기구의 공급측면에서는 두 가지 점이 집중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제품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수요자와 다양한 보급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품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품의 부품들도 서로 다른 목적의 보조기구 간에도 통일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그래야 이용자 편의성과 제품 생산과 유지관리 측면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략적인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경쟁력이 낮은 기구는 수입하고, 높은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보조기구 분야는 경쟁력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에서 제작하고 있는 생산품의 수준과 종류를 능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정책국 수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급여는 이용자격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예산의 규모도 14억에 불과하다. 의료적 속성을 갖는 보조기구와 기본적 속성에 속하는 휠체어 등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제공된다. 장애인정책국의 보조기구 분야는 '적극적(활동적, 자립적) 속성을 갖는 보조기구 분야'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이 분야의 개념도 만들고, 이 개념에 속하는 구체적인 제품들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AAC), 발달장애이용보조기구(안전용 위치추적기, 복약관리기, 스케줄관리기기 등) 등과 같이 새로운 욕구분야 이면서 자립을 돕는 섬세한 품목들로 구성해야 한다. '적극적 속성을 갖는 보조기구 분야'의 개념과 품목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개념의 급여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항목으로 추가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자립적 속성을 갖는 보조기구'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활동보조에 사용되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사전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활동지원서비스에 포함될 보조기구 급여의 범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둘째, 활동지원에 추가될 급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예산확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 보조기구를 활동지원급여에 포함시키는 과제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람이 제공하는 활동보조와 기구가 지원하는 공학적 지원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상호 상쇄(trade off)하는 측면도 있다. 첨단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경우에는 보조기구인 로봇이 사람의 활동보조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지려면 활동지원서비스에 자립생활지원과 긴밀히 관련된 급여는 통합되어야 한다. 일본, 영국 등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 6. 등급제 폐지(개편)와 맞춤형 전달체계

장애등록 및 등급제도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이다. 1988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을 시작했다. 장애인등록제도 시행당시 장애유형은 5개 유형(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5개 유형(뇌병변, 자폐, 정신, 신

장, 심장장애), 2003년에 5개 유형(호흡기, 간, 장루요루, 안면, 간질장애)이 추가되어 현재는 15유형의 장애를 포괄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에 수준이며, 2000년 등록장애인 수 약 100만 명의 2.5배 수준이다. 장애인구수의 증가는 장애범주 확대 영향도 있지만, 장애인정책의 발전과 복지급여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 당시에는 장애인으로 등록해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장애로 등록하는 비율은 40% 이하 수준이었다.

장애인등록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서비스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항공요금 할인,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의료비 지원, 이동통신요금 할인, 건강보험료 감면,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각종 감면 또는 할인제도가 확대되면서 지급대상을 결정하는데 장애등급을 주요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등의 핵심적인 장애인복지제도에서도 장애등급을 급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현금급여, 현물급여, 감면 또는 할인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복지급여는 80여종에 이른다.

장애등급제를 둘러싼 갈등은 복지급여 확대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2007년 중증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통해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전에 지역 병의원 의사들로부터 판정받은 장애등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장애등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는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등과 함께 더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에 복지급여를 받던 사람이 등급재판정을 통해 탈락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단체들은 201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장애등급제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비인간적인 제도임을 역설하면서 등급제 폐지라는 대안을 정치권에 호소하였다. 등급제 폐지는 당시 새누리당, 민주당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었고, 현재는 등급제폐지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등급제폐지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이슈이다. 장애등급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지급여 전달비용을 낮추

는 행정효율성이 높은 장치이다. 그러나 복지급여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는 개별중심의 지원, 맞춤형 복지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판단하는 장애정도에 모든 급여를 맞추는 매우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이런 면에서 등급제폐지는 정당하다. 그러나 등급제 이후의 단기 대안마련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급제폐지 이후에 복지급여의 기준이 복지제도 마다 각각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장애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장애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장애기준, 각종 감면 및 할인제도 대상 장애기준 등이 각각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제도 마다 신청 시에 장애정도심사 및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도단위로 assessment 절차가 마련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전면적인 대 개편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정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등급을 없애고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애등급제폐지는 자원중심(resource-led, service-led) 사정에서 욕구중심(need-led) 사정으로 변화 필요성 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욕구주도 사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사용할 수 있는 욕구사정을 위한 사정 도구 또는 패키지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사정 도구 또는 패키지를 사용할 공공분야 사회복지사들을 사정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훈련 받은 전문가들의 사정결과가 존중될 수 있는 행정에서의 재량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도구를 기계적 사용하여 cutting point를 정하는 방식에서는 욕구주도의 사정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대안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향후 장애등급제는 전면 폐지(개편)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중요하다. 첫째는 등급제 폐지 이후 각 서비스별 장애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등의 소득보장 제도에 적용할 장애기준, 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제도에 적용할 장애기준, 감면할인 및 이동지원 제도에 적용되는 장애기준의 마련이다.<sup>17)</sup> 둘째는 장애인의 개인적인 욕구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서비

17) 등급제 폐지의 이슈는 이제는 구체적인 논의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 장애인연금, 복지서비스, 감면할인 등의 제도 목적에 맞게 장애정도가 고려되는 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수준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기준만으로 장애인연金的 지급도 가능하다. 또 동일한 저소득인데 장애정도가 더 중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되

스를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시범사업은 등급제 폐지이후를 서비스 분야(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현금급여 제외, 단 욕구 확인 시 의뢰 역할은 수행)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대안을 모색한다. 연금공단이 심사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지원계획의 개요적인 제안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의 심의위원회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제공서비스를 정한다.

## 7. 발달장애인법과 지원체계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의결했던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의 시행 시점의 평가를 보면 이 법의 시행으로 당초 원했던 발달장애인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반면에 이 법의 시행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제고하고 별도의 정책접근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설정은 크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측면과 지원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측면이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주장하거나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달장애인이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기본 취지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사회의 책무로 선언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이 통상적인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간단한 단어나 그림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을 이해하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교육부의 의사소통도구 개발과 활용, 행정자치부의 의사소통지침 개발과 교육).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발

---

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 심사는 의학적 기준 중심으로 측정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기능적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측정차원으로 가면 사실상 의학적 기준과 큰 차이를 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가정하면). 활동지원제도의 인정심사의 수준도 좀 더 섬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감면할인제도에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중증장애인에게 국한된 또는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감면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중경증 정도의 구분은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가시적인) 수준의 큰 가닥을 정리하는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달장애인을 이해하는 사람으로부터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담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의 지정과 교육).

권리보장을 둘러싼 쟁점은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의 관계부처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 시행령의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등에서 관련부처의 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지정하였다. 이 부분은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이행할 것인가의 온도차가 매우 중요하다.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계가 계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욕구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법에서 권리구제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계 설정의 문제도 중요해 보인다. 현재 발달장애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체적으로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을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권리구제의 문제는 전담검사나 전담사법경찰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보건복지부 수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권리구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 및 광역)는 권리구제 기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 및 광역)는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에 시행해야 하는 권리보장 지원방법을 안내하고, 시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로 설정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옹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측면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지속적이면서 밀착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서비스 전달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비스의 핵심 기준은 개별화와 당사자 의사의 존중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통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활동을 설계하는 일이 개인별지원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었다.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지는 조직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다. 전국을 관장하는 중앙센터와 광역자

치단체별로 1개씩 지역센터를 필수적으로 만들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시군구의 경우는 의무는 아니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사실 광역센터가 시·도지역의 전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별화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김진우, 2015).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센터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개인별지원 계획 수립과 개별화된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그런데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의 임의사항이 이기 때문에 조만간 설치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 등급제 폐지(개편)이후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등과 별도로 발달장애인지역센터를 새로운 조직으로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시군구 수준의 지역센터 설치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두 가지 보조적인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역할을 지역의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고, 광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이를 지원·관리하는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관 등이 지역센터는 아니지만 발달장애인법상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실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맞춤형전달체계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맞춤형전달체계의 핵심역할은 지자체가 하고, 장애인의 욕구심사는 연금공단이나 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지자체가 개인별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역내 서비스기관을 통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해서 일상이 본인의 상황과 취향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하고, 커피만들기를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좋아하는 일들을 일상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인별지원의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거주시설 이용, 복지관 이용, 주간보호 이용, 보호작업장 이용 등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서비스였다면,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는 개인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는 최대한 유연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이 가지는 핵심적인 두 가지 측면 외에 더 근본적인 과제가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서의 중증과 고령발달장애인의 배제 문제이다.



스스로 ADL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자해나 타해 행동을 포함하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배제 문제는 서비스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보조제도를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장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원강도가 훨씬 높아야 하는 중증의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들 기관들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중심기관들이며,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비율은 전체 이용자의 60-90% 수준으로 높다. 이들 기관의 재정지원기준에서 중증의 발달장애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의 진입은 어렵다.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기관의 통상적인 직원과 이용자 비율이 10:3이라면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1:1 또는 1:2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거주시설, 복지관, 주간보호 등의 기존 기관에 이런 제도가 추가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법에 의해서 새로 설치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이런 서비스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고령 발달장애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들이 40대 전후에 이르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 등과 같이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에서 배제되기 시작한다. 일반가정에 사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20대 이용률이 40%, 40대 이용률이 20%, 50대 이용률은 10% 정도로 급격히 낮아진다. 이 역시 중증발달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 제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성인기 이후의 서비스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40대 이후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들이 지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부모들이 끝까지 발달장애인 자녀와 살려고 하다가 70, 80세가 되고, 발달장애인 자녀가 40대를 넘기면 눈물을 머금고 시설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은 최근 거주시설 신규 입소자의 연령별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발달장애인법의 시행 시점에서 전체 장애인의 7%에 불과한데, 그리고 장애관련 법률들이 있는데, 왜 굳이 발달장애인법을 따로 만들어야 했는가?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에서 'one of them' 또는 '1/N'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2012-13년 기준으로 보면 18세 이상에 대한 social care 서비스 예산 구성을 보

면 노인 51%, 발달장애인(18-64세) 30%, 신체장애인(18-64) 9%, 정신장애인(18-64) 7%, 기타 3%이다. 노인요양예산이 100이면 발달장애인 예산은 30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총 지출액을 약 3조로 보면 성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예산이 1조 8천억 수준이어야 한다.<sup>18)</sup> 성인 발달장애인 14만 명 모두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1인당 서비스 평균비용은 연간 약 1천 4백만 원 수준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서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평균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2009년 자립지원제도상의 서비스 이용자수를 보면 전체 장애인 이용자 52.8만 명 가운데 지적장애인 이용자는 26.6만 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필요 규모를 산정할 때는 전체 장애인구의 7%로 해서는 안 되며, 모든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떤 형태든 국가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들이 중증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도록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 8. 개인예산제와 서비스 유연화

한국에서도 개인예산제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일단 찬반으로 나뉘는 것 같다. 찬성은 이용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반대는 선택도 의미 있게 높아지지 않고 제도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양쪽의 주장은 모두 일정한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 자체의 도입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예산제도에서 자기주도 지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지방정

18)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은 얼마정도일까?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합하여 매우 대략적인 수준에서 막연하게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포함) 예산의 70%인 약 4천억, 장애인복지관 예산의 약 70%인 약 3천억, 직업재활시설 예산의 약 80%인 1천 5백억, 주간보호시설 예산의 약 90%인 약 5백억, 활동지원 예산의 40%인 약 3천억, 발달재활과 가족지원을 합친 예산의 100%인 약 1천억 등이다. 합해서 1조 3천억 원이다. 영국과 한국의 노인서비스 분야와의 예산구성 비율만을 기준으로 보면 약 5천억 정도가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서비스 수준이 영국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예산확보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과 인프라인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부는 장애정도와 생활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토대로 잠정예산(initial budget)을 배정하고, 자기주도계획(self-directed plan)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서는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바를 중심에 놓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족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작성한다. 그 다음에 이 계획서대로 비용을 집행해도 되는지를 지방정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 관계된 기관을 이용하거나 발달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계획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필요한 훈련과정에 등록하거나 등에 정부비용이 지불된다. 이 때 비용 지불을 지방정부에 위탁하거나 또는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방정부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스스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확정된 자기주도계획 중에 물건을 사야 하거나 개별적인 여가활동비 등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돈은 현금으로 받고, 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등의 돈은 지방정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이전하여 지출한다. 이 때 현금으로 받는 경우를 서비스현금지급이라고 한다. 현재 개인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지방정부에 시행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현금지급은 개인예산제도의 일부이다.

현재의 영국 개인예산제도를 주도하는 슬로건은 personalisation이다. 지원이 인간적이어야 함을 뜻한다. personal budget는 이전의 rigid budget를 대체하자는 것이다. service 중심의 budget에서 individual 중심의 budget으로 가자는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의 중심은 현금을 지급하느냐에 있지 않다. 대신에 자기주도성에 방점이 있다(이동석, 2015). 정부의 딱딱하고 규칙에 맞게 배열된 서비스가 아닌 개인이 하고 싶은 바를 도와주는 유연하고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법이다.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는 과정은 standardization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메뉴를 정하고, 각 메뉴의 가격을 정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서비스 양을 정하고, 이용자는 정해놓은 메뉴를 선택해서 이용하고, 여기에 정부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표준적 모습이다. 그리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서로 양해하여 메뉴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 부정수급이 된다. 메뉴에 없는 서비스가 진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인 경우에도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이것이야 standardization의 모습이다. 인간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제도의 실행을 위한 서비

스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은 바로 이 표준화의 과정이다. 이 표준화의 반대말이 personalisation이다. 메뉴를 미리 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정해진 비용의 범위에서 진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창의적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래서 personal budget, self-directed support, personalisation은 같은 모습이다. 서비스 문화의 큰 흐름을 제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총체적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문화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활동지원제도,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의 모든 서비스 제도와 기관에 적용되는 문제제기이다. 개인예산제도는 사람 중심의 제도, 사람중심의 기관으로 변신해야 하는 인간적인 압박이다.

서비스 공급측면에서 보면 개인예산제로의 변화는 더 급격한(radical)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 연단위로 지원되는 예산은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서비스 기관은 급여자격을 가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판매한 매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보다 더 나아가 복지기관이라는 범주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주간활동 서비스로 제빵을 배우고 싶으면 주간보호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 꼭 가야할 필요는 없다. 제빵전문업체가 제빵기술 교습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가면 된다. 운동을 하고 싶으면 장애인체육관에만 가야할 필요는 없다. 정부에서 받은 서비스에 상응하는 현금을 가지고 동네 체육관을 이용하면 된다. 우리는 이런 급격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서비스 공급영역이 이렇게 재편되는 상황을 현재의 복지기관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반 지역사회 기관들에 대한 장애인의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 제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동네 체육관을 갈 수는 있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 되지 않으면 개인예산제도의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도 개인예산제는 찬반의 주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장기적인 여정이 필요하다.

## 제4절 전망

한국의 장애인서비스를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본다면 분리에서 지역사회의 삶으로, 지방정부가 중심역할을 하는 체계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일하는 협력의 체계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은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라는 슬로건과 이 슬로건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주제는 장애인서비스 정책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현재 중요하게 제기되는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차원 1> In-Home서비스 강화	<차원 2>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차원 3> 지역사회의 Empowe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범위 확대</li> <li>- 시설입소자의 탈시설</li> <li>-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와 정상화</li> <li>- 중증장애인 고용할당제 실시</li> <li>-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재활 시설 설치</li> <li>-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li> <li>- 발달장애인지원체계 강화</li> <li>- 개인예산제와 서비스 유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li> <li>-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체제 개편</li> <li>-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체제 개편</li> <li>-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체제 개편</li> <li>- 발달장애인지원체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SS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조직화</li> <li>-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li> <li>- 발달장애인지원체계 강화</li> <li>- 개인예산제와 서비스 유연화</li> </ul>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 차원1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차원2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차원3은 민간서비스 주체들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의 변화가 얼마나 가속화 될 것인가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적극적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 분절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적 잠금현상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공평한 서비스 접근이 보장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일상에서 사회적모델과 자립생활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라는 기반이 꼭 필요하다. 당사자단체, 민간서비스주체, 정부의 협력적 역동성 이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제 4 장

아동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





# 4

## 아동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



### 제1절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진단

□ 아동분야 현행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진단은 서비스 종류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서비스 양과 질의 적정성(adequacy), 서비스 대상자격의 타당성(valid entitlement), 그리고 서비스 공급방식의 체계성(systemicity)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포괄성은 아동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특성을 얼마나 포괄하여 현재 사회 서비스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임.

○ 적정성은 현재의 아동사회서비스가 양과 질에서 적정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의미함.

○ 대상자격의 타당성은 아동의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대상 아동이 타당하게 선정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 체계성은 아동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가 공공과 민간 간 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균형 측면에서 역할 분담이 얼마나 체계적인가와 관련됨.

○ 서비스 공급주체 성격의 공공성 강화도 이러한 공급방식의 체계성 논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국가 직영 비율을 증가시켜야 하는 서비스 영역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아동사회서비스가 내용과 종류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적정하며, 정책대상 아동이 타당성 있게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정책 사업이 기능적으로 체계적인 방식으로 공급될 경우, 아동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는 타당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장에서는 아동사회서비스를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진단하고, 쟁점을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향후 아동사회서비스 사회보장체계 개편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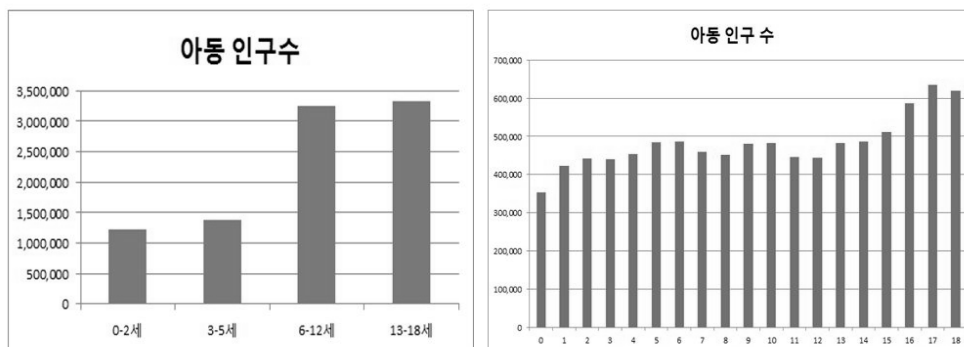
- 아동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현황 진단하기에 앞서 우선 아동의 주요 인구경제학적 특성 현황을 간략히 살펴봄. 아동의 연령별 분포, 저소득 아동의 비율, 요보호 아동의 비율과 특성, 장애아동의 분포 등을 살펴볼 것임.

## 1. 아동의 인구경제학적 특성 현황

- 먼저 아동인구수를 세부 연령과 주요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많은 아동대상 사회서비스 보장 사업들은 영유아(0~2), 학령전(3~5), 초등학교령기(6~12), 중고등학교령(13~18) 아동으로 구분되어 설계, 집행되는 특성을 보임.

- [그림 1]을 보면 현재 아동인구는 초등학교령기인 6~12세 아동과 중고등학교령기인 13~18세 아동인구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연령대별로 아동인구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저출산의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나, 특정 연령대(현재 7세와 8세, 그리고 11세와 12세 아동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0세 아동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은 저출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 4-1-1] 연령별 인구수(연령대별, 각 연령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7년 9월 기준)

□ 아래의 <표 1>은 전체 아동인구 대비 저소득층 아동의 인구비율을 아동연령대 별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음. 전체 아동 중 약 2.6%가 저소득 아동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전체 인구 중 공공부조 급여 수급 인구 비중 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남. 공공부조 급여수급 인구 중 고령자 인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인 대비 아동인구의 빈곤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저소득 아동들은 아동대상 사회서비스의 우선적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인구의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만 함.

<표 4-1-1> 전체 아동인구 대비 저소득 아동인구 비중

연령별	주민등록상 아동인구	저소득층 아동인구	비중 (%)	비고
전 아동	9,678,277	247,665	2.56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과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명시한 빈곤아동에 관한 정의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인구 계산
0-2세	1,407,368	11,995	0.85	
3-5세	1,407,946	17,116	1.21	
6-8세	1,357,821	24,138	1.78	
9-11세	1,546,502	39,403	2.54	
12-14세	1,897,030	65,081	3.43	
15-17세	2,061,610	89,932	4.36	

자료: 2013 아동실태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수정, 재구성

□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소득 인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중고등학령기의 아동 중 저소득아동 인구 비중이 높음.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요보호 아동이란 보호자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부재한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 2조)함. 전통적으로 이러한 요보호 아동이 아동복지사업의 핵심 대상이었으며, 현재와 같이 보다 포괄적인 아동사회서비스 보장체계로의 확장과정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는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짐. 가정위탁 사업, 실종아동보호, 입양아동지원사업, 아동생활시설지원과 자립지원사업 등은

대표적인 아동복지사업으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과는 정책대상과 급여내용에서 차별적인 특성을 가짐.

□ <표 2>는 요보호 아동 인구와 조치 내용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줌. 전체 요보호 아동 중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비율은 약 63%에 달함. 가정보호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을 통한 가정보호 건수는 증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시설을 통한 보호비중이 높음.

<표 4-1-2> 요보호 아동 조치 연도별 추이

연도	계	장애 아동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생활 가정	소계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 위탁
2016	4,592	218	2,894	1,736	541	12	605	1,698	6	243	1,024	425
2010	8,590	447	4,842	2,445	1,751	23	623	3,748	231	1,393	2,124	
2005	9,420	363	4,818	4,769		48	1	4,602	407	1,873	2,322	
2000	9,085	482	4,481	4,332		64	85	4,604	564	1,755	2,285	

자료: 통계청(2016)

□ <표 3>은 아동대상 사회서비스 중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인구집단으로서 장애를 가진 아동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음. 아동인구 전체를 보면 지적장애의 비중이 전체 아동장애의 거의 50%를 차지함. 자폐와 뇌병변 장애가 각각 15% 정도로 나타나 그 비중이 높음. 지적장애와 자폐, 뇌병변 장애를 합쳐서 80%에 이룸. 청각, 지체, 시각, 언어장애를 합쳐서 약 18%이며, 그 밖의 정신 및 신체 장애의 비율은 약 2%에도 채 미치지 못함.

&lt;표 4-1-3&gt; 아동연령대별 장애 특성

구분	0-2세	3-5세	6-12세	13-18세	계	비율
지체	96	272	1164	2801	4333	5
시각	89	223	946	1779	3037	4
청각	331	563	1616	2063	4573	6
언어	23	712	1136	452	2323	3
지적	125	1777	14647	22855	39404	49
뇌병변	896	2233	4397	4856	12382	15
자폐	9	1063	5987	6199	13258	16
정신	0	0	0	66	66	0.1
신장	6	15	57	163	241	0.3
심장	3	32	119	259	413	0.5
호흡기	4	5	20	25	54	0.1
간	26	59	179	177	441	0.5
안면	0	2	17	52	71	0.1
계	1,608	6,956	30,285	41,747	80,596	100
비율	2	9	38	52	100	

자료: 통계청(2016) 자료 연령별 재구성

□ 지적 장애 아동에 대한 적기개입의 필요성과 효과성, 개입효과의 비가역성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러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적극적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 아동 사회서비스 보장사업 현황 진단

□ 현행 아동영역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진단을 위해서, 핵심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설정함. 첫째, 사회서비스 욕구기준, 둘째, 정책대상 선정에서 기초적인

인구학적 기준과 경제적 기준, 셋째, 정책사업의 공급체계의 체계성 기준임.

○ 첫 번째, 욕구기준으로 사회서비스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욕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함.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아동 사회서비스를 주요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파악함.

○ 다음으로 이러한 사회서비스들의 대상아동의 자격은 타당성 있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인구학적 조건으로 연령(영아, 학령전, 학령기 등), 요보호 상태(보호자 부재 여부), 장애여부와 종류(신체적, 인지적, 발달적, 정신적 장애 등)에 따른 대상자격 판정 상황 진단.

- 다음으로는 경제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격 판정 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경제상황(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상태)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함.

○ 셋째, 사회서비스 보장사업 공급주체의 성격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전국단위에서 실행되는 중앙정부 사업,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함. 사회서비스 보장의 체계성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함. 향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만 하는 정부 간 역할분담의 층위(functional layer)를 파악할 수 있게 함.

- 직접적으로 사회서비스 보장사업을 실행하는 공급기관의 성격으로 민간과 공공의 비중도 파악하여 공공성 정도를 평가

- 생활시설, 이용시설, 재택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소에 따른 구분도 공급방식의 현황과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가. 서비스 유형별 아동사회서비스 현황 진단

□ 이상에서 제시한 3가지 핵심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체계의 진단을 위해 먼저 현행 아동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틀을 서비스 주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봄.

- <표 4>는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보육제외)을 핵심적 욕구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임. 현금성의 기초소득 지원, 건강과 보건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권리보호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함.
- 서비스 유형별 현행 아동사회서비스의 분포를 보면,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서 돌봄서비스의 수가 가장 많음. 대표적 사회서비스로서 보육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서비스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돌봄지원 아동사회서비스임. 그 밖에 각종 아동생활시설지원도 이러한 돌봄지원서비스 유형에 속함. 가정위탁사업이나 입양지원사업도 이러한 큰 틀에서는 돌봄지원사업 유형에 포함되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이러한 돌봄지원 사업이 많음.
- 타부처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아동사회서비스이며,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이나 위기상담 종합지원 등도 이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임.

&lt;표 4-1-4&gt;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현황(보육제외)

서비스 유형	소득지원 (현금)	건강 (보건)	생활지원		권리확보
			돌봄	재활	
주요 사업 내용	-아동수당 <sup>19)</sup> -장애아동수당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돌씨앗) -퇴소아동자립장 학급(정착금)(지 자체 자체사업 예) -소년소녀가장지 원(지자체 자체 사업 예)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여가부)	-모자보건 -영유아예방건 강관리 -기저귀·조제분 유 -어린이건강보 호종합대책지원 사업(환경부) -미취학/or저소 득아동구강보건 교실운영(지자체 자체 사업 예)	-보육지원(별도표)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등 사 례관리(드림스타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 아동서비스 -아동복지시설운영 -공동생활가정운영 -장애영유아시설 -입양지원 등 -가정위탁운영 -결식아동급식 -결연기관운영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 센터/지역아동센터행사/ 대체인력/온라인수강비 (지자체 자체사업 예) - 아이돌보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 미,공동육아나눔터(여가 부) -초등돌봄교실, 학생위 기상담 종합지원(교육부)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 원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 아동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언 어발달지원서비스(여 가부)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 등(여가부)	-아동인권증진 -실종아동보호 -안전사고 예방 -아동복지교사 -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어린이교통안전교실운 영(지자체사업 예)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전기요금(지자체 사업 예) -아동안전지킴이(경찰 청)

□ 한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서비스는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  
 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특성을 분류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대상서비스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2012년도의  
 경우, 예산 비중이 약 60%에 달함), 그 중요성이 점차 더 커져간다는 점을 감안,  
 아동사회서비스 현황을 논의할 때 포함시켜야 함(뒤의 <표 5>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

□ 한편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소득지원 유형에 속하는 사회서비스는 소  
 수에 지나지 않음. 2018년부터 실행될 아동수당 제도가 포함되면 이 영역의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임. 현재로는 생활시설거주 아동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19) 아동수당은 내년(2018)부터 5세 미만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공표되어 있다. 자녀 1인당  
 세액공제 15만원을 합치면, 5세 미만 아동 1인당 연 135만원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7.8.2.일자 경향신문).



아동들만이 대상이 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과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정도가 이 유형에 해당되는 전국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영유아를 포함하여 아동기 예방적 보건지원의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서비스 영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못함. 모자보건서비스나 영유아예방건강관리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여전히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아동권리 확보 영역의 경우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안전사고예방사업, 실종아동 보호 사업이 포함되고 있음. 기타 각종 아동안전 확보 및 권리 보호 사업은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실행되고 있음.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면 시행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사업과 지역의 자체 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확충되고 있는 아동사회서비스 영역 중 하나가 재활지원서비스임.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최근 3~5년 사이에 실행,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로서 의미를 가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도 이 영역에 속함.
- <표 5>는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중 보육분야만을 따로 구분하여 그 틀을 제시한 것임. 정책대상 인구나 예산의 규모, 정책사업의 종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보육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봄.

&lt;표 4-1-5&gt;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보육부문

보육지원유형	보육료 지원 (수당)	보육환경 개선		
		인력/운영 지원	기관인프라 지원	관리/품질향상
주요 사업 내용	-영유아보육료 -시간차등형보육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보육료 -----* -누리과정보육료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가정보육교사 수당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어린이집 문화체험비 -어린이집 난방비 -공공형 조리원 인건비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 영아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사업관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실태조사 -공익제보자신고포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육아종합지원센터(경상) -육아종합지원센터(자본) -어린이집교원양성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육아지원센터 운영 -종사자 소양교육 -평가인증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 밑줄 아래의 사업들은 지자체의 사업들 예시임

□ 보육서비스는 정책대상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하는 사업과,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영역으로 구분 가능함. 보육환경 개선 영역은 보육제공인력과 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과 보육기관 확충과 같은 인프라 구축사업,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관리 사업으로 세분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료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시간차등형보육이나 장애아보육과 같은 특수 보육 욕구에 대한 대응 사업도 확충되고 있음. 보육환경개선 영역에서는 인력지원과 기관운영지원 영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가장 대표적임.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영역의 경우 영세사업들이 많으며 지역밀착적 품질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음(김은정, 양기용, 2015).

## 가. 주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사회서비스 현황

## 1) 연령 별

□ 현행 아동사회서비스를 아동의 주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파악함<표 6>. 전체적 아동사회서비스의 종류는 0~2세 영유아 대상과 6~12세 초등학령기 대상이 많은 편임. 보건복지부의 돌봄지원서비스나 보건서비스는 3~5세 보육서비스를 포함하여 주로 0~5세 아동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줌. 초등 및 중고등 학령기 아동에게 집중되는 사회서비스는 돌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초등 방과후 돌봄사업이 대표적이며, 주로 안전확보 측면의 서비스가 많은 편임.

□ 아동전 연령대에 걸쳐 지원되는 서비스도 과거에 비해 증가함<표 7>.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영역에서 전 연령대에 걸친 아동에 대한 돌봄과 재활서비스가 증가한 것이 특징임.

&lt;표 4-1-6&gt; 아동 연령별 사회서비스

서비스 유형/ 연령대	소득지원 (현금)	건강 (보건)	생활지원		권리확보
			돌봄	재활	
0~2세	-아동수당	-모자보건 -영유아예방건강관 리 -어린이건강보호중 합대책지원사업(환경 부)	-영유아보육료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장애영유아시설 - 공동육아나눔터 - 아이돌보미		
3~5세	-아동수당	-미취학/저소득아 동구강보건교실운영( 지자체사업)	- 보육료 지원 - 장애영유아시설 - 아이돌보미 - 공동육아나눔터		
6~12세			-초등돌봄교실,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교육부) -아이돌보미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급식		-어린이교통안전 교실운영(지자체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전기요금( 지자체사업)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
13~18세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소년소녀가장 지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등	

&lt;표 4-1-7&gt; 전 연령 아동대상 사회서비스

서비스 유형	소득지원 (현금)	건강 (보건)	생활지원		권리확보
			돌봄	재활	
전 연 령 (0~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돌씨앗)</li> <li>-장애아동수당</li> <li>-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여가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건강보 호종합대책지원 사업(환경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 아동서비스</li> <li>-아동복지시설운영</li> <li>-공동생활가정운영</li> <li>-입양지원 등 (복권기금)</li> <li>-결연기관운영</li> <li>-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li> <li>-가정위탁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발달지원사업</li> <li>-발달재활서비스</li> <li>-장애아가족양육지 원</li> <li>-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 아동서비스</li> <li>-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여가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인권증진</li> <li>-실종아동보호</li> <li>-안전사고 예방</li> <li>-아동복지교사</li> <li>-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아동보호 전문기관지원)</li> </ul>

## 2) (경제적 기준 외) 취약아동 대상 아동

□ 저소득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사회서비스는 아니지만, 다른 취약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사회서비스를 구분해본 것이 <표 8>임.

□ 생활시설거주 아동의 경우 퇴소 시 정착자립금이나 장학금 지급,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대상선정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는 하나, 그 외의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임. 가정위탁사업이나 입양지원서비스도 보호자 부재라는 요보호 상황을 고려한 사회서비스임.

□ 다문화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도 다양한 취약성을 가질 위험이 있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행되고 있음. 학대나 방임 피해를 받는 아동들을 위한 보호서비스 또한 학대위험에 처한 취약아동들을 명시적인 정책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임.

&lt;표 4-1-8&gt; 취약아동대상 사회서비스

서비스 유형	소득지원 (현금)	건강 (보건)	생활지원		권리확보
			돌봄	재활	
취약아동 서비스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소년소녀가장 지원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여가부)		-아동복지시설운영 -공동생활가정운영 -입양지원 등 (복권기금) -가정위탁운영 -결식아동급식 -결연기관운영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여가부)	-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아 동보호전문기관 지원)

### 3) 장애아동 대상 서비스

□ 취약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중에서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구분해 본 표가 <표 9>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소득지원 유형의 장애아동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정에 한 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까지 고려한 급여임. 인구학적 특성으로 장애여부만을 고려한 수당은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장애아동보육지원, 장애영유아시설운영, 6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돌봄 지원서비스임. 재활서비스의 경우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이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음.

&lt;표 4-1-9&gt; 장애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서비스 유형	소득지원 (현금)	건강 (보건)	생활지원		권리확보
			돌봄	재활	
장애아동서 비스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보육료 -장애영유아시설 -장애인활동보조(6세이 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 아동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 아동서비스	

## 나. 저소득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 초기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은 보호자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부재한 요보호 아동에 집중되었으나, 요보호의 현실적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보호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가정의 아동이 주요 정책대상이 되어왔음.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많은 경우 아동대상 사회서비스 정책의 우선적 대상이 되고 있음.
- 소득지원 서비스의 경우 아동수당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이 대상이 되고 있음. 보건서비스의 경우도 저소득층 아동이 대상이며, 돌봄서비스의 경우도 저소득층 아동만이 대상이 되거나 혹은 대상자 선정시 소득수준이 일차적으로 고려되는 특징을 보임. 향후 아동수당이 실행된다면 최초로 보편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사업이 될 것임.
- 다만 최근에는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고려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소득기준이 점차 완화되는 특성을 보이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나 아이돌보미 사업 등에서는 본인부담금의 정도를 소득수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면서 서비스의 보편적 확대를 꾀하기도 함.
- 돌봄육구를 충족하는 사업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생존권적 돌봄지원과 보호자가 있는 일반아동 대상 돌봄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정책대상아동 선정시 고려되는 사업이 많으나(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과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사업), 점차 경제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현재 이용아동의 약 23.5%가 기초생활수급가족 아동이며,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가정아동이 약 38%, 중위소득 85%이상 가족 아동이 36.5%임(보건복지부, 2017).
-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아동 71.1%, 차상위가정 19.3%, 한부모가정 9.3%임(보건복지부, 2017).

- 한편 아동재활지원서비스나 아동권리확보서비스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보편적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음. 돌봄서비스 영역 중에서 보육서비스는 현재 소득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보편서비스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음.

<표 4-1-10> 저소득층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서비스 유형	소득지원 (현금)	건강 (보건)	생활지원		권리확보
			돌봄	재활	
저소득 아동 서비스	-장애아동수당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돌씨앗)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여가부)	-모자보건 -영유아예방건강관 리 -미취학/저소득아 동구강보건교실운영 (지자체 자체사업 예)	-기저귀·조제분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의 아동서비스(소득수 준 고려, 본인부담금 차 등 방식) -아이돌보미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급식 -결연기관운영 -취약계층 아동 등 사 례관리(드림스타트)		

#### 다. 아동사회서비스보장 사업 공급 체계 현황(정부 간 역할분담)

- 아동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는 것이 <표 11>임.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지방 정부간 역할분담 방식이 특정한 정책방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음.
- 예를 들면, 기본적 아동권리보호 사업이나 지역간 편차가 없어야 하는 사업, 지역 간 이동성을 고려해서 전국단위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주로 일상생활 돌봄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전국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아동사회서비스는 아동의 기본권 확보

와 관련되는 사업일 것임. 반면 지역내의 유관 사업들과 연계·통합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방정부의 기획과 관리하에 두는 것이 타당함. 지역아동센터사업과 초등방과후돌봄사업, 청소년아카데미 사업 등은 주관 중앙부처가 다르지만,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 다른 예로 아동발달계좌사업은 현재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인데, 퇴소아동장학금(정착금)지원이나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은 지자체 이양사업임. 이러한 사업들은 정책대상과 정책목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급여형태도 현금성 소득지원으로 동일함. 기능적으로 정부 간 역할분담의 방식이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음.

<표 4-1-11> 아동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현황(중앙-지방 정부)

사업 분담	담당 기관	소득지원 (현금)	건강 (보건)	생활지원		권리확보
				돌봄	재활	
국고 보조 사업	보건 복지부	-아동수당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돌씨앗)	-모자보건 -영유아예방건 강관리	-보육지원(별도의 표)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운영 -기저귀·조제분유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 트)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의 아동서비 스	-언어발달지원사 업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서비스	-아동인권증진 -실종아동보호 -안전사고 예방 -아동복지교사 -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아동 보호전문기관지원)
	타부처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여가부)	-어린이건강보 호종합대책지 원사업(환경부)	-아이돌보미, 청소년방과후아 카데미,공동육아나 눔터(여가부) -초등돌봄교실, 학 생위기상담 종합지 원(교육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 스(여가부) -성매매피해청소 년치료재활 등(여가부)	- 아동안전지킴이(경 찰청)
지방 사업	지방 이양 사업	-퇴소아동자립장 학금(정착금) -소년소녀가장지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공동생활가정운영 -입양지원 등 (복권기금-기재부 소관) -결식아동급식 -결연기관운영		
	자체사업 (예시)		-미취학/or저 소득아동구강 보건교실운영	-야간보호전담 지 역아동센터/지역아 동센터행사/대체인 력/온라인수강비		-어린이교통안전 교실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전기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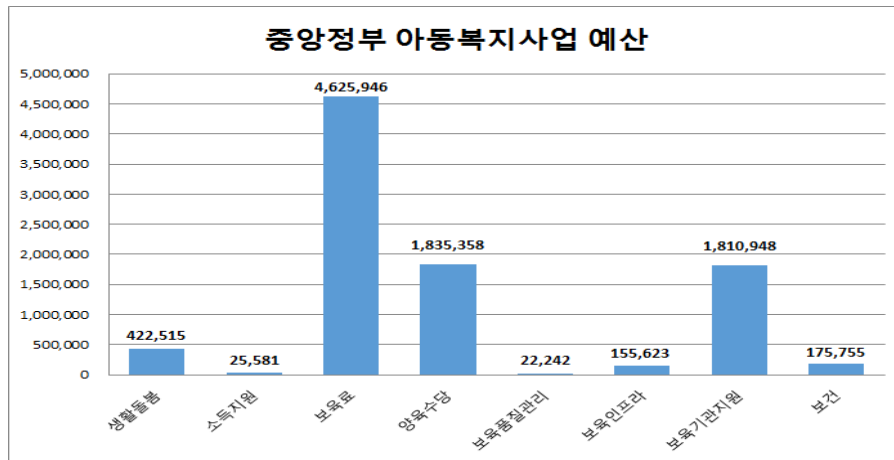
&lt;표 4-1-12&gt; 보육서비스 공급체계 현황(중앙-지방 정부)

담당 기관	보육료지원 (수당)	보육환경 개선		
		인력/운영 지원	기관인프라 지원	관리/품질향상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사업관리</li> <li>-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i> <li>-보육실태조사</li> <li>-공익제보자신고포상</li> <li>-어린이집 평가인증</li> </ul>
국고보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보육료</li> <li>-시간차등형보육</li> <li>-가정양육수당</li> <li>-장애아보육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형어린이집</li> <li>-어린이집기능보강</li> <li>-어린이집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종합지원센터 (경상, 자본)</li> <li>-어린이집교원양성</li> <li>-부모모니터링단 운영</li> </ul>
지방사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리과정보육료</li> <li>-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li> <li>-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저소득층 차액보육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보육교사 수당</li> <li>-어린이집 차량운영비</li> <li>-어린이집 문화체험비</li> <li>-어린이집 난방비</li> <li>-공공형 조리원 인건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li> <li>-영아어린이집 기능보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지원센터 운영</li> <li>-종사자 소양교육</li> <li>-평가인증비</li> <li>-보육정책위원회 운영</li> </ul>

□ <표 12>는 보육사업의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분담의 틀을 보여줌. 대체로 보육료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대표적인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반면, 차액보육료지원이나 난방비, 문화체험비 등의 부수적 서비스에 대한 추가지원은 지방정부 사업으로 실행되고 있음. 다만 서비스 품질관리의 틀이 중앙정부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 한편, 중앙정부 단독사업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동사업의 총 예산을 아동서비스 욕구 유형에 따라 구분해서 대략적 경향을 살펴본 것이 [그림 2]임.

[그림 4-1-2] (중앙정부)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예산 (2017)



- 정부부문의 예산에 대해서도 정책대상 아동 연령대별, 장애여부별, 경제적 특성별로 구분해서 대략적인 경향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아동대상 사회서비스의 주요 특성

- <표 13>는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아동대상 사회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를 제시한 것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에서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서,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음.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동대상 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예산이 대략적으로나마 연 2천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대상 사회서비스 현황을 분석할 때 포함시켜야만 하는 사업임.
- 아동대상 서비스로는 대체로 아동 정서지원서비스,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인지능력개발서비스, 신체발달지원서비스, 그리고 문화체험 서비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서울, 부산,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를

제시하였음. 서비스 대상선정 기준, 서비스의 내용, 자격확인 방법 등에서 각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별 차이와 유사점이 나타남. 대체로 소득기준을 적용하나 몇몇 서비스는 소득제한이 없으며, 문제 중심으로 자격을 판정하기도 함.

<표 4-1-1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대상 서비스의 예(서울, 부산,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비고
정서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 6-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학교 부적응,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추천서 및 검사결과서로 확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만 4-13세 아동 -학교부적응,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추천서 및 소견서, 의료기록 등으로 확인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7-12세 이하 아동 -학교 부적응,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추천서, 검사결과서로 확인	
정신건강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소득제한 없으며,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문제행동관련 의사 진단서, 소견서, 의료기록 등으로 확인.	-기준중위 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중 일정정도의 기준을 충족한 자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인지능력개발	‘아동청소년비전 형성지원서비스’	‘동화야 놀자(스토리텔링)’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가정, 만 7-15세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체험활동 서비스 제공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2-8세 아동 -동화구연, 연극, 발표회 등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7-15세 이하 아동 -비전형성, 현장체험, 신체활동 등 통합서비스 제공	
신체발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만0-6세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후 추후 검사 필요 등급 받은 영유아, 기타 추천서 및 소견서가 있는 아동	-소득제한 없으며, 만 5-12세 아동 -과체중아동 또는 저체중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처방, 식생활 습관 교정지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만 3-9세 이하 아동 -맞춤형 영양, 운동처방 등 체력강화 프로그램 및 정서프로그램	
문화 체험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내 체험활동(외부활동) 서비스 제공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내 문화체험 서비스 제공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만 7-15세 아동 -비전형성 및 비전형성 관련체험(해양생물, 문화, 생태,스포츠 등)		

마. 아동인구의 사회서비스 욕구수준과 이용 상황

- 전국단위 아동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서비스 욕구수준과 실제 이용율 간의 격차 분석도 현행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진단을 위한 필요한 작업임. 아래에서는 0~5세와 6~17세로 구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별 욕구수준과 이용율을 분석함.
- 표를 보면 대체로 영아대상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습이나 문화활동, 취미활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요구도가 높음.
- 주목할 것은 실제 이용율이 높을수록 필요도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그러한 서비스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줌.
- 지역별 편차나 연령별 편차도 다소간 있지만, 소득수준별 서비스 필요도의 편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표 4-1-14> 0~5세 아동서비스 욕구수준과 이용률

구분		영아이용 어린이집		영아를 위한 특별활동		24시간 보육시설		아동상담 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필요	이용	필요	이용	필요	이용	필요	이용	필요	이용
전체		72.8	26.2	77.0	14.8	52.2	2.0	58.2	3.8	59.1	6.6
성별	남자	75.9	28.2	78.4	15.3	53.6	2.1	59.7	3.4	58.3	5.7
	여자	69.5	24.1	75.3	14.1	50.6	1.9	56.6	4.4	60.0	7.6
연령	0-2세	75.4	19.4	76.0	7.1	50.7	1.5	55.1	1.7	56.7	3.8
	3-5세	70.2	33.1	77.9	22.5	53.6	2.5	61.3	6.0	61.6	9.5
소득수준1	빈곤	79.9	25.7	83.9	15.2	57.4	1.7	65.5	3.8	64.1	4.2
	일반	72.6	26.3	76.8	14.7	52.0	2.0	58.0	3.8	59.0	6.7
소득수준2	기초수급	75.9	20.4	81.9	11.8	53.8	2.2	65.5	6.3	64.2	7.8
	차상위	82.6	29.2	85.3	17.4	59.8	1.3	65.5	2.2	64.1	1.8
	일반	72.6	26.3	76.8	14.7	52.0	2.0	58.0	3.8	59.0	6.7
지역	대도시	79.7	25.0	81.8	13.7	60.9	1.5	60.6	0.9	61.6	4.5
	중소도시	68.2	28.5	73.3	16.3	46.0	2.5	56.7	6.3	58.1	8.5
	농어촌	62.7	15.5	73.6	8.5	41.9	0.8	53.5	3.3	49.6	4.8
가족유형	양부모	72.6	25.7	76.5	14.4	52.4	1.8	58.5	4.1	59.2	6.8
	한부모·조손	72.7	41.0	82.4	24.4	51.7	5.4	57.6	0.5	56.5	3.0

&lt;표 4-1-15&gt; 6~18세 아동서비스 욕구수준과 이용률 I

(단위: %)

구분		방과후 학습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	
		필요	이용	필요	이용	필요	이용
전체		73.1	25.8	77.7	25.7	75.2	15.5
성별	남자	72.3	23.2	77.2	25.6	74.1	14.1
	여자	74.0	28.6	78.2	25.8	76.5	16.9
연령	6-8세	79.0	36.3	84.9	38.3	81.3	18.9
	9-11세	80.8	32.8	84.4	37.4	81.0	22.6
	12-17세	68.2	19.8	72.7	17.0	70.9	11.6
소득수준1	빈곤	83.1	35.4	81.6	13.3	75.5	11.0
	일반	72.7	25.4	77.5	26.3	75.2	15.7
소득수준2	기초수급	82.8	36.4	82.2	16.1	76.6	12.7
	차상위	83.7	32.7	79.8	6.0	72.5	6.6
	일반	72.7	25.4	77.5	26.3	75.2	15.7
지역	대도시	74.3	29.5	76.5	25.7	76.1	14.9
	중소도시	73.6	22.6	79.6	26.7	75.6	16.7
	농어촌	61.6	25.4	71.1	17.3	66.4	10.0
가족유형	양부모	73.3	25.3	77.6	27.2	74.9	16.2
	한부모·조손	71.6	28.6	77.5	14.4	76.5	10.8

자료: 2013 아동실태조사 분석자료 재구성

&lt;표 4-1-16&gt; 6~17세 아동서비스 욕구수준과 이용률 II

(단위: %)

구분		상담 프로그램		부모상담		무료급식		학비지원	
		필요	이용	필요	이용	필요	이용	필요	이용
전체		57.9	4.5	55.1	6.0	52.0	9.4	64.0	7.9
성별	남자	57.8	4.1	55.3	5.4	52.1	8.4	62.6	6.5
	여자	58.1	4.9	54.9	6.6	51.9	10.4	65.5	9.3
연령	6-8세	58.0	3.4	60.4	9.2	58.6	9.1	66.2	6.7
	9-11세	61.7	7.4	55.9	8.2	49.4	10.6	58.2	7.0
	12-17세	56.5	3.7	53.1	4.1	51.0	9.0	65.6	8.6
소득수준1	빈곤	68.9	6.6	59.5	4.8	72.8	32.0	82.8	27.2
	일반	57.4	4.4	54.9	6.1	51.1	8.3	63.1	7.0
소득수준2	기초수급	66.1	7.7	56.4	6.0	74.3	33.2	84.9	28.8
	차상위	76.3	3.8	67.3	1.4	69.1	29.1	77.5	22.9
	일반	57.4	4.4	54.9	6.1	51.1	8.3	63.1	7.0
지역	대도시	59.6	5.4	57.3	6.6	57.2	10.3	66.2	7.9
	중소도시	57.7	3.8	55.1	5.6	48.8	9.0	63.0	8.0
	농어촌	48.0	3.1	40.0	4.8	42.4	5.6	55.7	6.7
가족유형	양부모	57.1	4.4	54.9	6.5	50.7	7.7	62.4	5.8
	한부모·조손	63.6	3.9	57.3	2.6	60.9	20.9	73.4	21.0

자료: 2013 아동실태조사 분석자료 재구성

## 제2절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향

### 1. 사회서비스 보장 영역의 포괄성 증진

- 아동 사회서비스 영역의 내용적 포괄성을 보면, 보편적 소득지원 방식인 수당 방식이 부재했었으나 2018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실행되면 전반적인 아동사회서비스 영역의 포괄성은 증진될 것임.
- 최근 10여년에 걸쳐서 아동대상 재활서비스 영역과 돌봄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가 확충되었음. 보건(건강)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봄. 현재 보건지원서비스는 저소득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동기 보건서비스 지원의 비용-효과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시켜야 함.
- 이러한 사회보장 영역의 포괄성은 정책타당성 입증에 위해 중요한 측면임. 현행 아동대상 사회서비스 보장 사업의 확대가 돌봄 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수요와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기는 하나, 여타의 서비스 유형에 대한 확장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내용적으로 아동인지발달, 문화체험지원, 정서지원, 발달지원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나, 전국단위의 서비스는 아님.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편차는 더욱 커질 수 있음. 아동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감소되어야 하는 반면,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정책대상 적합성 증진

- 연령별로 아동사회서비스 현황을 보면, 13~18세 중고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함. 저소득층 아동의 비율을 보면 이 연령대에서 가장 높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이 연령대 아동은 주요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요보호 아동 대상 사업의 경우 주로 시설서비스와 위탁, 입양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음. 가능한 가정보호가 확대되어야 하나, 현재에도 시설서비스 위주의 보호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임. 뿐만 아니라,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의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과 연계하여 이러한 투자적 관점에서의 사회서비스는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최근 확대되었으나, 건강(보건)영역의 적극적 서비스 지원이 부족함.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 중 보다 적극적으로 보편화 해야 하는 서비스 영역이 대표적으로 장애영역과 보건영역임. 보건(건강)영역 사회서비스 중 영유아아동예방건강관리 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 등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으로 정책대상이 보편화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체계로의 편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재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3.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적정성

- 소득지원 영역의 경우, 지원규모의 과소함이 문제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지원수준이 낮음. 보다 적극적인 투자의 관점이 적용되어야 함. 아동양육비 지원 등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아동수당의 실시로 이런 문제가 다소간 해소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도 0~5세 아동으로 연령이 제한되어서 한계가 있음.
- 기본적 돌봄영역에서 적정 품질 미비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음. 보육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등의 품질관리가 해당지역에 기반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임. 현장밀착적 품질관리의 방안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안되어야 함.

#### 4. 사회서비스 보장사업의 체계성 증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아동 사회서비스 보장 사업 기획과 집행, 관리에서의 역할분담 측면도 체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아동권리 보호 영역의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영역일 수 있음. 반면 지역기반 상시 품질관리 구축체계 확보가 사업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는 일상적 생활지원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필요도 있음.
- 사회서비스 영역과 대상 전반을 고려할 때, 요보호 아동에 대한 소득, 돌봄, 보건의 지원 등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과 더불어, 동시에 일반(보편) 아동으로 정책대상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져야 함. 양 방향으로의 정책제안의 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 있음.
- 아동사회서비스 중 아동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되는 서비스는 국가 직영의 비율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이 큼.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민간기관에 위수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능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 직영의 비중을 높여야 함.

#### 5.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운영 개편 과제

- 앞서 제기되었던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사업운영의 개편과제를 제시할 것임.
- 대표적으로는 사업유형의 포괄성 증진의 방향, 아동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방안, 사회투자적 성격 서비스의 양적 확대 정도와 방법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앞서 살펴본 아동사회서비스의 대상별 특성에 기반 하여, 연령별, 장애여부별, 요보호 여부 별 특성에 따른 사회보장체계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제 5 장

노인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



## 제1절 (노인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진단

우리나라에서 노인돌봄정책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있었다. 이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비영리민간기관에 의해 자원봉사자의 방문과 후원 연결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요양욕구”에 대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들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1983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가 실시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사업이 시작되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설립근거를 가지게 된 사회복지관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꾸준히 확대되면서 노인을 포함한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었다.

무의탁노인을 양로시설에 ‘조치’하는 방식 외의 재가복지서비스가 노인복지사업으로 제도화된 것은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다. 그 출발점이 된 것은 민간기관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1987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시범 실시된 것이다. 이후 가정봉사원사업은 독립적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 의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91년부터는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노인재가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보조금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2007년 노인돌봄미바우처사업은 시설과 기관에 대한 보조금방식으로 공급하던 노인돌봄서비스와 다르게 이용자재정지원방식으로 시작된 최초의 사업이다. 노인복지사업기관이 서비스 수혜자를 선별하던 종래의 방식과 다르게 정부는 직접 서비스 신청을

받고 이용자에게 바우처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하였다. 이용자들은 기관을 선택하여 개별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관들은 이용자를 둘러싼 경쟁을 벌이게 되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방식은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요양서비스 공급에도 적용되었다. 요양등급판정을 통해 요양욕구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노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요양시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차상위 이상의 노인의 경우 서비스 비용의 15%~20%가 본인부담금으로 추가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욕구를 기준으로 보편적인 노인돌봄서비스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면에서 노인돌봄정책에서 전환점이 된다.

## 1. 제도개요 및 발달 개관

한국의 노인돌봄정책의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해본다면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이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부터 재가돌봄사업이 법제도화된 1989년까지를 ‘잔여주의 시설보호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주로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시설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그 다음 단계인 ‘노인재가복지 확대기’는 시설보호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보호로 노인돌봄정책이 확장되던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제도화되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재가복지서비스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제도화되면서 확대되던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인 ‘보편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기’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정부가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급자격을 직접 제공하고, 시장방식을 적용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보조금에 의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노인복지시설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맞추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으로 재편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소득기준에 구애됨 없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시장방식으로 공급하던 시기로 기존에 노인복지사업을 하던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만이 아니라 영리법인 그리고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요양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정책의 중심이 되어 이용자 규모를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해왔다. 그러나 2014년에는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여 그동안 3등급으로 유지되어오던 장기요양등급체계를 5등급으로 개편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기울이게 된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기’로 나눌 수 있겠다.

#### 가. 잔여주의 시설보호기

노인복지정책이 고유한 법적 기반으로 가지게 된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기점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에는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노령자 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보건사회부, 1971).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보건사회부는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로 1981년 가정복지과를 1989년 노인복지과를 설치하였다.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다. 양로시설은 가족부양이 어려운 무의탁 저소득 노인에게 대해 주거와 생활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빈곤한 노인에 대한 시설서비스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노인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81년 노인복지법이 시행되기까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무료)양로시설 하나밖에 없었다. 1980년까지 양로시설은 48개소에 3,159명이 보호받고 있었다(1981 보건사회, 1981, 최성재에서 재인용).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최성재, 2015). 장기요양 시설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1983년에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었다. 당시 노인복지법에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이 아닌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는 1987년 민간기관인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은천노인복지회 등으로 가정봉사원파견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이

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 나. 노인재가복지 확대기

1989년 12월 30일에 처음으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1981년 노인복지법에 포함된 ‘복지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기존의 법에 ‘복지조치’로 포함된 상담과 입소, 건강진단, 경로우대, 경로사업, 직종의 개발, 주택에 더하여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노령수당’과 더불어 새롭게 ‘가정봉사사업’을 제11조<sup>20)</sup>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노인에게 시설입소 외에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이 ‘가정봉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재가노인’이라는 용어도 노인복지법 안에 자리하게 되었다.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전술한 ‘가정봉사사업’은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세 유형으로 규정<sup>21)</sup>하였다. 재가복지사업은 허가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에 부가적인 사업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재가기관을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1997년 8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더불어 하나의 독자적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 세 가지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중

20) 제11조 (가정봉사사업등의 실시·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으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불우노인을 위하여 그들에 대한 가사봉사 및 상담을 하는 가정봉사원을 두어 필요한 보호를 하는 가정봉사사업 및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결연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가정봉사사업, 결연사업 기타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1) 제20조의 2(재가노인복지사업) ①재가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로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2. 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3. 단기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사하는 가정봉사원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52조에 명시되었다. 해당 법령에 의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신고제를 따르게 되었다.

1993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실시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1999년 기준 전국적으로 74개소가 설치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무료로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실비로 가정봉사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외에도 1992년에 정부가 지역사회복지관 부설로 설치하게 한 재가복지봉사센터도 역시 지역사회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재가요보호자에게 일상생활 원조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99년 기준으로 전국에 268개소가 설치되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 9개소에서도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시행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107개소를 설치하여 직접 고용한 가정도우미가 이 사업을 담당했다(윤현숙, 2004).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04년도 기준 노인재가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300개소로 24,750명의 노인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했다. 주간보호시설이 전국 237개소로 4,390명의 이용자를,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은 82개소로 866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용자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실비주간보호시설도 41개소로 483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었다. 총괄하면 전체 약 660개 재가서비스기관이 약 3만여 명의 노인이용자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 다. 보편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기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졌다. 2000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설치되었고 이 기획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종합대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공적요양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과제로 65세 이상 노인과 수발자에 대한 욕구와 수발실태,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2001년 김대중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이 공표되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노인장기요양제도는 포함되었으며 2003년 노무현정부에 의해 보건복지부 내 <공적장기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다. 2004년 3월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실행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설치하여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 제도운영방식, 관리운영체계, 급여범위, 요양

수가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개발하였다(최성재, 2015)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률>이라는 이름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2006년 2월 7일 <노인수발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5년 2월 1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서는 정부 법안 외에 장기요양보험 관련 6개 법안도 같이 제출되어 1년 2개월에 걸친 법안심의 결과 2007년 4월 2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 8월 시행계획으로 제정되었는데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가지고, 장기요양인정신청조사 결과 등급판정을 받게 된 신청자는 요양시설과 5~9인 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시설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기타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에 앞서 정부는 새롭게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돌봄서비스를 도입하였다. 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가서비스 공급을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서비스 신청을 받고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서비스구매력을 지원해주는 재가서비스였다. 2007년부터 시작된 “노인돌보미사업”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등급판정 결과 1~3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 노인들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경증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로 자리잡았고 명칭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노인복지기관에 보조금과 함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 독거노인에게 기본적인 안부와 연락을 취하며 안녕을 확인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2008년 첫 해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등급판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약 36만 명, 이 가운데 인정자가 약 21만 명이었다. 신청자수는 크게는 전년도 대비 47% 적게는 4%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등급판정자 규모도 증가하여 5년이 지



난 2012년에는 약 34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제도화하여 2008년 약 11만 3천여명이 일선에서 노인돌봄을 도맡았고 2013년 기준 25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4년 총 537개소에 불과했던 요양시설은 2008년 1700여개소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4,626개소에 달하였다. 재가서비스기관은 더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 기준 1만1천여개소를 넘게 확대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점차 안정화되는 가운데 예상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요양보호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 영역에서 노인이용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특별현금급여와 다르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배우자나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2012년 2월 기준으로 노인이용자와 함께 살면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전체 재가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28%에 달하는 46,392명으로 조사되었다(양난주, 2013). 제도 설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활동하는 ‘가족요양보호사’는 정부의 특별한 방침을 통해 현실적 존재로 인정되었다. 정부는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급여로 인정되는 시간을 줄여오다가 2011년 8월 동거, 비동거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1일 60분, 한 달 20일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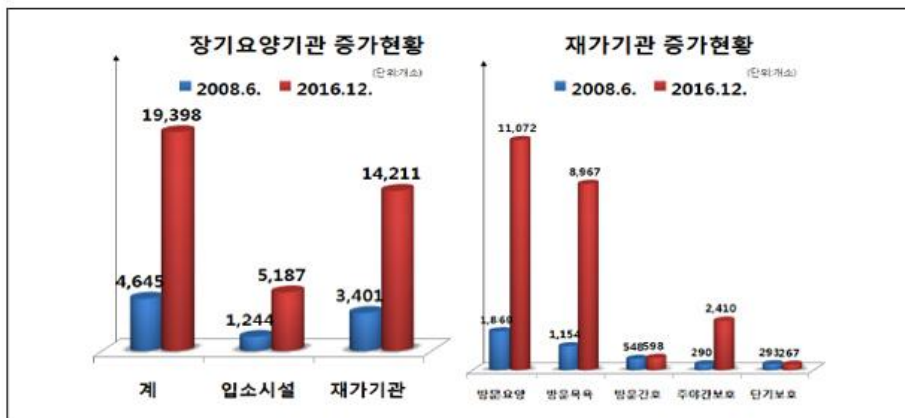
#### 라. 장기요양서비스 확대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범된 이후, 5년간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보장성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왔다(권진희, 2017). 2013년 12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주요 인력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4년 7월에는 장기요양 등급 체계가 3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 2012년 이전에는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등급판정점수 55점까지를 3등급으로 하였는데 2012년-2013년에 걸쳐 3등급 등급판정점수 범위가 51점까지로 확대되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치매특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4년부터 치매특별등급을 등급판정점수 50점-45점 구간으로 설정하면서 장기요양등급인정체계를 5등급체제로 개편하게 된 것이다.

2014년 11월에는 보험자 직영 요양시설인 서울요양원이 개원되었다. 2015년 7월에는 가정에서 장기요양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상담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6년 7월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하였다. 또한, 그해 7월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통합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재가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11월부터는 기존 촉탁의 방문 진료에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의사-간호사, 입소자 간 원격 건강상담, 교육, 자문, 지도)를 결합한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권진희, 2017).

장기요양인정등급이 5등급 체제로 개편되고 치매노인에 대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도 제공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된 결과 2016년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는 약 85만명이고 1-5등급까지 등급인정자는 약 52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 그림 2. 장기요양기관 증가 현황 ■

출처 : 권진희(2017)

#### 마. 급여의 다변화 및 종류별 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급여의 유형은 법에 의해 정해졌고,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후 받게 되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수가와 이용자에게 받는 본인부담금(시설 20%, 재가 15%), 그리고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게 되는 동일한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는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대한 인력기준과 설치기준을 제시하지만 이전과 같이 인력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설립 혹은 운영주체가 국공립이건, 민간비영리법이건, 영리법인이건, 개인사업자건 건강보험공단과 이용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재량은 개별 장기요양기관에 속한다.

노인장기요양의 모든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뉜다.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가리킨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세분화해 본다면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이용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일정 시간동안 기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지원서비스를 받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월 정액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하는 재정의 크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어떤 등급이건 간에 사실상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표 1>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요양신청자 수와 등급별 인정자 수를 보여

주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선택한 신청자, 그리고 등급판정을 통해 수급권을 부여받은 인정자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돌봄서비스 공급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진 이용자는 2016년 기준 약 52만명으로 약 85만명에 달하는 신청자의 61%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급외 판정을 받은 약 16만 명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60% 이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니라 조세를 재정으로 공급하는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sup>22)</sup>를 이용할 수 있다.

<표 5-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와 인정자 추이(2008-2016)

(단위: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청		355,526	522,293	622,346	617,081	643,409	685,852	736,879	789,024	848,829
인정	1급	57,396	54,368	46,994	41,326	38,262	37,283	37,655	37,921	40,917
	2급	58,387	71,093	73,833	72,640	70,619	71,824	72,100	71,260	74,334
	3급	98,697	161,446	195,167	210,446	232,907	269,386	170,329	176,336	185,800
	4급	-	-	-	-	-	-	134,032	162,763	188,888
	5급	-	-	-	-	-	-	10,456	19,472	29,911
	소계	214,480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78,493	424,572	467,752	519,850
등급외		50,891	103,623	149,783	154,034	153,657	156,835	160,814	163,005	161,156
판정(인정+등급외)		265,371	390,530	465,777	478,446	495,445	535,328	585,386	630,757	681,006

출처 : 각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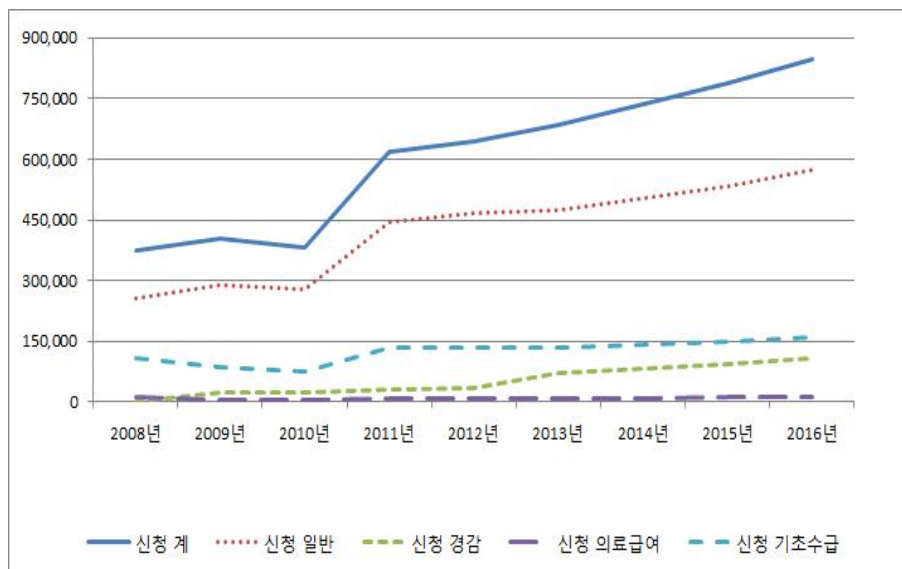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신청자와 인정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5년을 넘기면서 신청자는 두 배로 증가하였고, 신청자의 증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08년 대비 약 142%, 연평균 증가율은 약 9%에 달한다.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 확대에는 몇 가지 제도 개선 결과가 관련되어 있다. 먼저 제

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서비스 규모가 이미 정해져있다. 즉, 등급외 판정을 받는 모든 신청자가(2016년 기준으로 하면 16만명이) 신청한다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2016년 기준 이용자 규모는 약 4만 6천명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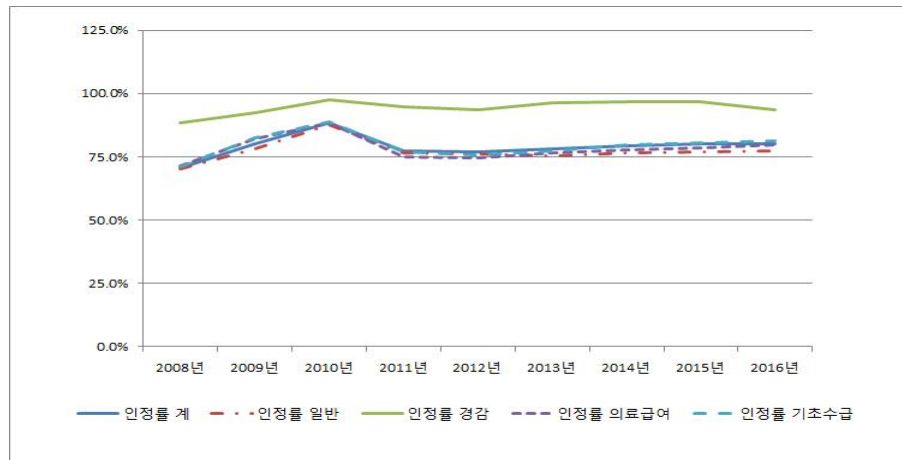
도 시행 초기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2009년 7월부터 건강보험 하위 10%(도시지역), 건강보험 하위 15%(농어촌지역) 이하 저소득층을 본인부담금 감경(50%)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본인부담비용 지원이 확대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9.6.29.).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신청자 대비 인정자 비율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자격별 신청자 추이



출처: 각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서 연구진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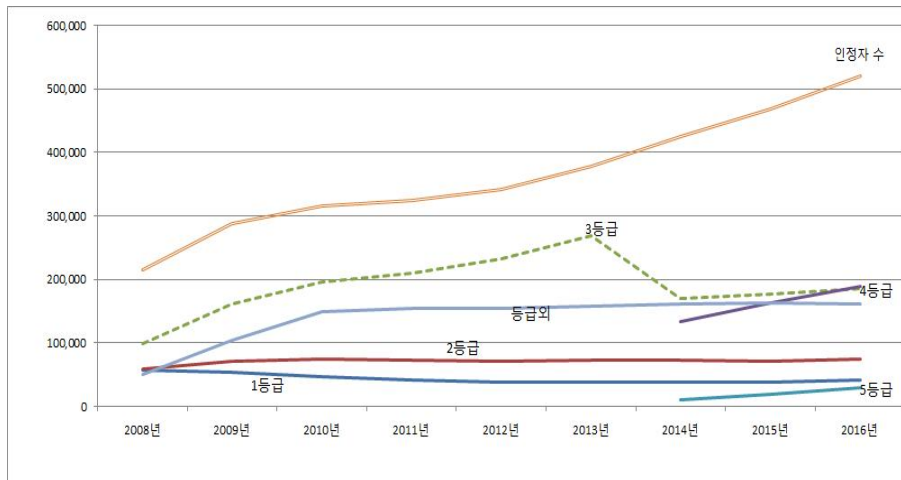
&lt;그림 5-1-2&gt;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대비 인정자 비율



출처: 각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서 연구진이 작성

장기요양 인정점수 조정과 경증 치매 질환자를 장기요양 대상자 인정 범위에 포함시킨 것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기여하였다. 2008년도 제도 도입 당시 인구 구조 및 한정적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혜자 인정제도에 관한 재검토 요구가 다수 제기되었고, 특히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 낮은 등급 또는 등급탈락에 따른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안), 2012.9). 이에 3등급의 요양필요점수를 55점(2008.7)에서 53점(2012.7), 51점(2013.7)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2014년 7월부터는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51점 미만의 경증치매자를 5등급으로 신설하는 등 꾸준한 이용자 범위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선우덕 외, 2016). 이러한 정책 개선의 결과는 아래 등급별 인정자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1-2 등급의 중증자 비율은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3~5등급자 비율이 전체 인정자 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lt;그림 5-1-3&gt;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별 인정자 비율



출처: 각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서 연구진이 작성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 7%에 달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수급권이 주어지는 인정자의 규모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먼저, 제도 도입을 논의하던 시기에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규모는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계한 사실이 있다. 2001년에 발표된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에서는 2015년까지 시설보호 노인인구를 전체 노인의 2.37%, 재가보호 대상인구는 전체 노인의 7.8%로 추계하여 전체 10.2%의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노인장기요양보호기획단, 2001). 두 번째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보장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의 13.7%, 13%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에 7% 남짓에 불과한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보장범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김찬우, 2014).

## 제2절 (노인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향

### 1. 노인돌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4%로 7백 만 명에 달함. 이 가운데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약 73%에 달함(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이 결과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보다는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유형이 되었음을 보여줌. 이러한 변화는 노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노인의 주거공간에서 노인을 돌볼 가족구성원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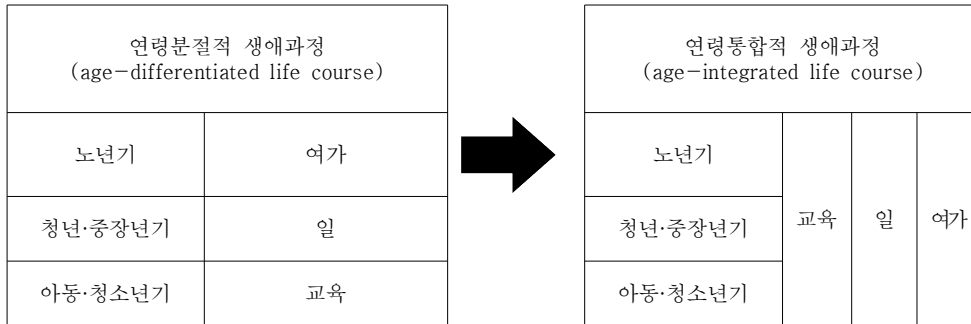
고령화는 65세 이상 노인층 안에서의 다변화로 진전되고 있음. 80세 이상 고령노인층이 전체 노인의 20% 이상으로 증가하고, 무학 노인의 비중이 30%로 줄고 중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노인이 약 30%로 증가했으며 전문대 이상 노인이 약 8%로 증가한 것도 노인세대 구성의 변화를 보여줌.

노인구성과 노인생활방식의 변화는 ‘노인’을 취약계층과 동일시하는 전통적 사회복지 접근의 변경을 필요로 함. 수급자격의 기준은 노인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생애주기에서 30년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노후 자체를 ‘문제’시 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이 노인들이 종전에 누리던 삶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하면서 살던 방식대로 최대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을 갖춰야 함.



[그림 5-2-1] 연령통합적 생애과정모델



## ○ 쟁점

-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돌봄, 치매와 관련한 사회서비스 연계와 조정은 누가 어떻게 이를 것인가?
- 재가서비스 이용의 공적 보장 한도의 기준
-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부담 원칙과 기준
- 재가서비스 공급에서 적정 수준 품질 보장의 논리

&lt;표 5-2-1&gt; 노인복지시설 분류의 변천

	1981	1989	1994	1998	2008	2011
노인복지시설	양로 노인요양 유료양로 노인복지회관	양로 노인요양 실비양로 유료양로 실비노인요양 유료양로 유료노인요양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주택	양로 노인요양 실비양로 실비노인요양 노인복지회관 실비노인복지 주택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유료노인시설			유료양로 유료노인요양 유료노인복지 주택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과 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1981	1989	1994	1998	2008	2011
				주간보호 단기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무간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무간호
노인주거 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 유료양로 실비노인복지 주택 유료노인복지 주택	양로 노인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주택	양로 노인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 시설				노인요양 실비노인요양 유료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유료노인전문 요양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 기관	노인보호전문 기관

&lt;표 5-2-2&gt;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비교

구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008. 7.1. 이전)	방문요양(재가노인복 지시설) (2008. 7. 1. 이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010. 3. 1. 이후)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대상	①일상생활수행능력 에 지장이 있는 자 ②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일반 질환으로 일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장기요양급여수급 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 자 이외의 자 중(등급외자)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③2008. 7. 1. 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이용자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	①장기요양급여수급 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 자 이외의 자 중(등급외자)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③2008. 7. 1. 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①장기요양급여수급 자 ②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
서비스내용	신체수발, 일상생활지원, 노화·질병 및 장애관리, 상담 및	방문요양, 상담 및 교육, 노인결연 등 (2010. 3. 1. 이후)	일상생활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신체수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구분	가정봉사원파견시설(2008. 7. 1. 이전)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 (2008. 7. 1. 이후)	재가노인지원서비스(2010. 3. 1. 이후)	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교육,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결연사업, 봉사자 발굴 등)	방문요양만 제공(신체수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인력기준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사무원 1인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1인 무급봉사원 및 유급봉사원 1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3인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사무원 1인	시설장 1인 요양보호사 3인 사무원, 보조원 또는 운전사는 필요수
		(2010. 2. 24. 이후) 시설장 1인 요양보호사 15인 사무원, 보조원 또는 운전사는 필요수		(2010. 2. 24. 이후) 시설장 1인 요양보호사 15인 사무원, 보조원 또는 운전사는 필요수
운영비지원(등급외자)	2008년 상반기: 67,850천원	2008년 하반기: 50,000천원 2009년: 100,000천원 2010년: 지자체에서 결정	지자체에서 결정	없음

##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 4월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종류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왔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독거, 부부노인에게 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8년에는 소득수준 > 동거가족유무 > 부양가능여부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었다. 2011년에는 건강상태 > 소득수준 > 동거가족유무 순으로 변화하였고 2013년에는 건강상태 > 동거가족 유무 > 고령가구, 2014년에는 대상자 특징(독거, 치매, 노인성 질환), 건강상태 순으로 변화하였다(정경희 외, 2014). 더 자세한 적용범위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lt;표 5-2-3&gt;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적용기준 변화(2007-2015)

연도	선정기준				비고
	연령	소득	건강	기타0	
2007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평균소득 80% 이하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	- 재산: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차량, 차량 2대 이상 보유가구 제외 - 부양: 근로능력이자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가능 경우 제외	타 돌봄서비스와 중복급여 제외
2008	전년동일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6월)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7월-) 40점 이상~55점 미만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2009	전년동일				
2010	전년동일				
2011	전년동일	전년동일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 장기요양보험등급외 A,B - 장애 1~3등급, 중증질환		
2012	전년동일			- 신규신청자 기준변경 (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 이하 (건강) 치매 또는 중풍 노인성질환자	
2013	전년동일				12년 치매/중풍 질환으로 인한 대상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적합할 경우 13년까지 자격기준 유예
2014	전년동일	전년동일	전년동일 (단 치매/중풍		- 방문, 주간보호 서비스

연도	선정기준				비고
	연령	소득	건강	기타0	
			별도인정 불가)		대상자 선정기준
	독거/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가구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골절, 중증질환수술자(최근 2개월 이내 진단서 제출)		- 단기가사서비스 도입에 따른 별도 선정기준 명시
2015	전년동일 (단, 출생연도기준 >출생일 기준)	전년동일	전년동일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전년동일	전년동일	골절범위 확대(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2016	전년동일	중위소득 160% 이하		-제외대상 구체화(노인복지법 방문요양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가 있다. 이 중에 단기가사서비스는 2014년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2015년에 추가되었다.

방문서비스는 신변, 활동지원으로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을 포함한다. 가사와 일상생활지원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포함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방문서비스와 동일하고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연 6일 범위내에서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재정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지원금은 서비스에 따라 월 193,200원에서 최대 344,520원까지이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하루에 29,880원에서 36,380원까지 지원된다. 서비스별 정부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

&lt;표 5-2-4&gt;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 단가

서비스내용	근무일 유형	금액	기준
방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①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800	시간당단가
	②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54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10,540	
주간보호서비스	①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9,400	일당 9시간 기준
	②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31,62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31,620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근무일 유형 구분 없음	36,380	일당단가

서비스 신청은 본인, 가족 그리고 그 밖의 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후 수급권이 발생한 이용자는 매월 말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다음 달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해준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본인 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5구간으로 나뉜다.

&lt;표 5-2-5&gt;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기준 중위소득 110% 이상~ 14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 160% 이하
방문(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42,000원	48,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56,000원	64,000원
단기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38,000원	42,000원
	48시간(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76,000원	84,000원
치매가족휴가 지원서비스	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자는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방문서비스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단기가사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외자 그리고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가 확대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2016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외 판정자가 총 16만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총 이용자 규모가 45,599명에 그친다는 점은 돌봄욕구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2-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수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2016
이용자수	7,201	11,159	9,421	25,482	28,108	28,907	42,282	45,599

자료: 김윤수·박민아(2012), 양난주(2015), 보건복지부(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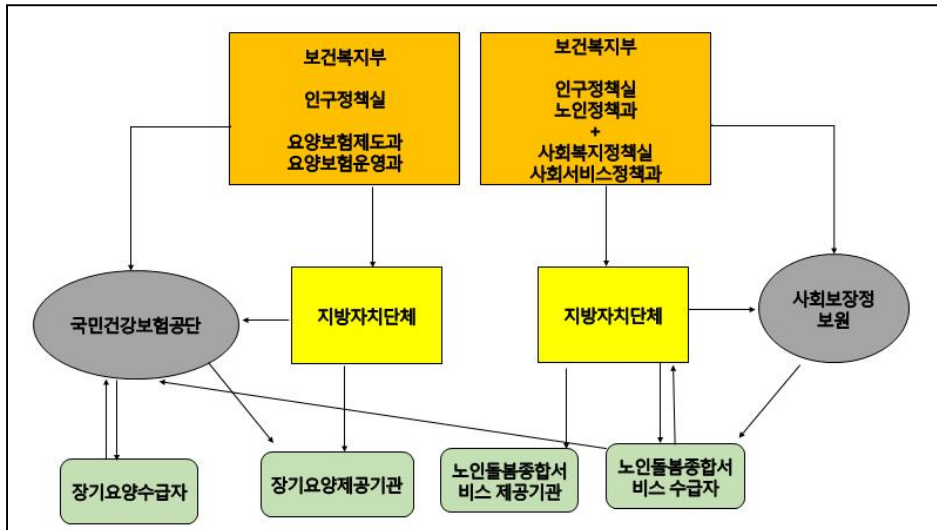
#### ○ 보장체계 구축방향: 정책/사업의 재구조화

- 건강과 요양의 연계 : 서비스간 연계
- 통합적 돌봄서비스의 연계
- 지역사회 노인 사례관리 도입
-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

### 제3절 (노인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운영 개편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공급되는 노인돌봄서비스이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조세에 의해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공급되는 노인돌봄서비스다. 두 사업을 총괄하는 노인돌봄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정책실의 요양보험제도과와 요양보험운영과가 맡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인구정책실의 노인정책과 소관사업이지만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하나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실의 사회서비스정책과에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의 영향 아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두 사업의 차이는 신청과 수급권 결정을 누가 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보여진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수급권을 받는 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읍면동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수급권을 결정한다.

더 자세한 운영체계는 다음에서 각각 제도별로 설명하겠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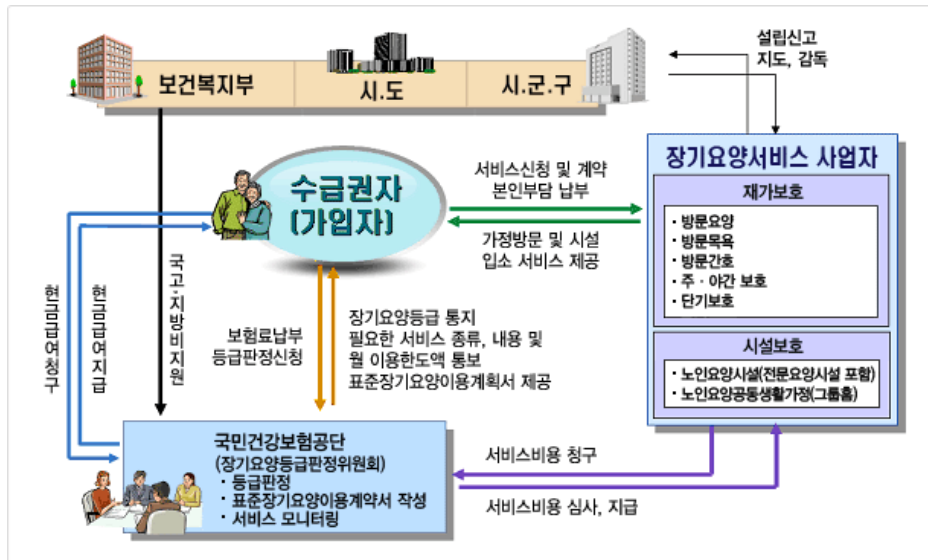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중앙 및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게 되며 운영체계는 <그림 \*>과 같다. 크게 보면 요양급여와 관련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하게 되고, 등급판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급권자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통지 받은 다음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 문제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실제 기관을 선택하고 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책임이다.

장기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설치요건을 구비하여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 설치신고증명서를 받는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 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운영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급판정신청을 하고 등급판정 결과 등급외 판정이 나와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게된 등급외자가 신청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관장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등급외자거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시군구에서 예산에 맞게 수급권을 결정해준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권자가 된 이용자는 바우처 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바우처카드가 발급되

고 이 카드로 방문요양서비스 등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방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표 5-3-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사회서비스정책과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
시·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바우처 사업 총괄(사회복지과) 시·군·구별 예산 배정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바우처 사업 관리 및 예산 예탁 총괄
	노인복지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시행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관리감독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사업 홍보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담당자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전담금융기관(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관리

우리나라 노인돌봄정책은 취약계층에 한정된 잔여적 시설보호에서 1990년대 저소득층 노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시설과 재가 모두 확대하는 것으로 발전해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던 서비스 대상을 욕구를 가진 모든 노인으로 보편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비영리기관에 의해 공급되던 노인돌봄서비스의 내용, 양, 방식을 표준화하였고 요양보호사라는 별도의 제공 인력을 제도화하였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민간기관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제 수혜자 결정,

서비스 내용 결정 등을 위임해온 종전의 돌봄공급방식과는 크게 다르게 돌봄의 공식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족에 의한 수발, 자원봉사 혹은 시혜의 방식으로 공급되던 노인돌봄의 영역에 수가를 달리하는 서비스 유형이 표준화되고 수급자격 결정권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서 수요 관리를 통해 서비스 공급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돌봄의 사회화, 공식화가 진전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노인돌봄서비스의 수혜자는 지난 10년간 약 52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인구의 약 7%에 달하는 규모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의 기관재정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노인돌봄서비스의 수혜자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노인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어온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시행 첫해 대비 142%까지 증가하였는데 연평균 약 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단기간에 급속하게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시장화”(marketization)이다. 정부 역할은 제도설계, 수급권 부여 그리고 서비스 비용지원으로 집중된다. 즉 수요 규모를 정하고 수요관리를 통해 서비스 공급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비용지원을 받게 된 ‘장기요양인정자’는 스스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장기요양시장은 이런 ‘장기요양인정자’라는 소비자를 목표로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 제공기관 증가는 300%에 달한다. 입소시설은 2008년 1천여개소에서 3천여개가 넘는 규모가 확대되었고 재가기관은 5천여개소에서 1만4천여개소로 증가하였다. 장기요양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급주체 기준을 대폭 낮췄다. 또 노인의료시설로 구분되는 생활시설에 5인-9인 규모의 소규모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 시설유형을 만들었다. 그 결과 취약한 노인들이 선택하는 시설서비스 기관으로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2천여개가 생겨났다. 그리고 3137개소인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1835개소, 2050개소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운데 1825개소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뿐 아니라 14211개소인 재가기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11741개소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시설유형을 가리지 않고 노인장기요양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공급조직은 19,398개소이고 이 가운데 개인운영시설은 15,401개소로 전체의 약 79%에 달한다. 공적 재원 5조 가까이가 투입되는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 개인자영업자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요양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부당청구액수가 증가하는 상황은 현재 요양 공급주체의 건전한 기관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신뢰도가 높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에 있어서 제3의 제공인력으로 나타난 가족요양보호사 문제는 사회화된 돌봄공급 안에서 제도화된 가족요양 유형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 지침에 의해 낮은 보상을 받고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문제는 가족에 의한 비공식 노인돌봄이 탈가족화된 공식 노인돌봄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종방식이다. 정부가 보상 수준을 낮추면서 그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가족요양보호사라는 제3의 유형이 제도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공식 가족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인 특별현금급여와 연관하여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동안 수요 확대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책의 중심을 공급관리로 전환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인정자를 늘리고 수가를 높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요양제도가 노후의 건강을 책임지는 믿을만한 서비스로 정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요양의 질을 둘러싼 문제의 재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공급측면의 관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요양기관과 요양인력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공급환경을 개선하는 데 국공립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크다. 현재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개인자영업자는 공적 제도를 운영하는 데 책임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자본규모는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 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공적 재원으로 확충한 인프라가 장기요양 공급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 제공인력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종전의 모든 생활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는 제공인력 임금가이드라인이 존재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노

동은 기관과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고 이들은 공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방문요양수가의 84.3%를 제공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이 발효되었다. 재가만이 아니라 시설에서 인력의 임금수준을 안정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이직을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넷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공급을 지역단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기요양 재가기관은 인력과견업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쉽게 소규모 영세 재가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휴먼서비스의 특징을 가지는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의 안정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재가기관이 하는 일이 단순 인력 파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수요대비 100%를 넘고 있다. 하지만 총량적 수준에서 수요를 초과한 시설수가 실제적인 서비스 공급의 충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제공기관과 서비스의 적정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용자의 인권과 시설의 안전, 보호, 서비스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요양서비스 적정기준이 제시되고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활동지침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제공인력의 경우도 정부에서 자격증만을 관리하고 양성과 고용을 모두 민간에 맡기는 방식은 이제 중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장기요양 공급인프라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영세한 자영업과 낮은 일 자리를 양산하는 산업으로 전락할 위험을 가진다.

공식화되고 표준화된 노인돌봄이 강화된 시장성을 탈각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가진 장기요양기관을 육성하는 데 직접 나서야 한다. 고령사회에서 노후의 안전망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노인의 사회권,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6 장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정립  
방향

---





## 6

##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정립 방향 &lt;

&lt;

올해 2017년은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가 일어난지 20년이 되는 해이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본격화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1997년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이전의 고속 성장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전면화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의 대응에 있어서도 1990년대 말까지는 국민연금 확대, 건강보험 통합,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2000년 이후로는 서비스 대상과 종류, 공급기관,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더욱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강혜규, 2008).

그만큼 사회서비스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회서비스가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 방식은 물론 개념에서부터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제도 자체에 재정과 공급방식이 어느 정도 규정되는 사회보험과 전달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공부조의 현금 이전과는 달리 전달체계 상에서도 다양한 쟁점을 발생시킨다. 가령 현금 이전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달이 되더라도 전달이 되는 이상 소득 보전의 효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사회서비스는 전달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 그에 따른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에서부터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내세운 바가 있고, 또한 사회서비스가 고려될 수밖에 없는 치매국가책임제도 대표 공약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집권 이후에도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읍면동사무소를 사회서비스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을 이른바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으로 내세우는 등(청와대, 2017) 이번 정부에서도 역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정책 10년이라는 상징적 의미 말고도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그동안의 발전과정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혼란과 논란을 반영한다면 이 논의에서 다루어야하는 쟁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것이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용되다가 2011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에서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규정되는데 법조항의 정의마저도 상당히 광범위하여 당시부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은 그동안의 논의와 제도적 발전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지역사회서비스’로 한정함으로써 정리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서비스 발전에 대한 성격규정 문제이다. 2007년 전자 바우처사업으로 시작된 사회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비영리 복지기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르게 사회서비스는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도 영리기관까지 참여하는 경쟁이 초점이 되면서 복지 시장화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지난 사회서비스 10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는 전달체계에 대한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다른 사회보장정책과 다르게 전달체계 문제와 결부되어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는 급여자체로서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느냐까지도 핵심적인 정책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로의 개념적 정의와 범위 규정

### 1.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혼돈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했던 노무현 정부 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때부터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분화되었다(남찬섭, 2012). 사회서비스는 일자리창출의 유력한 분야로 꼽히면서는 대부분 공공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사회적일자리에 한정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전자 바우처 도입이후에는 이를 지칭하는 용어

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2011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에서는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제3조 4항) 대상(모든 국민)과 분야(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내용(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목적(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모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다른 소득보장이나 사회보험 영역과 구분하는 의미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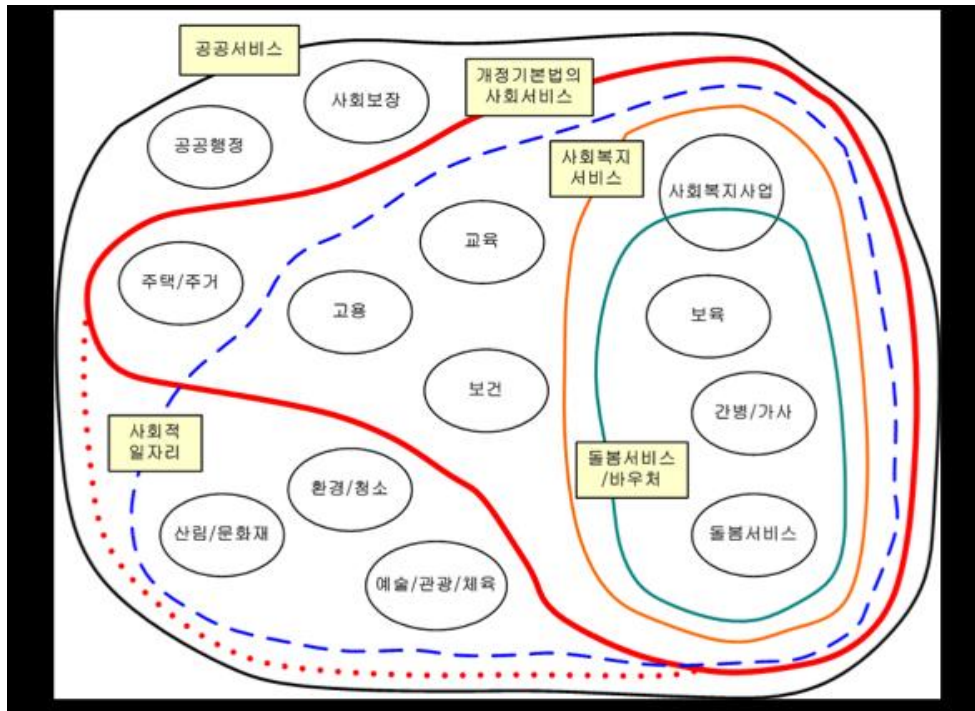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적 혼돈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모두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말하는 영역이나 내용이 달라 상호 검증되는 토론이 되기보다는 서로 다른 얘기를 각자 떠드는 모양에 그쳐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개념적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에도 대개 사회서비스는 가장 늦게 제도적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사회서비스의 정책 영역이 형성되면서 진행된 논의로 같은 영역의 정책을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나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의 정립된 개념을 그대로 수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사회정책 영역도 그렇겠지만 사회서비스는 특히 그 나라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현실과 개념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 ‘지역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특징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회서비스의 용어사용을 하나의 정의로 모두 정리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각각의 용어 사용은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재단해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또는 정책적 영역으로서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한 정의에 한정짓고자 한다. 이러한

<그림 6-1-1> 서로 다른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제도적 범주(남찬섭, 2012: 89)



사회서비스의 개념만 하더라도 고용이나 보건의료, 교육 등의 정책 영역별로 선을 긋기도 모호하고, 상담이나 돌봄 등 방식으로라도 경계를 지을 수가 없으며 바우처나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에서 다음의 세가지 공통된 특징을 선별해볼 수 있다.

첫째는 대면성이다.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서비스’의 기본적 특징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전달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서비스는 대면적 접촉이 기본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포함된다. 물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원격 서비스도 많이 가능해지기는 하였지만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사나 진단, 모니터링 과정 중에서의 대면적 접촉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만약 대면적 접촉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사회서비스의 범주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소득보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해서 사회보장을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제3조 1항). 물론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의미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서비스는 소득보장과는 구분된다는 의미만큼은 분

명하다. 소득보장의 기본적인 의미는 질병, 실업, 노령 등 소득이 중단되는 위험에 대해 상실되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사회서비스는 간병, 돌봄, 보호, 활동지원, 상담 등 소득과는 구분되는 대면적 활동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면성과 구분하여 비소득보장을 또다른 특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소득보장성 현물지원과 사회서비스가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이다.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은 현금이전도 있지만 생계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사 등을 직접 제공하는 현물지원의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것은 현금이나 현물이냐는 소득보전의 방법적 선택일 뿐인 것이다.

물론 같은 위험이나 같은 지원도 소득보장일수도 있고 사회서비스일수도 있다. 가령 출산·양육도 소득보장의 위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출산이나 아동돌봄에 대한 지원 역시 사회서비스에 포함되기도 한다. 하지만 출산·양육에 따른 추가 소득의 필요를 보전해주는 아동수당과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대면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아동돌봄은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식사라고 할지라도 생계 보전의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식사와 생계보다는 활동성을 높이거나 관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점심모임이나 정기 방문 등에 초점을 맞춘 식사와는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굳이 같은 위험이나 지원을 다루더라도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가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물성 소득보장까지 사회서비스로 간주되면서 사회서비스라는 정책 영역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논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에 사회서비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생계지원형 현물지원까지 사회서비스로 포장되어 논의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한 정의라면 이러한 점 때문에 소득보장과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성이다. 대면성과 비소득보장을 충족시키는 서비스 영역은 보건의료 및 교육 등 기존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과 구분되는 사회서비스의 특징은 지역적 특수성이나 관계성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육이나 보건의료라고 할지라도 지역성 여부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가령 교육의 경우 전국적인 교과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서비스는 지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라기 보다는 교육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과과정 외에 지역적으로 진행되는 방과후 돌봄이나 아동·청소년 서비스는 정규학교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서비스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보건의료의 경우에도 지역성이 배제된 임상적 접근에 의한 의료서비스는 사회서비스라고 하기 어렵지만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건강증진 및 보건서비스는 사회서비스로서 논의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것이다. 고용 역시 지역적 범위를 넘어선 취업과 직업훈련 서비스 등은 사회서비스 보다는 고용정책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 적합하겠지만 지역적 특성과 관계성이 강한 자활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은 사회서비스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면성, 비소득보장, 지역성의 특성을 가진 정책과 제도 영역을 따로 구분지어 ‘지역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는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이미 쓰이고 있어 효과적인 논의를 위한 개념으로서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어 한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돌아가기에는 단순히 ‘복지’로 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의 논의들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도 이 세가지 특성을 가진 사회서비스 영역을 논의할 때 ‘지역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칭한다면 개념적 혼돈을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3. ‘지역사회서비스’의 정책적 기능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일정한 정책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소득보장정책의 경우에는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위험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정책은 고용의 양과 질을 증진시키는 것, 보건의료정책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 등을 일반적인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Hudson, Kühner, Lowe, 2008). 이처럼 다른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보편적인 기능을 일반적인 수준에 쉽게 정의할 수 있지만 지역적 특징과 맥락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도 사회서비스는 애초의 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가령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각각 소득보장, 교육정책, 보건의료정책,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으로 대응해야할 결핍, 무지, 질병, 무위, 불결 등 5대 악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이다. 당시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문제의 상당부분은 가족의 몫으로 간주되거나 인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족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 성립 이후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돌봄 문제, 장애인에 대한 지원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70년 시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에 통합된 사회서비스국을 설치하면서 사회서비스는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성립이 되었던 것이다(김보영, 2007).

이러한 선협국의 사례로서 영국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를 요보호 아동, 허약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조건에서 어려움을 가진 개인이나 가족을 도와 가능한 일반적인(normal) 생활을 하도록 하는 서비스(Parker, 1970; Seebohm Committee, 1968)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적이고 촉진적인 접근(Politics and Economic Planning, 1961)이라고 정의하거나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까지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Marshall, 1970).

하지만 이러한 논의 중 가장 실질적인 기능을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Webb & Wistow (1987)였다. 이들은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기능 중 한가지 이상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그 것은 사회 통제(social control), 변화 촉진(promotion of change), 사회 유지(social maintenance)였다. 사회 통제는 특정 개인(취약한 개인)의 권리와 복리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학대, 방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을 말하는 것이었고, 변화 촉진은 개인의 자존감 증진, 부모 역량 강화, 사회 환경의 변화 등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권리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을 포괄하는 것이며 사회 유지는 적절하게 용인 가능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통제와 사회 유지 기능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각각 안전 보호와 일상 유지 기능으로 규정해볼 수 있을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 모든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 보다는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보영(2016)은 기본

적 욕구와 사회투자적 수요로 구분하여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요와 욕구는 판단의 주체나 수요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데 결국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수렴성에 기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 인간의 생존, 성장, 발전에 필수적이면서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도 위협이 되는 사회적 욕구인 기본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가 기본적 욕구에만 국한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필요에 의한 사회투자적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투자적이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등으로 기본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이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보다 궁극적인 해법을 추구해야하는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지역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기능에 대입하여 본다면 개인의 생존, 성장, 발전에 필수적인 기본적 욕구는 주로 안전 보호 기능, 일상 유지 기능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 촉진 기능은 아무래도 사회투자적 수요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안전 보호와 일상 유지 기능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가일 것이다. 이를 실제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대입해보면 <표 2>와 같다. 영역 구분을 위하여 아동,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고 또한 일상 유지는 주로 신체적 생활 기능 유지에 해당하는 생활 유지와 주로 보건의료 영역을 포괄하는 건강 유지로 구분해 보았다.

<표 6-1-1>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 영역

	생활 유지	건강 유지	안전 보호
아동	출산/양육, 보육, 돌봄	아동발달, (정신)보건, 질환관리	아동보호
성인	활동지원	(정신)보건, (만성)질환관리	가정폭력 보호
노인	노인 돌봄	(정신)보건, (만성, 노인성)질환관리	노인보호



## 제2절 사회서비스 10년의 평가

### 1. 지역사회서비스 시장화 규정에 대한 검토

비소득보장의 영역에서 대면성과 지역성을 특징으로 국민들에게 일상 유지와 안전 보호를 보장해야 지역사회서비스는 지난 10년간 어떻게 발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정부가 공급을 책임지기 보다는 거의 민간에 의존하면서 초기부터 시장화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복지확대에 우호적이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인식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에는 산업화의 논리와 결합되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들 정부 아래에서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고, 고용유발효과도 큰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된 정책논리로 등장하였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시장적이라고 하는 보수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는 저항감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심지어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강조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적지않게 겪어 왔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그로 인한 서비스 질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일부는 유사 사고육화되고, 시장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등록제로 인해 저급한 공급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학계나 현장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초기부터 강하게 제기되었었다(감정기, 2007; 김종해, 2008). 그래서 오히려 지역사회서비스를 민영화시켰다든가, 시장화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서비스를 제도화 시켰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민영화나 시장화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지역사회서비스의 10년의 과정을 제도화보다는 민영화나 시장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민영화나 시장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보통 기준에 국가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수립된 영역이 민간에게 이양되거나, 민간이 참여하여 독점이 경쟁으로 바뀌는 현상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서비스는 이전에 국가중심으로 성립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비영리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성립되었고, 국가는 재정을 제공하고 규제하는데 머물러 민간이 정부의 종속적 대행자로서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을 담당해 왔다(이혜경, 1998). 더욱이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공적인 재정 투입 역시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제도화된 노인돌봄이나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볼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등 민간 비공식부문에서 감당해왔던 영역이었다. 그 것을 제도를 통해 공적 재정으로 분담하게 되었다는 것은 민영화보다는 공적 제도가 더욱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사회서비스 제도화의 의미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사실 기존 복지서비스의 규모는 지방분권화 이후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되어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이 어려워졌지만 이 예산을 묶어놓았던 분권교부세 내역을 통해 추정해볼 수는 있다. 2014년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 사회복지 항목의 17개 시대 산청 총액은 6천 9백억 원 규모이다(안전행정부, 2014). 그런데 같은 해인 2014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규모는 7천 5백억 원 규모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4). 이를 통해서 가늠해볼 때 이미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의 규모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만 따져도 기존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당해 약 4조원 가까이 지출되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까지 포함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규모의 차이는 압도적이다. 그만큼 제도적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민영화나 시장화되었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도화가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보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기실 기존에 주로 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의 내용을 구

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자격에 의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알기는 어려웠다. 수급권자의 권리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서비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는 임의적인 시혜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보장성은 성립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장기보험급여는 물론이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 선별을 위해 서비스마다 일정한 수급조건을 명시하고 서비스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전의 복지서비스에서는 정부가 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제외하면서도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정작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반면에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에서는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양난주, 2011).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자격에 의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질 수 있게 되었으니 보장성의 정도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되어 상대적으로 보장성 수준이 높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와는 달리 여전히 ‘예산소진 시까지’ 등의 임의적인 전제가 붙는 경우가 많은 바우처 서비스의 보장성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보장성이 성립조차 되지 못했던 제도화 이전의 상황과 이를 따져볼 수 있는 제도화 이후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함께 주목할만한 또 한가지의 변화는 욕구 중심의 보편화였다. 이전의 복지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면서도 ‘저소득층’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득보장 영역에서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 소득이 중단되는 위험에 대해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한다면 비소득보장 영역인 지역사회서비스에 있어서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보건의 문제 등 일상 유지가 어려운 욕구가 발생했을 때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선별주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선별적인 서비스에 집중하다 보니 노인무료급식, 반찬배달과 같은 서비스들도 지역사회서비스의 성격만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빈곤구제와 같은 소득보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도 평균소득(또는 중위소득) 100%에서 많게는 160%까지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대상의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서비스를 보다 보

편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평가의 대부분은 제도화와 보편화가 시장적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는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도화나 보편화의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그 방식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시장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중심의 보편성을 더욱 확대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시장체제로 인한 부작용은 첫 번째로는 서비스 질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편법과 부당한 노동환경 문제가 두드러졌고, 공급기관의 영세성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바우처에서는 특히 등록제로 인해서 여전히 지역에서는 저급한 제공기관 난립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두 번째는 욕구 중심이 아닌 시장성 중심의 정책 왜곡이다. 국가가 공급을 책임 지지 않고 시장에 맡기다 보니 더욱 욕구는 많지만 환경은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공급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산업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보다는 시장성이 높은 아동대상 서비스에 편중되고 유사 사교육성 서비스에 몰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경쟁으로 인한 파편성 문제이다. 욕구는 속성상 복합적이고 다면적이지만 시장체제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산되다보니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설계되기 보다는 상품화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파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의 분절성과 함께 제도적 보장성이나 욕구 중심의 보편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달체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 제3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흐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논의가 언급된 것은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년)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사무소 개설이었지만 비로서 최초의 전국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200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주민생활서비스 개편이었다(이진, 2011).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4년 6개월간 실시되었지만 전면적인 전달체계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역시 2004년 7월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2년간 실시되었지만 2005년 발표된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대책에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온 정책과 개편들을 살펴보면 2005년 재정분권과 중앙정책 지방이양 추진 및 지역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2006년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시작,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실시, 2009년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도입 등 2000년대 중반 전후로 시작되어 거의 매년 전달체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6-3-1> 2000년 이후 주요 전달체계 개편 흐름

집권정부	연도	전달체계 개편 흐름
노무현 정부	2003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안)발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포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2004년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채발행승인제 폐지 국고보조금 사업 재편으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2005년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대책 발표(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방양여금 폐지 및 분권교부세 신설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2006년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방행정 개편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1단계 시범사업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국 시군구 시행
이명박 정부	2008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발표
	2009년	보육바우처 사업 시행 민생안정지원대책 발표(시군구민생안정지원추진TF에 사례관리 민간계약직 배치)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2011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발표(복지공무원 확충, 희망복지지원단 추진 등)

집권정부	연도	전달체계 개편 흐름
	2012년	전국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공식 출범
박근혜 정부	2013년	동복지 허브화 전달체계 개편 추진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확정
	2014년	동복지 허브화 기능보강형 개편 고용·복지·문화 등 지역사회서비스 통합전달체계 확산계획(안) 수립

하지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달체계 개편 흐름은 2003년 이후 매우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편 과정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매우 중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 하나의 개편이 추진되어 정착된 이후 그 다음 개편이 모색되거나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하나의 개편이 시행되자마자 다음 또다른 개편이 추진되고, 서로 상반된 방향의 개편이 시차를 두지 않고 추진되기도 한 것이다. 전국단위 개편만 하더라도 2007년 주만생활지원서비스가 전면시행되자마자 2008년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되고, 2012년 전국 희망복지지원단이 공식 출범하자마자 그 다음에 동복지허브화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그 와중에 고용·복지·문화 등 지역사회서비스 통합전달체계 확산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식이다. 또한 한편으로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다가 또다시 전국적으로 일관된 개편이 여러차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그만큼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동시에 그러한 논의가 정부에 일관된 입장으로 정리되어 반영되기 보다는 다양한 입장의 충돌과 갈등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만큼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주요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시도와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떤 쟁점들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전망하고,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이 2000년대 중반 전후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 2.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배경

### 가. 사회서비스의 확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급격한 복지의 확대, 특히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복지 공급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공급확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체계의 문제가 그리 주목받지 않지만 복지공급이 확대되면서는 그 효과성에 관심이 증대되고 그만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현주 외, 2007).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전달체계에 대한 쟁점을 더욱 직접적으로 유발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급여의 내용과 전달과정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현금급여와 달리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전달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효과성이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공급이 빈약한 상황에서는 공공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평성이나 공적 책임성의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지만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수록 이 서비스의 공평성이나 책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전달체계 개편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김용득, 2008).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0년대 중반 전후 시기는 이전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복지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종의 임계지점에 도달한 시기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측면에서 지속적인 확대기조는 이전 정부보다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2004년을 기점으로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경제분야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강혜규, 2008b). 특히 이러한 복지확대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부분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2000~2001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사회보험 관련 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 같은 현금급여보다는 사회서비스 예산의 증가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과 관련 종사자,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강혜규, 2008b; 김용득 2008; 남찬섭, 2009). 그리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사회복지의 중심아젠다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구인회 외, 2009).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욕구의 증가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김용득, 2008; 남찬섭, 2009; 이영범 · 남승연, 2009; 이현주 외, 2007; 정경희 외, 2006). 특히 인구의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욕구의 증가에 전통적으로 감당하던 가족이 축소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그 욕구가 증폭되어 사회적 욕구로 표출되고 있고(김보영, 2013)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의 증가의 양상은 매우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의 경우 그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가족의 규모는 확연하게 줄어 90년대에 3~4인 가구가 주된 가구 구성이었다면 2010년에 들어서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2).

게다가 사회서비스는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 산업영역으로 인식되면서 그 제도적 확대 기조는 더욱 상승효과를 받게 되었다(강혜규, 2008a, 2009; 변재진, 2007; 이인재, 2006). 2006년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사회서비스분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국가 전략 영역으로 선정되었고, 이어서 2007년, 61만여명의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예산 2조 9,315억원 중 사회서비스가 1조 3천억원 규모로 거의 절반가까이 이르렀다(강혜규, 2008).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이 저발전 상태로 성장잠재력이 높고,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중이 19.9%로 스웨덴 38.9%, 미국 35.4% 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고(2003년 기준), 고용유발 효과는 전산업 평균 11.74인데 비해 사회서비스 산업은 17.79, 사회복지사업은 24.02로 매우 크다는 자료는(강혜규, 2009) 정부 정책발표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수치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저소득층, 주부,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로 효과성이 크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강혜규 2009; 이인재, 2006).

#### 나. 복지의 중심의제화

사회복지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영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정책적 중심의제로 부상하면서 이 또한 전달체계 개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사회적 비중이 크지 않았던 때에는 그 효과성에 대해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복지가 확대되



고 그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복지급여와 서비스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에 비해 전달체계의 비효과성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지속적으로 개편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복지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하지만 2008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면서 복지는 주요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뒤이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을 이른바 ‘3+1’ 복지공약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하였고, 이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던 정부여당은 오히려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시행하여 복지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뒤이어 치러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후보들은 앞다투어서 공공보육시설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본인부담 상한선제나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 확대 등의료보장 확대 등 복지확대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세우며 주목을 받았다. 물론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후보 공약집에 복지공약이 빠진 적은 없었지만 그 것이 언론보도와 후보간 토론회에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분명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전술했던 복지의 확대를 추동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반적인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는 전달체계 개편을 추동하는 또다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소득계층을 확대된 5세이하 무상보육지원, 소득하위 70%를 포괄하는 기초(노령)연금, 평균소득 이상의 대상자에게도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는 기존에 취약계층에 제한된 복지의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결과를 낳았다. 기존의 복지가 특히 서비스에 있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해당 욕구를 가진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대상범위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지가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보편적 대상, 즉 모든 주민 누구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복지가 일반적인 주민에게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된 것이다.

복지가 정치사회적인 중심의제가 된 것은 전달체계에 있어 정책적인 수준에서 개편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주민들이 복지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인식의 변화는

전달체계의 일선 현장에서 개편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책적 수준에서의 변화의 압력이 보다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의 나타나는 변화의 압력은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만큼 영속적인 변화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 다. 복지의 분절적 확대

사회적 욕구가 급증하고 또한 복지가 중심의제로 관심이 집중될수록 복지가 확대되지만 그 형태가 분절적으로 나타나면서 전달체계 개편의 압력은 그에 비례하여 증대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복지의 확대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보다는 급증하는 사회적 욕구와 정치사회적인 압력에 의해 다분히 돌발적으로 일어나고(김용득, 2008), 여기에 각 정부부처와 부서, 분야별로 정책독점이 일어나 각자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면서 확장을 추진하면서 복지가 확대될수록 복지의 분절화와 파편화로 인한 중복과 배제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강신옥 외, 2011).

정리하자면 복지가 확대될수록, 복지가 관심의 중심이 될수록 그 효과적인 전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그로인한 복지의 발전이 철저하게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일어나면서 오히려 전달체계의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전달체계 개편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폭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비로서 전달체계 문제가 2000년대 중반에 두각되기 시작된 후 하나의 개편이 시작되자마자 다른 개편안이 꼬리를 물고 중첩되어 전개되는 상황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존 문제의 결과 추진되는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분절적 복지의 확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전달체계 개편의 압력은 다시 증가하여 또다른 개편으로 또다른 대응이 이어지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가령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이 시행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발되고,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던 2006년에서 2010년사이 복지사업의 수는 58.2%가 증가하고 사업 대상자수도 157.6%가 증가하였다(강신옥 외, 2011). 이러한 증가가 모두 파편적으로 증가하여 대상자의 중첩과 배제가 확대되었다고 할 때 그만큼 공평성과 책임성, 비효율성의 문제는 개편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이다. 그 결과 또다시 비슷한 이유로 동복지 허브화와 지역사회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중앙에서부터 17개 부처에서 292개의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만 170개의 사업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신청접수만 162가지, 자격조사는 156개, 급여결정 148개 등에 이르는 수많은 복지급여와 서비스들에 필요한 전달체계 업무들이(관계부처 합동, 2013) 제한된 복지제공 인력으로 공정하고, 책임성있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고질적으로 분절화된 복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분절적인 확대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언제나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지속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 주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과 평가

### 가. 지방분권화: 중앙정부 책임 축소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전국적인 영향이 미친 제도적 변화는 그보다 먼저 추진된 지방분권화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영역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그 재원 역시 지방교부세로 이전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것으로 사회복지 전반은 물론 전달체계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이현주 외, 2007). 2003년 7월 수립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일괄이양법 등 법정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5년에는 기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이 정비되고 지방재정이양을 위해서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었다. 이 때 전체 533개의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138개로 그 비중이 25.9%에 달해 타 부처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중 거의 절반 가까이(67개 사업)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박병현, 2006; 이인재, 2006). 재정적 측면에서도 기초생활급여나 의료급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총 예산 1조 3천 790억원의 예산중 43.2%에 해당하는 5,959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박병현, 2006).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사회복지, 특히 사회서비스에 있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더욱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에 맞게 지방정부가 기획능력을 갖추고 적절한 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었는가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이현주 외, 2007). 사실상 지방이양과정에서 그 주체가 되어야할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책 참여기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못했으며, 이양과정에서 정부간 사무배분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방정부가 분권의 취지에 맞게 기획역량을 갖추었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집행대행 역할이나 서비스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 감독 정도를 해왔을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남찬섭(2009)는 지방정부가 그 전통과 역사에서 사회복지를 주요한 임무로 간주한 적도 없고, 역량을 형성하지도 못했으며, 역량을 형성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된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사회복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할 중앙정부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 감소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박병현, 2008). 실제로 지방재정이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복지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이 보장되지 않았다(구인회 외, 2009). 우선 2005년 분권교부세 규모가 2004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2005년의 신규 사회복지사업 수요는 반영되지 않아 지방이양 첫해부터 7개 시도가 예산확보율 100%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2006년에는 그러한 시도가 12개에 달해 전국 평균 예산확보율이 92.9%로 떨어졌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져 지방이양이전 3년간의 지방비 부담률이 53~54% 수준이었지만 지방이양 이후로는 64~67%로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의 책임감소가 실질적인 재정분담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자율성 보장이라는 지방분권의 본래취지와는 무색하게 지방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는가하면 새로 도입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과도한 지방비 분담요구나 일방적인 사업 집행과 같은 기존의 사업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현되지 못한 지역복지공동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2000년 ‘보건·복지 기능연계 모형연구’를 통해 본격화되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김창기, 200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2001년부터 2년간 실시되었고, 뒤이어 2003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4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서 2005년 8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 법적 근거가 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사회 사회복지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변화를 의미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처음으로 공공과 민간이 수평적인 연계협력 기반으로서 마련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모든 시군구와 시도에서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지역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료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지역사회복지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감정기 외, 2009). 특히 지방분권이 진행되던 중에 이루어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작업은 그만큼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김창기(2007)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은 지방분권화로 인해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의 복지에 있어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설적 구조이자 민간부분과 서비스 소비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확대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체 운영이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여전히 부진한 지역이 적지 않으며 민간복지 주체를 동등한 동반자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여전히 상명하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목적인 바를 의미있게 성취하고 있다는 평가보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질적인 민간과 공공의 수평적 협력이나 이에 기초한 복지사업의 기획이나 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현주 외, 2007).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관계가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는 핵심적인 기

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몇몇 지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계획 수립에 있어 용역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 근거가 되는 복지욕구나 자원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실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조성숙, 2011). 또한 계획의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비전이나 사업이 서로 대동소이하고,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고(이기영 외, 2007), 계획의 체계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주체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여 책임성이 모호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철 외, 2010).

사실상 이러한 경향은 일부 지역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전국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2개의 시군구 중 90% 이상의 시군구에서 외부용역에 위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중 60% 이상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중복 위탁받은 용역기관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안혜영 외, 2011). 중복 위탁 받은 용역기관에 의해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역시 계획서 상 서로 분석의 틀과 기본방향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계획의 충실성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인 계획수립의 경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 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조직변화만 남은 통합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모델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은 복지전달체계를 일반 지방행정과 분리하는 사회복지사무소 모델이었지만 정작 정책화된 것은 지방행정 내에서 포괄적인 주민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모델이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모델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던 2005년 2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기초하여 이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지역주민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에 발표된 복지정책 종합계획인 ‘희망한국21’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방안이 담기게 되었다(이진, 2011). 이후 당시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 개편을 주도하면서 2006년 행정자치부에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이 설치되었고, 같은 해 53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2007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서비스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이 생산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급되는 모든 서비스"로 포괄적으로 잡고(김병국·김필두, 2007: 8) 시군구 본청에는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 등 이른바 8대 서비스에 이르는 광의의 서비스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하고 읍면동 단위에는 주민생활담당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황미경, 2010). 그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는 '통합조사팀'과 '서비스조정·연계팀'을 설치하고 기존의 읍면동 업무 중 상당수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에서는 공공부조 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방문,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였다(김병국·김필두, 2007; 이현주 외, 2007).

기실 사회복지사무소 모델은 행정안전부 영향아래 있는 일반행정 전달체계에서 복지전달체계를 분리하여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무소로 이어지는 일관되고 집중된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지만 이것이 결국 일반행정 전달체계 내에 보다 포괄적으로 주민 서비스를 통합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모델로 귀결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행정안전부의 이해가 복지부의 시도를 누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남찬섭, 2009).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주민 서비스를 규정하고 지방정부 일반행정체계 내에서 통합하려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모델이 더욱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역시 매우 포괄적인 개편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 그 개편의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방정부에서는 지방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져 추진이 지연되는가하면 전면적으로 개편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개편안에 따른 필수적인 조직의 개편작업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진, 2011). 그리고 이러한 개편작업의 결과 목적인 바대로 통합적인 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김용득, 2008; 남찬섭, 2009; 서울복지재단, 2008; 이현주 외, 2007).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의 효과가 미진한 원인에는 이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낮고 목적에 대한 이해 역시 매우 부족했던 것을 들 수가 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김병국.김필두, 2007)에서 시범사업지역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들의 1/3을 조금 넘는 정도(37.7%)만이 약간 공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개편으로 인한 서비스 통합의 효과 역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1/3에도 미치지 못했다(32.0%). 이렇게 개편에 대한 공감정도가 낮다보니 지방정부는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서 개편작업에 임하였고,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서비스나 업무과정에서의 변화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라. 전자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사회서비스 제도화와 경쟁환경의 도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은 직접적인 전달체계 개편은 아니지만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들은 1970년대 이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비영리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었고, 이러한 사업들은 2005년 이후 지방분권화에 의해 지방이양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조금에 의한 민간비영리기관 제공 사업이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방정부 또는 준공공기관으로부터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부여받아 해당되는 서비스를 다수의 비영리기관 또는 영리기관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시행된 것이다(양난주, 2011).

이 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2006년 4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보고에서부터 출발하여 2006년, 기획예산처에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과 같은 전담 추진조직이 구성된 후 2007년부터 보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영범.남승연, 2009). 2007년 5월 노인돌보미 및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시작되었고, 7월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9월에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출산전 진료비지원과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 등이 확대 시행되고, 2009년 7월에는 보육바우처사업이 시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첫해에 411개 사업이 접수되어 178개 사업이 1단계로 선정되어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수백가지의 사업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



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묶어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2007년 1,874억원에서 2012년 8,796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되었고, 제공기관 역시 1,274개소에서 12년 5,699개소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2007명 35만명에서 12년 58만명 수준으로, 제공인력은 3만 6천명 수준에서 6만 7천명 수준으로 역시 상당히 증가하였다<표 2>.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제도 역시 3년만인 2011년에 장기요양시설은 1,271개소에서 3,887개소로 2배, 재가요양기관은 3,763개소에서 19,918개소로 4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이석민, 원시연, 2012). 이러한 증가세는 사회서비스의 대상, 종류, 제공자 등 전 부분에서의 확대를 의미한다.

<표 6-3-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연간 확대 현황

사업 요소	2007년	2012년	증가율
재정	1,874억원	8,796억원	469%
이용자	357천명	580천명	162%
제공기관	1,274개소	5,699개소	447%
제공인력	36천명	67천명	186%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01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물론이고, 노인장기요양제도 역시 서비스 이용욕구가 인정된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함에 따라 그 비용이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작동됨으로써 그 이전에 공급자를 먼저 지정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로 전달체계가 구성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민간 비영리기관에 의존하여 일정한 권한이양과 대행의 관계속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에 대해 공급자가 높은 재량권을 가졌던 기존의 전달체계와 비교하면 오히려 정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을 책임지고, 이용자에게 수급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양난주, 2011).

이러한 기존 전달체계와 새로운 전달체계는 실증적 분석에서 대체관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지역의 환경적, 복지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수요 및 공급 창출, 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 행정적 효율성 등 그 효과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한 결과 226개 기초지자체 중 효과성이 높은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낮고, 인구대비 사회복지 시설 수는 적지만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은 지역 등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이면서 복지재정이나 복지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복지수요나 재정적 여건은 높지만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부터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민간 비영리기관에게 준독점적으로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맡겨왔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다수의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선택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시장방식을 의미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체계 아래에서 급격한 제공기관의 증가는 과잉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영리기관이 참여하다보니 이용자의 경쟁적 확보를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편법이 발생하기도 하고, 허위결제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특히 과당경쟁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는가 하면 대리신청, 허위진술 등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강요도 나타나고 있다(제갈현숙, 2009).

전달체계 개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러한 시장화가 가지는 문제는 기존의 전달체계 개편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전의 지방분권화와 함께 추진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주체들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시장방식의 전달체계에서는 이용자를 두고 서로 다투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서로간의 연계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김종해, 2008). 더 나아가 남찬섭(2009)은 결국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을 직접 통제하게 되는 바우처 방식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구를 지방정부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한 것은 지방이양으로 인해 주도권을 상실한 복지부가 다시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서로 상충된 정책의 방향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방이양된 복지사업과 새롭게 확장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및 장기요양보험은 또다른 분절화를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 마.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 새로운 자원동원 체계 구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이후 다시 복지부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고 이 지원단을 통해 공공과 민간기관을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복지전달체계를 추진하였다. 2008년 9월 희망복지전달체계를 발표하면서 민간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시군구에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민생안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군구에 민생안정지원추진TF를 구성하고 여기에 민간계약직을 평균 4명씩 뽑아 사례관리업무를 맡기도록 하였다(남찬섭, 2009). 뒤이어 2011년 7월에는 총리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 확충과 함께 지자체에 통합사례관리를 전담할 ‘희망나눔지원단’ 설치 계획을 제시하였다(국무총리실, 2011).

2012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지원(시범)사업’이 같은해 12월까지 약 7개월간 수행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그해 5월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하였다. 이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자원 및 방문현 서비스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담 조직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과 빈곤 예방 등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2).

우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를 보면(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2) 수혜자의 만족도의 경우 전체 만족도가 3.88점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재이용 의향이 4.42점으로 높게 나와 희망복지지원단의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있어서는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역시도별 업무평가나 시군구별 평가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도시일수록 업무나 수행인력 역량, 읍면동 관리 등이 우수하게 나타나고, 농어촌지역일수록 낮아 지역의 여건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의 효과성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행정부처의 주도아래 이루어졌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이후

일반행정체계 안에 희망복지지원단을 별도의 민간계약직 인력을 동원하여 구성함으로써 복지부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편이 확대된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적 시도라기 보다는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 범위 내에서 주로 공공부조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을 동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안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시도라는 측면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바.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투자없는 또다른 개편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또다시 추진되었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포함되었고, 그 핵심은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의 허브기관으로 개편하는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였다. 그 구체적인 모형은 기능보강형, 통합형, 거점형, 부분 거점형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이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센터의 통합개편 정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표 6-3-3>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개편모형 비교

구분	기능보강형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개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주민센터 유지 (복지기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 개 동 통합 (일반행정+복지행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 개 동 관할 복지 전달센터 설치 (복지행정만 수행) *복지행정 중 일부업무(예. 사례관리 등)만 수행 모델도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 개 동 관할 복지 전달센터 설치 (복지행정만 수행)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 수행</li> </ul>
개편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폭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폭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폭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폭 개편</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수용성 높음</li> <li>• 인력 확충 : 대폭</li> <li>• 접근성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수용성 낮음</li> <li>• 인력 확충 : 소폭</li> <li>• 접근성 제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수용성 보통</li> <li>• 인력 확충: 보통</li> <li>• 접근성 제약</li> <li>• 일반행정 분리 불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수용성 보통</li> <li>• 인력 확충: 보통</li> <li>• 접근성 제약</li> <li>• 일반행정 분리 불편</li> </ul>

\*자료: 김이배, 김보영(2014: 7)

이 개편안은 이전의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 시군구에 구축된 통합 사례관리기능을 일선 주민센터에 배치하면서 확대시킨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 중심의 지방정부 직접 서비스 형태의 전달체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전달체계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 것으로 평가는 이르겠지만 연구결과들에서 보여지는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개편 모형에 대한 지방정부의 수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편모형을 구체화 시킨 강혜규 외(2013)의 연구에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통합형과 거점형에 대하여 약 70%와 50%의 지방정부 조직부서 담당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약 90%와 70%가 비현실적이라고 응답했다. 기능보강형의 경우 70%가 현실적이라고 하였으나 과반수 정도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진행된 현장조사 인터뷰에 따르면(김이배, 김보영, 2014)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개편안의 다양한 조치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증대 없는 개편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가 어려우며 특히 지방정부의 조직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인 전달체계 개편에서 복지부가 주도하는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더욱이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기도 전에 ‘고용.복지.문화 등 지역사회 통합전달체계 확산계획(안)’이라는 또다른 계획이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어 본 개편안의 지속적 추진 여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 제4절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개혁의 한계

### 1. 주요 전달체계 개편 평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의 확대는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그래서 전달체계의 개편은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을 시작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큰 폭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공통된 방향은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2007년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이른바 8대 서비스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키는 것이었고,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희망e음)은 사회복지급여와 자산조사 정

보를 전산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으며, 2012년과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과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합적 대상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 였다. 하지만 그 통합의 성과는 미비하거나 제한적이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8대 서비스를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거대 부서를 탄생시켰지만 그로 인한 통합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김용득, 2008; 남찬섭, 2009; 서울복지재단, 2008; 이현주 외, 2007). 행정부서를 하나로 모아놓는 수준에 그쳐 서로 다른 부서의 이름아래 하던 일을 하나의 부서 이름 아래 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 다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보통합을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업무효율화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공공부조 대상자 선별을 위한 전산정보 통합에 초점이 있다 보니 이로인하여 부양의무자 정보나 자산 정보가 드러나 대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벌어졌었다.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서 도입되었던 통합사례관리는 적어도 제도화되고 보편화된 사회서비스와는 관련이 적었다. 여기에서의 통합이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 자원을 공공에서 끌어들여와 제공한다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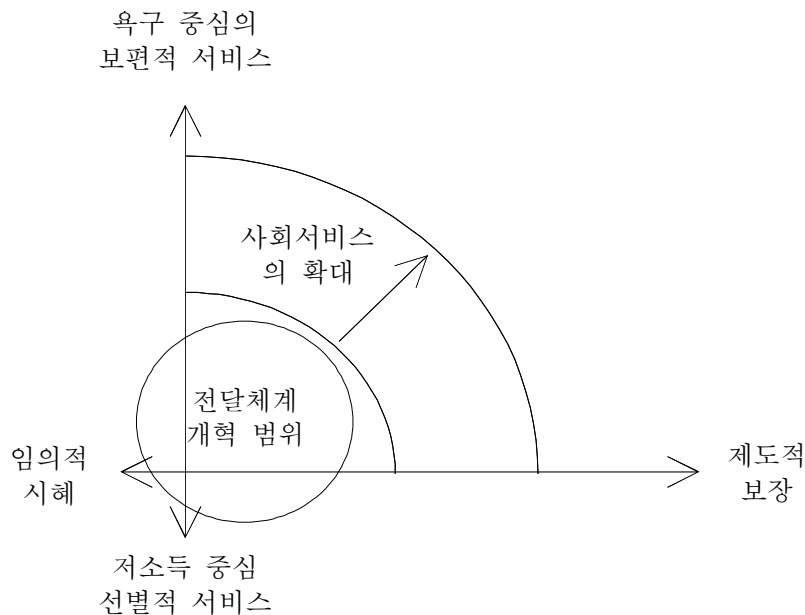
연도	전달체계 개편	주요 내용
200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시군구 본청에서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 등 8대 서비스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 주민생활지원국에 통합조사팀과 서비스조정·연계팀을 설치하고 읍면동 업무 이관
2010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사회복지급여 정보 및 자산조사 정보 등 전산정보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화 추진
2012	전국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민관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2015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행정의 허브로 중심기능을 전환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통합사례관리를 제공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공유

## 2. 전달체계 개혁의 한계

이러한 전달체계 개편에서 더욱 분명한 한계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보편화를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다양한 제공자간 제공자와 이용자간 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더욱 전달체계의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정작 전달체계의 개혁은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를 포함하지 않고 여전히 임의적이고 선별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여전히 선별적인 공공부조 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통합 사례관리도 사실상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민간자원을 끌어다가 지원하는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자원에 의존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원의 가용여부에 따라 임의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서는 이러한 임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민관과 협력한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공유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별적 대상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민간자원을 통해 하는 것을 더욱 체계화시킨 것이다.

<그림 2>에서 도식화 한 것처럼 지역사회서비스는 보다 제도화되고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 개혁은 여전히 임의적이고 저소득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 범주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 중심의 보편성이 전달체계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의 분절적인 확대에도 있지만 전달체계를 통해서도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분야를 보면 일정 등급 이상이 받게 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외 대상자가 받게 되는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등이 각기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다보니 대상자와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에 따라 희비가 갈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한번 등급을 받은 노인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오히려 가족이 바라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상태의 호전은 등급탈락을 의미하고 등급 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가 그 욕구를 제대로 감당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제도에 따라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 그 전반적인 돌봄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급판정과 장

<그림 6-4-1> 사회서비스 확대와 전달체계 개혁의 한계



애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장구지원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분절되어 있다보니 장애를 입은 대상자나 가족이 적절한 지원과 보장을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거나 책임지는 주체는 없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나 보편화는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통합적으로 욕구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없으면 그러한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노인돌봄에서 욕구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알아서 서비스를 설계해 주기 보다는 요령있게 등급받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공공연한 상식이다. 많은 바우처 서비스도 정보를 미리 알고 조건에 맞게 서류를 갖추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다. 제도화와 보편화가 진전되었어도 과거의 임의성에서 달라진 것은 대상이 보편화되었다는 것 이외에 이용자의 능동성에 따라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욕구가 더 높을수록 능동성은 떨어질 수 있으니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주어지기 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시장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자의 자격부여를 여전히 공



공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것은 시장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전달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5절 소결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확대가 제도적 보장성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확대의 효과는 반감되고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보다는 정보력에 의해 배분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부터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 공단과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를 것이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보아 사회서비스 공단은 시장체계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공공 공급자와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정책이고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공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공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조직을 더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하여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전달체계 상에서는 또 다른 조직이 추가되고 또 다른 제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필요한 공공 전달체계 개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전달체계 개혁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국정자문위원회, 2017: 44)이고 이 것은 최근 청와대에서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이라면서 발표된 “공공서비스 플랫폼”(청와대, 2017)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내용에는 행정혁신, 복지혁신, 직접민주주의, 마을생태계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공공 복지전달체계와 관계된 ‘복지혁신’을 보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미 지난 기회에 공공보다는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혼동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침해 등 윤리적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보영, 2017a). 이를 기존의 전달체계 개혁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제도화되고 보편화된 사회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지 않은 기존의 전달체계의 한계를 답

습하는 정도를 넘어서 증원된 복지인력을 ‘복지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대상자 발굴에 집중 투입하고 ‘복지생태계’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 동원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그 내용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 공단을 통해서 공공 공급자가 확대되어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과당경쟁이 완화된다고 해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해도 욕구중심으로 제도적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고 여전히 요령에 의한 등급판정이나 정보력에 의한 수혜여부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도적 효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정위기론이나 퍼주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론의 역풍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 소득보장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와 더불어 전달체계를 통해 욕구에 따른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전달체계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아직 임의적이고 시혜적인 선별적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10년의 발전을 이어가면서 기존의 정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장체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 중심의 보편성을 지역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개혁이야말로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진희. (2017). 법 탄생에서 제도가 발전하기까지 주요 이슈를 통해 본 시사점, 『계간 의료정책포럼』 15(2).
- 김찬우.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방안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23(2):121~144.
- 노인장기요양기획단,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제1차 보고서. 보건복지부.
- 윤현숙. (200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14(1):119-134.
- 양난주 (2013)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은 왜 요양보호사가 되었나?, 『한국사회정책』 20(2):97-129.
- 양난주 (2014) 한국의 사회서비스: 민간의존적 공급의 한계와 과제, 『동향과 전망』 92:93-128.
- 보건복지부 (2017) 2017 주요업무 참고자료
- 보건사회부 (1971) 보건사회행정의 실적과 전망: 보건사회행정백서. 보건사회부.
- 석재은, 박소정, 권현정, 최선희. (2016)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편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복지학회.
- 석재은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방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주최 <노인장기요양 정책토론회> 발표문. 2017. 4. 12.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선우덕 외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우덕, 강희정, 박은자, 전진아, 전승훈, 김성태, 노용균, 박금령, 이선희(2016) 사회보장제도 노인건강분야 기본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강은나, 박세경, 이윤경, 김세진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재 (2015) 노인복지, 보건복지부편, 보건복지 70년사. 제6장.
- 감정기, 2007, "사회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 강혜규, 2008, "사회서비스 확대정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상황과 복지』 25, 67-98.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김보영, 2007, "영국", 강혜규·김형용·박세경·최현수·김은지·최은영·황덕순·김보영·박수지, 『사회

- 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183-220.
- 김보영, 2016,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 사회복지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적 모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37-62.
- 김보영, 2017a, “무엇을 위한 ‘찾동’인가”, 『복지동향』 224, 52-59.
- 김보영, 2017b,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복지동향』 227.
- 김용득, 2008,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사회복지연구, 36, 5-28.
- 김종해, 2008,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 학술대회』
- 남찬섭, 2009,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변화의 함의와 전망-지방이양, 바우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고찰”, 『상황과 복지』 28, 7-49.
- 남찬섭, 201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개념적 긴장”, 『한국사회복지학』 64(3), 79-100.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 안전행정부, 2014, 『2014년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 양난주, 201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보조금과 바우처방식의 검토”, 『사회복지정책』, 38(3), 191-219.
- 이혜경, 1998,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10, 41-75.
- 청와대, 2017,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언론브리핑』, 8월 17일자.
- 김동기, 2015, “지역사회중심의 전달체계 개편방안.”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8차 포럼 자료집, 3-20.
- 김미옥, 2015, “지역사회중심의 거주시설 개편방안.”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4차 포럼 자료집, 3-28.
- 김영종, 201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책에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방향”. 보건사회연구, 32(2): 41-76.
- 김용득, 2016,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사회서비스연구, 6(2): 1-28.
- 김용득·유석영·이동석·이선우·이희경·이미연, 2013,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모형 개발. 경기복지재단.
- 김은정, 2014, “사회서비스 재정이 지방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지방정부연구, 18(1):

- 219-241.
- 김진우. 2015. “발달장애인지원법 시행의 의의와 전망.”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9차 포럼 자료집, 3-24.
- 김형용. 2013.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와 사회복지관.” 한국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169-195.
- 남세현. 2015.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정책.”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7차 포럼 자료집, 3-21.
- 박경수. 2015. “지역사회 중심의 고용 및 직업재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6차 포럼 자료집, 3-28.
- 이진희. 2015. “발달장애인 일반고용모델: 장애인고용정책과 사회적 기업의 결합.”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6차 포럼 자료집, 31-40.
- 성명진. 2015.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동지원: 토론문.”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2차 포럼 자료집, 41-46.
- 유연희. 2015.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3차 포럼 자료집, 19-27.
- 은종균. 2015.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토론.”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3차 포럼 자료집, 67-70.
- 이동석. 2015.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지원: 영국의 개인예산제도를 중심으로.”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9차 포럼 자료집, 27-39.
- 이채식. 2015.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5차 포럼 자료집, 3-21.
- 조한진. 2015.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3차 포럼 자료집, 3-16.
- 최복천. 2015.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동지원.” 2015년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정책 2차 포럼 자료집, 3-22.
- Hudson, J., S. Kühner, & S. Lowe, 2008, The Short guide to social policy, Bristol: The Policy Press
- Marshall, T. H. (1970), “The role of social services”, In W. A. Robson & B. Crick (Eds.), The future of the social services, Middlesex: Penguin Books.
- Parker, R. A. (1970), “The future of the personal social services”, In W. A. Robson & B. Crick (Eds.), The future of the social services, Middlesex: Penguin Books.
- Political and Economic Planning, (1961), Family needs and the social servic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Seebohm Committee(1968), Report of the committee on local authority and allied personal social services, Cmnd. 3703.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Webb, A., & Wistow, G.(1987), Social work, social care and social planning: the personal social services since Seebohm, London: Longman.